국제개발협력동향

2006년 제1호

한국국제협력단

‖목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Ⅰ. 논단

1. 해외재난 긴급구호시스템 구축 방안 ····· 7
박강호 _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2. 국제 ODA의 변화와 남북교류협력 : 국제 NGO의 역할 ····· 13
길병옥 _ 충남대 교수
라미경 _ 순천향대 연구교수

Ⅱ. 개발협력동향

1. OECD/DAC 및 국제기구 원조동향
– OECD/DAC 수원국리스트 ····· 31
– DAC 상주대표회의 결과 ····· 34
– 제 5차 ODA 평가 도쿄 워크샵 결과 ····· 38

2. 공여국 원조동향
– 인도양 쓰나미 피해국에 대한 일본의 ODA 지원관련 중간평가 ····· 41
–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에 대한 검토의견 ····· 44
– 일본의 ODA동향 : 총리직할 원조청 설립논의 ····· 47
– 일본의 ODA동향 : ODA일원화 최종 보고서 제출 ····· 49
– GTZ 대 페루 협력현황 ····· 52

3. 수원국 원조동향
– 제 8차 캄보디아 원조 공여국 회의 ····· 54
– 부룬디 원조 회의 ····· 60
– 조류 인플루엔자 및 각국의 지원 동향 ····· 62
– 스리랑카 원조동향 보고 : 2005년 12월/2006년 1월 ····· 64
– 스리랑카 정국동향 ····· 73

Ⅲ. 기타

1. 지역연구 ····· 77
– 방글라데시의 경제현황 및 빈곤경감전략(PRSP)
이정욱 _ KOICA 방글라데시 사무소장

2. 개발협력 관련 국제기구 소개 ····· 118
– 유엔아동기금 (UNICEF)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아동개발기구
박동은 _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3. 개발NGO 소개 ····· 132
–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소개
강용상 _ 한국해비타트 사업관리팀장

Ⅰ. 논　　단

1. 해외재난 긴급구호시스템 구축 방안

2. 국제 ODA의 변화와 남북교류협력

해외재난 긴급구호시스템 구축 방안

박 강 호 /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Ⅰ. 머리말

2004년 12월말 발생한 남아시아 지진해일과 2005년 10월에 발생한 파키스탄 지진 등 대규모의 해외재난으로 인하여 관련 국가들이 막대한 인적 · 물적 피해를 입었으며, 세계 각국은 긴급 구호 및 재건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일체가 되어 피해 국민들을 돕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해 구조 · 의료팀을 구성하여 선발대를 파견하고, 후속 지원 본대를 파견하는 등 긴급재난에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피해 발생 4~5일 경과 후 피해 현장에 우리 구조대가 도착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생존자 구출이 곤란했었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대규모 해외재난 긴급구호를 담당하는 총괄기관이 없어 대형 해외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대처함으로 인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현행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예산에 300만 불 규모의 "해외재난구호금"이 책정되어 있으나, 수천만 불 규모의 해외재난 지원수요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이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우리나라도 해외재난 발생 당일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재난 긴급구호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외재난 긴급구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근에 종합적인 해외재난 긴급구호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해외재난 긴급구호시스템 구축 방안의 중심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구축 방안의 주요 내용

1. 해외재난 긴급구호시스템의 요건

가. 신속성

해외재난은 발생 즉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구호를 담당할 책임 있는 기관을 정하는 한편, 구호장비 · 물품의 비축, 구호요원의 교육 · 훈련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난발생으로부터 72시간내에 재난현장 도착 및 구호활동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호활동의 효과가 급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아가, 해외재난 발생시 긴급구호의 제공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전문성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구조 · 의료 관련 기술은 일반적인 구조 · 의료기술과는 상이한 면이 많으며, 따라서 해외재난 긴급구조에 참여하는 구조대원 또는 의료요원은 이러한 특성에 맞는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난지역에는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구호대 및 World Vision 등 NGO가 파견한 구호대가 있으며, 효율적인 재난구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른 나라 및 NGO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재난 긴급구호 총괄기관이 평소에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 NGO와의 협력 및 민간참여 장려

NGO중에는 해외재난 긴급구호에 대하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곳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동원할 수 없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해외 재난구호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NGO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우리 국민도 국가위상에 부합하는 해외재난 긴급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의 해외재난 긴급구호 제공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2. 구축 방향

가. 총괄기관의 지정

외교통상부를 해외재난 긴급구호에 관한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 ·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물자비축 및 구호인력의 교육 · 훈련을 실시한다. 단, 해외재난의 규모가 매우 커서 범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 · 관 · 군 합동긴급재난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처한다.

나. 예산의 확보

KOICA 예산중 해외재난 구호금을 대폭 증액하여 500~1,000만불 수준으로 확충하고, 해외재난 발생시 초기 긴급 지원 용도로 활용한다. 상기 초기대응 후 재난의 규모와 성격이 보다 정확히 파악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원 추진한다.

다. 전문인력의 확보

KOICA가 소방방재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대병원 등 전문기관과 업무약정을 체결하여 각 기관의 인력 pool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발, 상시 유지한다. 상기와 병행하여 독자적 혹은 재난구호 관련 국제기구 및 NGO 등과 연계하여 구호요원 등 인력에 대한 교육 · 훈련을 실시한다.

라. "해외재난긴급구호에관한규정(안)" 제정

이상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시스템의 근거규정으로서 "해외재난긴급구호에관한규정(안)"(가칭)을 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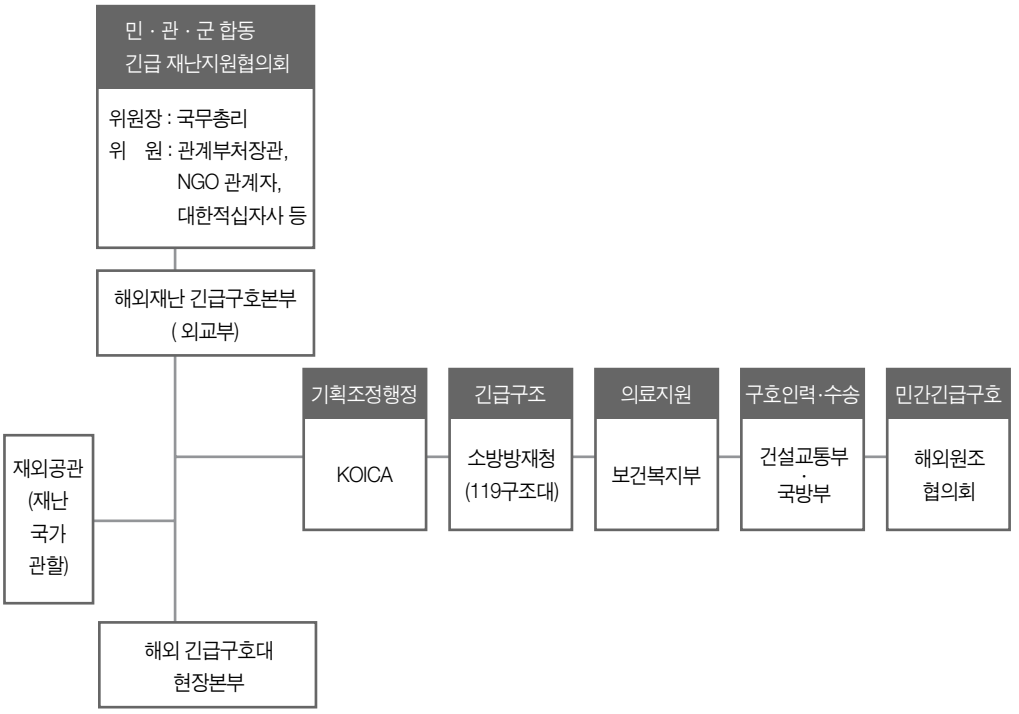
3. 해외재난 긴급구호시스템 구축 방안

가. 해외재난 긴급구호시스템 종합관리체계 구축

1) 신속한 결정을 위한 메카니즘 구축

해외재난의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판단 및 결정으로 현금 · 물자지원 · 구호대 파견 등 재난구호를 제공(재난발생 72시간 이내 현장 구호활동 지원 개시 추진)한다. 그러나 대규모 재난인 경우에는 총리 주재 민 · 관 · 군 합동 긴급재난지원 협의회에서 지원의 규모 및 내용을 결정한다. 재난초기 긴급지

〈 해외재난 긴급구호종합관리 체계 〉



원 및 소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KOICA의 주관 하에 구호요원 · 장비 · 물자 등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KOICA의 주관 하에, 소방방재청(구조지원), 보건복지부 · 서울대병원(의료지원) 및 해외원조단체협의회(일반구호) 등을 통하여 인력 · 장비 · 물자 등 지원한다.

※ 초기 발표기준 사망자 1,000명 이상 재난을 대형재난으로 분류, 1,000명 이하 소형재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외교부가 지원여부 · 지원규모 · 지원형태 등 결정

외교통상부에 구성되는 해외재난 긴급구호본부(본부장:제2차관)는 초기 해외재난의 규모 · 성격에 대한 1차 판단 및 민 · 관 · 군협의회에 상정여부 결정, 민 · 관 · 군협의회 안건 준비 및 결정사항 집행,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 관련 실무 총괄 및 조정,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 결과의 정리 및 보고를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민 · 관 · 군 합동긴급재난지원 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대한적십자사총재, 기타 관련 민간단체의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동 협의회는 재난구호의 제공여부 · 방식 · 규모 및 정부 관계기관간 협조방안을 결정한다.

2) 시행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해외재난 긴급구호시행 기관간 네트워크 추진과 관련하여 해외재난 긴급구호의 주 시행기관인 KOICA를 중심으로 횡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구조부분(소방방재청) 및 의료부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립병원 등)의 전문기관과 평시에 횡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운영한다. NGO들의 해외재난 긴급구호 참여수요를 감안하고 그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NGO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KOICA는 협력 네트워크상의 기관 및 인력 등과 역할분담 및 협조방안을 마련하고, KOICA-네트워크 구성기관간 "업무협조약정" 체결 후 실무협조체계를 운영한다. 해외재난 긴급구호업무수행의

〈 관계기관 소관사항 〉

담당기관	시행기관	소관사항	비 고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국제119구조대	- 긴급구조팀 선발 및 구성	
보건복지부	서울대병원, 한국건강보험공단 등	- 의료지원팀 선발 및 구성	
건설교통부	-	- 민간수송수단 지원 협조	
국 방 부	합동참모본부 / 각군	- 구호물품 · 요원, 구조물품 · 장비의 수송을 위한 군 항공기 · 수송선 제공	민간수송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시 검토
기획예산처	-	- 해외재난긴급구호 특별예산 (예비비) 배정	
국가정보원	-	- 재난지역내 치안사정 등 정보제공	
외 교 부	KOICA	- 구조팀 및 의료팀 파견 관련 행정사항 조치 - 현지 현장 구호본부 설치 및 재난지원 업무 수행등	

통일성 ·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KOICA가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적 실무조정역할을 수행하며, KOICA는 해외재난 긴급구호본부가 수립한 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지침을 네트워크 소속기관 및 인력에 확산 · 시행한다(긴급구조반 · 의료지원반 · 긴급물자반 · 물자수송반 등).

3) 신속한 물자 · 인력의 동원 및 수송체계 구축

신속한 물자 · 인력의 동원 및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방재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대병원 등에 구호요원 pool을 구성, 항시 동원 가능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민간항공사와 사전협조를 통한 전세기 동원 방안 · 항공료할인 방안 등을 수립하고, 국방부와 협조하에 군수송기 · 수송선의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구호요원 pool의 구조 · 의료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 훈련을 실시한다.

나. 신속한 예산지원

현행 300만불 규모의 KOICA 해외재난구호 예산을 점진적으로 500~1,000만불 수준으로 증액, 재난 초기의 신속한 현금 · 물품 지원 및 구조대 파견 등에 활용한다. 이후 해외재난의 규모 및 성격이 파악되어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어 민 · 관 · 군 합동긴급재난지원 협의회에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 해외재난긴급구호단체의 참여 촉진

효율적인 해외재난 긴급구호를 위해 NGO가 보유한 지식 ·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한다. 해외재난 긴급구호 관련 NGO에 대한 교육 · 훈련 기회 제공, 재난구호 참여시 비용을 지원한다.

라. 관련규정 제정

"해외재난 긴급구호에관한규정"(가칭)을 별도 제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 추진한다. 이 규정은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재난의 피해국에 구호물품의 제공, 구호대 · 구조대의 파견, 복구의 지원 등 긴급구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해외재난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연루되지 않은 대규모 해외재난에 대한 인도적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지원은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Ⅲ. 향후 과제

1. 군인력 파견

외국에서는 신속, 효과적인 구조 및 구호활동을 위해 군인력 및 장비를 동시에 파견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의 경우 군병력 파견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현실적 제약이 있으므로 전투 목적이 아닌 해외긴급 재난시 구조활동을 위한 군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절차 간소화 방

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평화유지(PKO) 목적의 국군파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제안되어 있는데 동 법안이 제정된다면 해외긴급 재난시 구조활동을 위한 신속한 군인력 파견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긴급구호 장비의 선진화

긴급구호 활동시 구조팀의 경우, 우리나라의 구조장비 및 구조복이 외국 구호단체들에 비해 질적인 면이나 효용성에서 현저히 떨어진다. 의료팀의 경우, 외국은 발전기, 에어텐트 등을 직접 본국으로부터 수송하고 동기자재를 설치하여, 심각한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팀은 충분한 의료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장비 및 수술환경이 마땅치 않아 긴급 환자들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용한 고급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긴급구호장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또한 에어텐트, 발전기 등의 기자재 수송은 민간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 국가차원에서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사전교육, 훈련

인력 동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호요원의 pool을 통하여 확보한 구조 · 의료 인력에 대하여 사전 교육 ·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재난이 발생한 현지 문화의 파악도 중요하다. 이러한 구조 · 의료 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 훈련실시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유엔 및 국제구호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긴급구호훈련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우리 실정에 맞는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Ⅳ. 맺음말

2004년말 발생한 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 및 2005년 10월에 발생한 파키스탄 지진 등 대규모 해외재난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관련 국가들이 막대한 인적 · 물적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산업화 · 도시집중화로 인한 대형사고, 교통의 발달에 따른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 종족간 · 지역간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한 재난 · 재해가 연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대부분 해외재난 구호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국에 대하여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한편, 우호적인 국가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해외재난 구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도주의 실현에 동참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며,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금번 해외재난 긴급구호시스템 구축방안 마련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재난구호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 ODA의 변화와 남북교류협력: 국제 NGO의 역할[1)]

길 병 옥 / 충남대 교수 · **라 미 경** / 순천향대 연구교수

I. 국제 ODA 동향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들은 국제평화, 경제적 공동번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저개발 국가들에게 저리의 차관이나 무 · 유상 원조 등의 방법으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를 제공해옴.

– 하지만 대다수의 원조공여국들은 해외원조의 실행과 방법 면에서 자국이익 우선주의를 고수하여 왔고, 원조의 우선순위와 정책결정면에 있어서도 비합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옴.

– 최근 최빈국에 대한 원조의 유형이나 방법 그리고 원조의 타이드/언타이드 비중 및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경제적 구호 및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조공여를 위해 DAC는 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증액하도록 권고함.

■ 해외원조와 관련하여 세계경제상의 구조적 틀을 보면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아직 절대빈곤의 상태에 있는 상황임.

–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핍박이나 경제적 궁핍 또는 종교적 박해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문제, 민족내란, 사회경제적 혼란, 종교전쟁 및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재난재해로 "국경탈출"은 매년 그 수와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약 60억의 세계인구 중 10억 이상이

1)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국제개발협력동향』및『국제협력연보』; 통일부,『통일백서』; OEC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와 매년 각 국가별로 보고되는 *DAC Peer Review;* 그리고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등에서 요약 · 정리하였음.

절대적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고 또 다른 10억의 인구는 최소한의 생계만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세계경제질서가 국제화 및 세계화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와 가장 가난한 국가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심화되어 전 세계 인구의 약 80%는 중·저소득국가 군으로 분류되고 있고 그들 국가들은 전 세계 국민총생산의 20% 미만만을 산출해 내고 있음.

■ 2000년 제56차 유엔총회에서 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가 해외원조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채택되었고, MDGs의 8개 목표는 빈곤퇴치, 보편적 초등교육달성, 양성평등, 아동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HIV/AIDS 등 질병퇴치,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개발을 위한 전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임.

■ MDGs 이행을 위한 2005년 파리선언은

- 첫째, 수원국은 건실한 개발정책을 정의하고 개발행동을 조정해야 하며,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의제와 일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원국 시스템의 활용을 강화해야 함.
- 둘째, 수원국은 공여국의 지원을 통해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공적자금운영 능력을 강화하며, 건실한 조달시스템 구축과 함께 공여국의 수원국에 대한 언타이드 원조가 확대되어야 함.
- 셋째, 공여국간 원조를 조정하고 원조절차를 간소화하며 성과가 큰 분야 또는 사업으로 원조를 집중하고, 공여국간 상호 보완성과 협력 및 정보공유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함.
- 넷째, 취약국가에 대한 공여국간 원조의 조화가 실시되어야 하며, 분야별, 국가별 건실한 환경영향평가실시, 성과중심의 원조결과 관리체계 구축 및 개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등이 포함됨.

■ 해외원조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사항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유용성,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 등 방법상의 문제, 원조공여국과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한 원조 행위자들의 관계, 원조의 규모, 성격 내지는 원조수여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능력 등임.

-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전 세계 국제원조의 22%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국제원조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시장경제 구축 및 미국의 무역환경 개선으로 압축되지만 실질적인 원조는 대부분 안보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 국제원조 2위국인 일본은 자국의 무역·투자를 위한 잠재적 시장에 원조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국제원조 3위인 프랑스는 1998년 국제원조체제를 전면 개편, 국제원조를 국익에 직결시킨 법률안을 수립하였으며, 국제원조의 제공목적에 따라 우선연대국가군(ZSP·Priority Zone of Solidarity)과 경제파트너국가군(ZPE·Economic Partnership Zone)

으로 구분하고 무 · 유상 원조국 기준을 마련하여 원조를 실행하고 있음.

■ 아직 선진국의 대열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한 한국의 경우는 위와 같은 논점에 대한 명확한 국가적 입장을 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원조의 방향, 범위 및 규모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그동안 빈곤, 질병, 환경오염 등 지구촌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위해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창설하고,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립하면서 국제원조를 시행해옴.
- 또한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한국의 해외원조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그동안 등한시되어온 대북교류협력사업 부분인 관계로 해외원조를 남북협력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발굴해야 함.
- 따라서 해외원조 정책의 보다 광범위한 역할수행과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원조정책의 수립과 향후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II. 국제 ODA의 패러다임

■ 해외원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탈냉전이후 원조공여국과 수원국의 대외정책에서 그들 국가의 광범위한 역할과 원조 프로그램간의 실증적 연계점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옴.

- 하지만, 해외원조에 대한 여러 상충된 견해로 인하여 국제정치상 선진국들의 적절한 역할이나 책임에 대하여 규범상의 일치 또한 이루지 못한 상태임.
- 1990년대 중반이후, 국제정치체제에서의 냉전해소와 저개발국가에 대한 사회, 정치 및 경제개발을 증진시킨다는 해외원조의 기능에 관한 일체감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규범적 논쟁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분석적인 측면에서 해외원조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일반적 분류는 크게 현실주의(realism), 이상주의(idealism) 및 구조주의(structuralism)로 나누어질 수 있음.

1. 현실주의 패러다임

■ 현실주의 패러다임은 국제관계를 경쟁과 투쟁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홉스의 논리를 근거로 하여 국제관계에서 해외원조는 필요에 의한 국가이기주의의 한 기능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 존재이유(raison d'etat)는 자국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외교운영의 도구에 있다는 시각임.

-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해외원조는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국가간의 호혜성의 원칙을 이행하는 자원의 전이가 아니고 수원국의 경제개발과 사회안정보다는 원조공여국의 정치적 영향력, 군사안보, 무역문제 및 해외투자를 증대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한 면에서 그 의미가 있음.
- 현실주의 학자들은 원조자금을 경제발전자금으로 효과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원조수원국들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이러한 견해의 바탕 논리는 원조수원국들이 장기적으로 공여국들의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할 가능성과 수원국이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양도성 원조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있고, 이는 원조공여국의 관점에서 투자수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임.

2. 이상주의 패러다임

■ 이상주의 패러다임은 국가간의 경쟁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해외원조는 반대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이행될 해외원조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펴고 있음.

- 이상주의자들은 냉정한 경쟁관계에 기초한 국제관계의 이해는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부상하고 있는 세계화 시대를 고려치 않은 소치라 여기고 해외원조는 원조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역설함.
-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이상주의자들의 비난은 원조의 합법성 여부보다 이를 실행하는데 더욱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해외원조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수원국내의 소수 지배계층의 부정축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저개발 국가들이 겪고 있는 빈곤과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타자주의적인 원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상주의의 시각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연합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원조의 질적인 면의 향상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해외원조는 국가간의 정치적 성향의 배제라는 면에서 다국간 원조가 국가간의 양자적 원조보다 중시되어야 하고, 무상원조가 저금리의 차관보다 적절하다고 봄.

3. 구조주의 패러다임

■ 구조주의 이론가들은 해외원조가 자본주의의 지배체제 하에서 저개발 국가들의 종속을 제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선진국과 저개발국가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 세계체제이론을 근거로 원조공여국들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재원의 통제를 바탕으로 저개발 국가들을 종속시킬 수 있고, 그들의 경제발전단계 및 수준을 제어하고 있다고

주장함.

- 구조주의 이론가들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하는 원조공여국이나 국제기구마저도 경우에 따라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공여국의 이익을 위하여 원조를 삭감하거나 연장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의 공적개발원조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원조공여국의 역량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
- 국제기구는 경제재화의 분배가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북반구의 부유국으로부터 남반구의 빈민국으로 재분배되도록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구조주의 이론가들은 세계경제체제의 불공정성을 악화시키는 원조공여국과 수원국의 종속적 관계와 수원국내에서 일부 엘리트층의 정치, 경제적 헤게모니는 없어져야 한다고 역설함.

■ 해외원조에 대한 이론적 논란의 범주가 최근 점점 확대되고는 있지만 한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경제적 안정과 성장의 부재 속에서 정부는 효과적으로 국가를 통치해 나가기 어렵고 정치적 혼란상태에서는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어렵다는 점임.

- 공적개발원조도 그 실행 면에서 원조수원국의 법령개정, 행정관료 육성 및 정부청사의 구축과 같은 정치적인 요소와 생필품, 비료 및 동력발전기 등의 제공과 같은 경제적인 요소 모두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공적개발원조 공여국들은 원조의 두 가지 측면, 즉 저개발 국가들의 정치발전과 경제성장, 모두에 공헌할 수 있는 원조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옴.
- 현실주의, 이상주의 그리고 구조주의 이론가들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원조를 통한 정치발전과 경제개발의 상호연관성을 제기하는데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문제는 원조공여국들이 해외원조를 실행하는데 있어 원조의 방법과 중점 고려사항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DAC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에서 나타나는 주요 정책방안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III. 원조공여국의 ODA 분석

■ 원조공여국들의 원조형태를 분석하는 자료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 원조제공의 방향과 기능적인 배분, 원조체제에 의해 판단된 원조의 질적 평가, 그리고 원조공여국의 대외정책상 국익과의 연관성 등임.

-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개발원조와 더불어 최근에는 국제원조사업에서 개발NGO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원조공여국들이 이행해온 공적개발원조상 원조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를 종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1. 미국의 ODA 정책

■ 미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일반적으로 안보 및 외교적 패권주의의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자유민주주의의 추구, 국제테러 등 외부위협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자본주의 세계의 결속, 미국의 체제적인 우월성 및 패권의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미국의 ODA는 다국간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원조(multilateral assistance)보다는 국가 간의 양자적 지원(bilateral assistance)이 주를 이루고 시대나 상황에 따라 현실주의(공화당 정부의 경우)와 이상주의(민주당 정부의 경우)의 시각을 반영하여 원조를 제공해 옴.
- OECD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20여년간 미국의 국민총생산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P) 비율은 평균 0.20% 정도였고,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의 약 60% 이상이 중동지역이나 북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보아 대테러국제연대의 흐름과 국제체제적 동향이 큰 변수로 작용하여 왔음.
- 미국의 2002년도 ODA 규모는 132억불이었고 이는 전체 DAC 회원국 총액의 22.8%로서 총액기준으로 DAC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지만, GNI 비중으로는 가장 낮다는 국제적 지적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2004~2006년 중에 50억 달러 규모의 원조예산을 증액시키는 천년개발기금(Millenium Challenge Account)을 설립하여 향후 미국 공적개발원조 총액을 50% 증액시킬 것을 천명함.
- 미국 내의 개발NGO는 사회복지분야에 카네기재단, 세이지재단, 록펠러재단과 같은 박애재단이 있고 대학, 병원 등 전문기관이 1,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인본주의와 선교정신에 입각하여 긴급구호, 난민지원 등에 주력하였으나 최근에는 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
- 미국에는 400여개의 협동조합, 신용조합, 노동단체, 민간단체, 비영리종교단체, 국제개발기구 등이 활동하고 있는데 CARE, Catholic Relief Services, World Vision, Save the Children Fund, Childreach, United Israel Appeal, 국제교육연구소 등이 대표적인 단체임.

2. 일본의 ODA 정책

■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 증진이 주된 정책적 관심 사안으로 목표는 크게 경제적 활력의 부흥, 외부의 지원을 배제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태평양 연안에서의 지역적인 경제통합의 추구, 일본 경제성장의 표본화, 그리고 미국과의 군사안보 동맹체제 유지가 있음.

- OECD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20여년간 일본의 국민총생산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P) 비율은 약 0.23~0.32%이었고, 주요 원조의 동인은 저개발 국가들의 교통

및 통신 네트워크의 건설, 항만 및 파이프라인 건설, 발전소 건립 등 경제적 기간산업의 육성에 있음.

- 일본 정부는 ODA 헌장을 2003년에 개정하였는데 이는 MDGs를 반영한 결과이고 동 헌장에 따르면, 일본 ODA 목적은 "국제사회의 개발과 평화에 기여하고 일본의 안보와 번영에의 기여"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강화에 목적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일본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최근들어 구조조정을 거쳐 왔고, 2003년에는 일본국제협력단(JICA)의 지위를 독자적으로 변경하였으며, 1999년 일본수출입은행(JEXIM)과 해외경제협력기금은 일본국제협력은행으로 합병되었음.
- 일본의 개발NGO의 출현은 구미 각국보다 훨씬 늦게, 전혀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일본에서 NGO로 지칭되는 많은 단체들은 준국영단체이거나 정부나 기업이 설립한 단체들임.
- 일본에는 400여개 이상의 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국내의 복지, 문화, 연구사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개도국의 연구사업, 문화보존, 개발협력도 지원하고 있고 대표적인 NGO로는 아시아의사연락협의회 일본지부, 가족계획국제협력재단, UN지원교류재단, 일본청년회의소 등이 있음.

3. 프랑스의 ODA 정책

■ 프랑스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문화적 패권주의의 시각에 바탕을 두고 그동안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를 연결 짓는 교량역할을 수행하고자 원조를 제공해 왔으나, 프랑스 문화권이나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며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국제적 조정자로서 다른 국가들과 경제 및 외교관계를 강화시키고자 하였음.

- 프랑스 정부는 2000년 MDGs가 UN 총회에서 비준된 후 개발협력의 목표를 개도국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 대통령이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UN 개발재원 국제회의에서 ODA 규모를 GNI 대비 2007년에는 0.5%, 2012년까지 0.7%까지 올리기로 공표하였기 때문임.
- OECD 자료를 보면, 최근 20여년간 프랑스의 국민총생산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P) 비율은 약 0.65~0.75%이었고, 주요 원조의 동인으로서 정치적인 토대의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이 약 40%이었음.
- 프랑스의 개발NGO들은 개발협력이나 교육 이외에도 이주노동자들의 사회통합문제나 난민문제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고, CCFD(Comite Catholique contre la Faim et pour le Development)는 긴급구호에서 개발사업에 걸쳐 개발협력의 개념을 프랑스에 도입한 NGO이며, 전문적으로 조직된 국경없는 의사회(MSF, Medecins Sans Frontieres)와 AICF(Action International

contre la Faim) 등은 프랑스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4. 스웨덴의 ODA 정책

■ 스웨덴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인도주의적 시각에 바탕을 두고 국익보다는 국제적인 규범이나 국제법 그리고 국제기준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왔고, 해외원조는 자유, 평화, 인권 및 사회복지와 세계의 모든 국가가 공유할 수 있는 부의 재분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스웨덴 정부는 인도주의적인 원조와 단기적인 경제이익의 개념을 해외원조에서 분리시켜 원조를 제공하여 옴.

- OECD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 ODA의 약 50% 이상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저개발국가들에게 집중되었고, 1990년대에 경기둔화로 인한 예산제약으로 0.7%로 감소했으나 1980년대 평균 0.7%이상 상회한 점으로 보아 2007년까지는 1%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됨.
- 국제개발에 대한 스웨덴의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청(SIDA)은 첫째 빈곤완화, 둘째 지속개발, 셋째 성평등, 넷째 민주주의, 인권 및 분쟁해결 등 4가지 영역에 중점을 둔 실행계획을 수행하고 있음.
- 스웨덴의 개발NGO는 20세기 초 자유교회, 절제운동,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운동 등의 민간대중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각 정당도 이러한 대중운동에 기반하고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벽을 거의 느낄 수 없다는 점이 특징임.
- 교회단체, 교육기관, 소협, 노조 등 NGO 45개 단체가 제3세계에 대한 기술원조를 위해 스웨덴 저개발지역 기술원조중앙위원회를 설립하여 개발사업에 자금조달활동을 하고 있고 1970년대 중반에 최초로 임명된 NGO 대사는 정부와 NGO간의 연락 · 조정, NGO의 국제사회에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스웨덴은 자국의 경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가이익과 해외원조를 연관시키는 실용주의 정책노선을 펴는 경향이 있지만,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전반을 살펴보면 이상주의 및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민주주의, 인권개선, 기회의 균등, 평화유지 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여 왔음.

5. 원조공여국의 ODA 정책 분석

■ 주요 원조공여국들은 서로 다른 지역(북미, 아시아 및 유럽)에 위치하면서 서로 다른 경제, 문화, 정치 및 군사체제에 따라 다양한 공적개발원조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2000년에 개최된 UN 총회에서는 21세기 새로운 국제협력의 방향 설정을 위하여 MDGs를 선언하고 저개발국가의 빈곤문제가 지구촌 전체의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지구촌 모든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 원조공여국들은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원조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는데 해외원조의 역할, 국가이익, 기능적 또는 지역적 집중도, 개발NGO 등의 부문에서 각자 그들이 처한 국내정치상황, 경제체제, 천연자원, 사회전통, 다른 산업국가 및 저개발국가와의 역사적 관계, 국제정치체제의 구조에 따라 가변적으로 원조정책을 실행해 옴.

- 해외원조 분야에서 DAC 국가들이 수행하고 있는 ODA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가 처하고 있는 국내외적인 상황과 해외원조와 국익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IV. 한국의 ODA 전개상황 및 방향

1. 한국의 ODA 추이

■ 한국은 1995년에 세계은행의 차관공여 대상국에서 졸업하였고, 2000년에는 개발원조위원회가 정의한 해외원조 수원대상국에서 제외되었음.

- 한국의 원조공여는 1977년 외무부 주관 하에 100만불 상당의 기자재를 무상으로 공여하면서부터 비롯되었고,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하면서 유상차관 공여가 개시되었으며,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되어 정부 각 부처의 무상원조 업무를 통합함.

■ 한국의 ODA 규모는 아프간 및 이라크 재건지원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기준 GNI대비 0.06%로써 OECD/DAC 회원국의 평균인 0.25%의 약 1/4 수준에 불과하며 경제규모(GDP 세계 11위, 총 교역량 12위)가 비슷한 스페인 0.23%, 네덜란드 0.80% 및 호주 0.25%는 물론 소득수준이 비슷한 그리스 0.21%, 포르투갈 0.21%, 뉴질랜드 0.23%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 해외원조의 ODA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체로 경제개발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국제적 지원과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방향으로 원조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한국은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HRD)과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하부기반 건설 지원 / 최빈개도국(LDCs)에 대한 지원강화 /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s) / 환경, 여성, 인구, 민간부분 개발 등 범세계적 문제(global issues)의 해결 / 정보화격차(digital divide) 해소 기여 / 자연재해를 당한 개도국에 대한 긴급재난 지원(emergency relief) 등의 분야에 ODA역량을 제고해야 함.
- 한국의 대개도국 원조실적을 보면 1991년 KOICA 설립 초기에는 아시아지역 20.86%, 아프리카 지역 23.26%, 중남미지역 15.39%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2004년의 경우 아시

아지역이 34.57%, 아프리카지역 6.06%, 중남미 지역 4.85%, 중동지역이 40.86%를 점유하여 우리의 대외 무상원조가 아시아지역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분야별 원조실적을 살펴보면 공공행정분야 지원이 25.3%를 차지, 2001년도 4,075천불(7.5%)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통신 14.96%, 교육 및 보건 분야가 각각 11.4%와 10.55%의 점유율을 보여 인적자원개발 및 인간의 기본욕구충족분야 등 사회 하부구조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외원조의 지역별, 분야별 원조정책에서 MDGs를 반영한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2. 한국의 대개도국 무·유상원조 및 양자·다자원조

■ 대개도국 원조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누어지며 무상원조는 KOICA에서, 유상원조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전담수행하고 있음. 법적근거로는 한국국제협력단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 개별 ODA 사업시행과 관련된 법령에 의거 시행되며, KOICA에서 수행하는 대외무상원조사업은 프로젝트사업, 개발조사사업, 물자공여 및 긴급재난구호 등 개발협력사업과 봉사단파견, 연수생초청, 전문가 및 의료단파견 등 인력협력사업 등으로 구분함.

-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개도국이 우리나라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중반 20~30% 수준에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50% 수준으로 크게 증가되는 등 개도국과의 교역과 투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ODA 확대는 우리와 개도국간 상호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장기적 투자이므로 우리의 경제력 및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ODA 규모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
- 비록 다수의 DAC 회원국들이 ODA/GNI 비율 권고치 0.7%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DAC 회원국들의 양자간 원조 중 무상원조 대 유상원조의 평균비율은 2004년 기준 95:5로서 무상원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같은 해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대 유상원조의 비율은 64.1 : 35.9에 그치고 있어 우리의 ODA는 규모면에서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양자간 유상원조의 조건은 대상국의 소득수준 및 사업성격에 따라 이자율 연1.0~5.0%까지 차등 적용하고,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인데, 차관의 유형은 개발사업차관(development project loan), 기자재차관(equipment loan), 기금전대차관two-step loan), 물자차관(commodity loan), 사업준비차관(project preparation loan), 해외투자융자금 등으로 EDCF 차관의 대부분은 개발사업 차관 및 기자재 차관임.

■ 다자원조에서 한국은 국제기구를 통해 개도국

개발을 간접지원하고, 환경, 인구, 빈곤, 난민, 여성개발 등 범지구적 과제(global issues)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분담금 납부, 자본금 출자 등을 통해 기여함.

-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contribution to the UN system) 형식의 지원은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고, IBRD, IDA,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는 재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KOICA도 국제기구에 대한 원조(물자지원, 연수생 초청 등)를 실시하여 2004년 우리나라의 국제기구를 통한 ODA 실적은 91.6백만불로 전체 ODA의 22.7% 차지함.

3. 한국의 ODA 방향

■ 한국은 아직 OECD산하의 DAC 회원국은 아니나, 우리의 경제규모와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머지않아 DAC 가입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더욱 많은 역할과 책임 수행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ODA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이를 천명하는 원조이념의 법제화 또는 ODA 헌장 채택이 필요함.

- 개도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DAC 회원국들의 경우 대부분 국제개발협력법 등의 법률제정을 통해서 또는 내각에서 채택한 ODA 헌장 등을 통해 ODA의 기본원칙, 목적, 중점추진 분야 및 고려사항, ODA 정책 조정위원회 설치(ODA가 분권화 되어있는 경우) 등을 규정한 ODA 기본정책에 입각하여 ODA를 실시하고 있음.
- 한국의 ODA사업 실행의 제도적 장치는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 개별 ODA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고 있으나, 다원화된 국제 ODA체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포괄한 원조이념과 철학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한국 정부의 해외원조정책도 무역과 금융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대개발도상국 개발원조가 무역 및 투자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OECD 회원국으로서 위상에 맞는 정책추진과 원조비율을 점차 증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한국의 해외원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사항은 대북교류협력사업과의 연계성 문제인데 대북지원에 있어 우선적인 조건은 남북한 화해와 긴장완화, 북한의 자원배분에 대한 투명성 확보, 그리고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 임.

- 지금의 중국의 모습은 수 십년 동안 걸쳐 시행해온 문호개방과 개혁정책의 결과이고 북한도 이러한 단계적 개방과 개혁에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북 교류협력강화 차원에서 대북지원 예산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한국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연합이나 국제적십자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지원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임.

V.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국제 NGO의 역할

1. 남북교류협력사업

■ 한국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조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마련, 민족공동체 회복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있음.

- 2004년 남북교역은 6억 9,704만 달러(반입 2억 5,804만 달러, 반출 4억 3,900만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의 대외교역국이 되었음.
-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8월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남북교류협력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2004년까지 정부출연금 2조 964억원, 민간출연금 23억원, 운용수익금 3,248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조 3,527억원, 기타 수익금 56억원 등 총 4조 7,817억원이 조성됨.

- 기금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무·유상지원과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무·유상지원으로 대별하여 집행하고 있음(총 3조 3,181억원이 지출됨).
- 2004년 12월까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중 인적왕래 및 사회문화협력을 위한 무상지원은 총 332억원이 집행되었고 교역자금 및 경협자금 대출과 같은 유상지원은 총 1,388억원이 집행되었음.
- 이산가족교류 지원, 인도적 지원사업 및 경제분야 협력기반 조성사업과 같은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무상지원사업은 2004년 12월까지 총 1조 1,647억원이 집행되었고, 식량차관·장비 및 자재차관과 같은 유상지원은 총 1조 9,814억원이 지출되었음.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주민접촉 신고제(이전 승인제), 방북신청 처리기간 단축(20일에서 10일), 재외국민 북한방문 신고기간 단축,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및 유효기간 확대, 남북협력사업자의 협력물품 반출입신고제 폐지,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통행시 군의 별도검색 폐지, 경의선 민통선 출입시 방북차량 전용차선제 운영 및 방북차량 확인방법 개선, 개선공단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검사의 선별검사로의 전환조치 등의 제도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 남북교류협력과 더불어 한국은 자유를 찾아 북한을 이탈한 이주민들에 대한 긴급구호, 인권보호 및 인도적 차원에서 원조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내 새터민을 위한 정착지원책도 지속적으로 체계화 해야 함.

- 국제 구호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중국 내에 체류중인 북한 이탈주민들은 수십만명에서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한해 북한에서 중국이나 몽골지방으로 탈출하는 북한 이주민들이 약 3천명에서 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한해 약 100만톤에서 15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연합 인권 소위원회는 기아와 궁핍, 그리고 박해를 피해 목숨을 걸고 조국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에게 1951년 국제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해 국제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음.
- 한국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시급히 제공해야 하고 긴급구호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외의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민족공동체 구현이라는 당위적인 측면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실행되어 옴.

-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총 11억 6,071만 달러(정부차원 7억 3,594만 달러, 민간차원 4억 2,477만 달러)이었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1억 7,792만 달러이었음.
- 특히 대북 경수로 지원을 포함하여 식량 및 의료부분에 있어 미국의 대북지원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1억 2,400만 달러에 달함.
- 이러한 대북지원은 정부 대 정부의 양자관계, 국가간 다자관계로 지원하는 경우와 국제기구나 국제 NGO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조를 실행하였음.

■ 한국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여건의 조성이라는 차원과 인도적, 민족적 차원에서 해외원조를 대북교류협력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 대북지원사업의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화된 창구를 통합하고 정책기획, 조정, 통제 및 관리 등에서 조직혁신과 협력체제 정립 그리고 법/제도적 체계화를 마련해야 함.
- 대북지원과 해외원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총괄, 국민화합, 자문건의, 정보교류, 정책개발 및 홍보기능 등을 강화하여 정부부서간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의 효율을 제고해야 함.
- 대외원조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활용되었지만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비정치적이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제 NGO의 역할이 중요함.

2. 국제 NGO의 역할

■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매년 북한 GDP의 1%를 상회하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 NGO임.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대홍수를 계기로 북한정부가 외부세계에 공식적인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면서부터였고 실제로 미국의 월드비젼(World Vision)은 1994년 북한 당국과 접촉을 시작하면서 30만 톤의 긴급구호식량을 제공한 바 있음.

- 유네스코(UNESCO)와 더불어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 홍콩지부 역시 북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용 급식물자를 지원한바 있고, UN 산하의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과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가 북한을 방문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각국 정부와 인도주의적 지원단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식량지원을 호소함.

■ 국제 NGO들의 대북진출은 1997년 중후반까지 서로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했으나, 그 이후에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옴.

- WFP 등 국제기구 역시 이러한 NGO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적인 평양사무소 내부에 식량원조 연락사무소(FALU, Food Aid Liaison Unit)를 개설함으로써 북한에 상주 직원을 두지 못한 국제 NGO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대북지원과 관련된 각종 NGO 활동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대북지원 관련 국제 NGO들은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고, 소규모 미국 NGO들은 초국적 NGO인 북한활동그룹을 결성하여 '구호기관 포럼'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제 NGO들의 대북지원활동은 UN 등의 국제기구와 각 지원국 정부들을 총 망라하는 구조화된 지원 틀 안에서 조정되고 체계화되는 형태를 보임.

■ 대북활동 NGO 네트워크 가운데 가장 상위의 것이 바로 NGO와 GO 및 국제기구를 망라해 형성된 지원기구 포럼이라 할 수 있음.

- 이 기구는 첫째, WEP, FAO, UNDP 등 UN 산하 개발구호 기관; 둘째, 국제적십자; 셋째, 북한에 거점을 두고 있는 NGO; 넷째, 북한에 거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FALU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제 NGO; 그리고 다섯째, 북한에 거점을 두고 있는 지원국의 개발구호기관 등을 주축으로 구성됨.

■ 국제 NGO들이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다자지원과 양자지원 방식으로 대별되고 다자지원은 UN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체계 하에 수행되는데 2004년까지 UN의 통합호소절차(CAP, Consolidated Appeals Process)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양자지원은 한국과 중국 정부, 그리고 주로 한국 NGO들에 의해 추진되어 옴.

- 다자지원에 있어서는 UN의 인도주의조정국(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의 주관 하에 WEP, WHO, UNDP 등 유엔 산하기구들이 참여하였고 한국,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개별 국가들은 UN이 매년 12월 차기년도 대북지원을 위한 통합호소를 발표하면 여기에 호응해서

식량 또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자지원에 결합함.

- 양자지원은 한국 정부와 NGO 그리고 중국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미국과 일본의 일부 NGO들이 양자지원 방식으로 대북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한국정부와 NGO의 대북지원이 급증하면서 전체 대북지원 금액 중에서 양자지원 금액이 다자지원 금액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함.

■ 향후 한국은 해외원조를 대북지원과 연계하고 원조의 수단과 규모에 따라 국제 NGO,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등 국제적 행위자들간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유지하고 유기적이고 통합적(integration)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네트워크(governance network)를 구축해 나가야 함.

■ 결론적으로 해외원조는 대북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위한 세계평화 유지, 개발원조의 영역확대, 원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점에서 실행해야 함.

- 정책방향은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개발을 위한 지원,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강화, 인류 보편적 가치추구, 자연재해로 고통 받는 국가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동참 등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VI. 향후 과제 및 결언

■ 본고는 해외원조의 방법과 규모 등에 대한 논의사항 중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유용성,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 등 방법상의 문제, 원조공여국과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한 원조 행위자들의 관계, 원조공여국과 국가이익과의 관계, 원조수원국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능력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 아직 선진국의 대열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한 한국의 해외원조의 방향 및 범위와 관련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고, 특히 해외원조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그동안 등한시되어온 대북교류협력사업과 연계하는 수단적인 측면을 고찰함.
- 이론적인 관점과 사례적인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조형태를 분석하였고 주된 자료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 원조제공의 방향과 기능적인 배분, 원조체제에 의해 판단된 원조의 질적 평가, 그리고 원조공여국의 대외정책상 국익과의 연관성에 관한 것을 활용했는데 그 목적은 주요 DAC 회원국들의 원조유형과 행태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원조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방안을 수립해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함.

■ 한국도 다른 원조공여국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해외원조정책도 변화하게 될 것이고, 원조의 주요동향으로 보아 경제적 현

실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원조정책이 실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이 추진해야 될 방향은 원조이념 정립, 법/제도적 장치 체계화 및 주요 원조 행위자들간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유지하고 통합(integration)적인 거버넌스 네트워크(governance network)를 구축해 나가는 것임.

- 결론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원조동향과 최근의 국제적 논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원조정책은 다자원조와 양자원조 그리고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등 원조수단 간의 상호보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별적이고 선택적인 개발원조를 최적결합방식(optimal combination of multilateral-bilateral assistances and grants-loans)에 의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더불어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의 보다 광범위한 역할수행과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수립, 원조부서의 정립 및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 한국은 향후 해외원조의 수단 및 행위자들간의 상호보완성과 최적의 결합방식을 구현하고 국내외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적 현실주의와 유연성 있는 구조주의적 시각이 결합된 원조정책을 펴나가야 함.

- 지속적으로 외국의 대외원조 모델을 연구 · 조사하여 적용하고 현실성과 유용성이 부합된 그리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함.

■ OECD 산하의 DAC는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원조의 양적인 증진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위해 원조공여국들의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2015년까지 0.7%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원조의 지침으로는 저개발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원조, 원조를 통한 분쟁의 예방, 빈곤완화 및 경제능력의 개발 등을 촉구하고 있음.

-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DAC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상원조 비율, 다자원조 비율, 인도주의적 원조 등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조의 수단과 방법의 상호보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선택원조를 실행해야 할 것임.
- 향후 DAC 산하 ODA 체제의 과제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추구하려는 개별 국가와 어떻게 하면 다자간의 국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협력체제의 기반을 형성하느냐에 달려있음.
- 한국 해외원조의 방향은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보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원조를 실행함으로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번영체제 구축에 일조하는 것임.
- 한국은 남북한 통일여건을 원활하게 조성한다는 차원과 대북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해외원조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함.

Ⅱ. 개발협력동향

1. OECD/DAC 및 국제기구 원조동향

2. 공여국 원조동향

3. 수원국 원조동향

OECD/DAC 수원국리스트

수원국 리스트 변경 사항

■ 1996년부터 유지해 오던 수원국 리스트의 Part I (ODA대상국)과 Part II(OA 대상국)의 구분을 없애고 Part I ODA 대상국만을 남겨 수원국 리스트를 단일화 하였음.

■ 이번 수원국 리스트 변경 시, 2001년 1인당 국민소득 기준을 2004년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갱신 하면서 저소득국, 중저소득국, 고중소득국, 고소득국의 분류 기준을 각기 $825, $3,255, $3,026, $10,065로 변경하였음.

■ Part II 삭제에 따라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리비아는 소득수준에 맞추어 중저소득국과 고중소득국으로 편입 되었음. 단,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EU 가입예정을 이유로 ODA대상국에서 제외됨.

■ 최빈국 50개국은 변동 없었으며 변경된 리스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됨.

■ 바레인은 2004년부터 3년간 고소득국가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수원국에서 졸업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005년과 2006년까지 고소득 수준을 유지하면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될 예정.

※ 변경된 수원국 리스트 국가명칭은 외래어명칭 표준어 변경사항 적용하였음.

〈 국별 소득수준 변경 내역 〉

국가명	영문명	변경 전 소득구분	변경 후 소득구분
아르메니아	Armenia	저소득국 (LICs)	중저소득국 (LMICs)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저소득국 (LICs)	중저소득국 (LMICs)
그루지야	Georgia	저소득국 (LICs)	중저소득국 (LMICs)
인도네시아	Indonesia	저소득국 (LICs)	중저소득국 (LMICs)
벨리즈	Belize	중저소득국 (LMICs)	고중소득국 (UMICs)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중저소득국 (LMICs)	고중소득국 (UMICs)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St. Vincent and Grenadines	중저소득국 (LMICs)	고중소득국 (UMICs)
터키	Turkey	중저소득국 (LMICs)	고중소득국 (UMICs)
브라질	Brazil	고중소득국 (UMICs)	중저소득국 (LMICs)
벨로루시	Belarus	동구 및 구소련독립국 (CEECs/NIS)	중저소득국 (LMICs)
우크라이나	Ukraine	동구 및 구소련독립국 (CEECs/NIS)	중저소득국 (LMICs)
리비아	Libya	선발개도국 (MADCs)	고중소득국 (UMICs)

〈 변경전, DAC 수원국 리스트 (2003 ~ 2005년) 〉

Part I : 공적개발원조(ODA) 대상국/지역					Part II : 공적원조(OA) 대상국/지역	
최빈국	저소득국 (2001년1인당 GNI $745미만)	저중소득국 (2001년 1인당 GNI $746-$2975)	고중소득국 (2004년1인당 GNI $2976-$9205)	고소득국 (2001년1인당 GNI $9206 이상)	중동부 유럽 및 구소련 독립국가	선발개도국 및 지역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 지부티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이디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키리바시 라오스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니제르 르완다 사모아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예멘 잠비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메룬 콩고(공) 코트디부아르 동티보르 *조지아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북한 *키르키즈 *몰도바 몽골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짐바브웨	*알바니아 알제리아 벨리체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중국 콜롬비아 쿠바 도미니카(공)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피지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요르단 *카자흐스탄 마케도니아(구 유고) 마샬군도 마이크로 네시아연방 모로코 나미비아 니우에 팔레스타인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다 수리남 스와질랜드 시리아 태국 ●토켈라우 통가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왈리스&푸트나	보츠와나 브라질 칠레 쿡아일랜드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가봉 그레나다 레바논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마요뜨 나우루 파나마 ●세인트헬레나 세인트루시아 베네주엘라 World Bank 차관 준 적격국 (2001년 $ 5185) ●안귈라 안티구아&바부다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멕시코 ●몬세라트 오만 팔라우 사우리아라비아 세이셸 세인트 킷츠 네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턱스&카이코스 군도 우루과이	바레인	*벨라루시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크 *우크라이나	●아루바 바하마 ●버뮤다 브루나이 ●케이만군도 대만 사이프러스 ●포클랜드 ●불령 폴리네시아 ●지브폴터 ●홍콩 이스라엘 대한민국 쿠웨이트 리비아 ●마카오 몰타 ●네덜란드 안틸레 뉴칼레도니아 카타르 싱가폴 슬로베니아 UAE ●버진아일랜드 (UK)

*표시 국가는 중동부 유럽 및 구소련 독립국가연합(CEECs/NIS)
●표시는 지역(Territory)

〈 변경후, DAC 수원국 리스트 (2006년 1월 현재) 〉

최빈국	저소득국 (2004년1인당 GNI $825미만)	저중소득국 (2004년 1인당 GNI $826-$3,255)	고중소득국 (2004년1인당 GNI $3,256-$10,065)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알바니아	*안길라
앙골라	콩고(공)	알제리	안티구아바부다
방글라데시	코트디부아르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베냉	가나	아제르바이잔	바베이도스
부탄	인도	벨로루시	벨리즈
부르키나파소	케냐	볼리비아	보츠와나
부룬디	북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칠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브라질	쿡아일랜드
카보베르데	몰도바	중국	코스타리카
중앙아프리카	몽골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차드	니카라과	쿠바	도미니카
코모로	나이지리아	도미니카(공)	가봉
콩고(민주)	파키스탄	에콰도르	그레나다
지부티	파푸아뉴기니	이집트	레바논
적도 기니	타지키스탄	엘살바도르	리비아
에리트레아	우즈베키스탄	피지	말레이시아
에티오피아	베트남	그루지야	모리셔스
감비아	짐바브웨	과테말라	*마요뜨
기니		가이아나	멕시코
기니비사우		온두라스	*몬트세라트
아이티		인도네시아	나우루
키리바시		이란	오만
라오스		이라크	팔라우
레소토		자메이카	파나마
라이베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마다가스카르		카자흐스탄	세이셸
말라위		마케도니아(구 유고)	남아프리카
몰디브		마샬군도	*세인트헬레나
말리		마이크로네시아연방	세인트킷츠네비스
모리타니		모로코	세인트루시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미얀마		니우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네팔		팔레스타인	터키
니제르		파라과이	*터크스&카이코스군도
르완다		페루	우루과이
사모아		필리핀	베네수엘라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세네갈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수리남	
솔로몬군도		스와질랜드	
소말리아		시리아	
수단		태국	
탄자니아		*토켈라우	
동티모르		통가	
토고		튀니지	
투발루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바누아투		*왈리스&푸트나	
예멘			
잠비아			

* 영토(본토에서 떨어진 속령, Territory)

주) 사우디아라비아는 2004년 고소득국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DAC수원국 리스트 개정기준에 따라서 2005년과 2006년에도 고소득국으로 남아있을 경우 2008년부터 수원국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임. DAC회원국으로부터의 ODA 순지원액은 2003년 9,9백만달러였고, 2004년에는 9,0백만달러였음(사전통계기준)

DAC 상주대표회의 결과

I. 핵심요지

■ 금년도 개발각료회의(HLM)를 개발환경장관 합동회의(4.4)와 연계하여 4.4-5간 개최하여 원조규모 확대, 취약국가, 빈곤친화적 성장,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하여 논의 예정인 바, 우리 대표단 참가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회의참가에 대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 금년도 HLM은 작년말 수립한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개선 종합대책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여타 선진공여국의 개발원조정책 동향을 파악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판단됨.

■ WTO 홍콩각료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OECD 사무국의 scoping paper 관련, 우리측 의견이 있을 경우 회시 바람.

II. 상세논의사항

1. 개발각료회의(HLM) 추진방안

■ 4.4(화) 일정

- 오전, 오후 : 개발환경장관 합동회의 개최 (기 결정사항)
- 수석대표 만찬부터 HLM 회의를 시작하되, 만찬의 성격은 비공식회의로 함.
- 만찬의제 관련, 의장은 유엔 ECOSOC 개발협력포럼 및 몬테레이+5회의(카타르)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다수 대표들이 동 만찬은 하루종일 개발환경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한 후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 여러 이슈 보다는 하나의 이슈에 대하여 편안하게 논의토록 하자고 주장하였으며, 2월 상주대표회의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4.5(수) 오전회의

- 오전회의 의제로 의장은 원조규모 확대에 대하여 논의하되, 세부사항으로서 △2005년

ODA 규모, △ODA 대상국 기준(country eligibility), △non-DAC 공여국과의 관계, △작년 12월 개최 '결과를 위한 규모확대' 회의 이후 진전사항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제의함.

- 일부 참석자들은(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 원조규모 확대의 수단으로서 그간 수차 제기해왔던 '혁신적 ODA 재정수단' 및 이민(migration), 송금(remittances)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이민, 송금 문제는 ODA 규모 확대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감안, 희망하는 국가에 한해 오후의제(Pro-Poor Growth) 논의시 개도국의 빈곤퇴치 수단의 하나로 송금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함.
- 오전회의 형식과 관련, 의장은 수석대표 단독참석 또는 수석대표+1로 참가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다수 국가들이 수행 참가인원을 2명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후속조치 추진에 유리하고, 수석대표간 협의는 오만찬 계기에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2월 회의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4.5(수) 오찬회의

-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 관련, 공여국간 공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되 외부강사를 초청하기로 하였으며,
- 일부 국가들은(독일, 일본 등) 일부 취약국가에서 non-DAC 공여국도 주요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음을 감안 공여국간 공조방안에 non-DAC 공여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자고 주장함.

■ 4.5(수) 오후회의

-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 및 모범적인 인도적 지원(Good Humanitarian Donorship)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빈곤친화적 성장 의제와 관련, 빈곤작업반(POVNET)이 그간 작업해 온 정책문서를 채택하고, 향후 공여국들의 원조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오후회의 두 번째 의제 관련, 스톡홀름원칙에 대해 승인하고 최근의 긴급재난으로부터 얻어진 교훈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장 제안에 대체로 동의함.

2. 홍콩개최 WTO 각료회의 결과

■ 사무국은 홍콩각료회의 선언문에서 언급된 '무역을 위한 원조' 후속조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OECD가 WTO내 설립될 Task Force에 '무역을 위한 원조'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함을 감안 사무국이 준비한 scoping paper를 검토하였음.

■ 다수 참석자들은(미, 영, 캐나다 등) OECD가 너무 앞서나가기보다는 WTO와 보조를 맞추면서 작업을 진행하되, 작업의 범위는 △DAC 공여국이 무역을 위한 원조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그간 시행된 무역을 위한 원조 사업을 통해 얻어진 경험은 무엇인지, △향후 개도

국들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당초 사무국이 제시한 △무역을 위한 원조의 범위 설정, △무역을 위한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제외되었음.

■ 아울러 사무국은 회원국이 scoping paper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무역위원회의 Electronic Discussion Group(EDG)에 서면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3. ODA를 이용한 개도국 투자 촉진방안

■ 개발원조위원회는 ODA를 이용하여 대개도국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작년 MCM 이래로 검토하고 있는 바, 사무국은 공여국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지침을 제시함.

- 원조의 분산을 줄이라 : 국가별 분야별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세밀한 분석
- 개도국의 능력을 배양하라 :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들의 평가 및 결과 모니터 능력
- 국내투자 결정요인에 유의하라
- 개도국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기회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주라
- 기업 지원시 직접적 보조금 방식을 피하고 시장 메카니즘을 활용하라
- 정부와 민간기업간 대화를 촉진하라

■ 다수 참석자들은 사무국 문서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표하면서, 부분적으로 금융부문의 중요성, 법치주의에 대한 언급, 정책일관성에 대한 언급, 지하 경제(informal economy)에 대한 언급 등을 강화 또는 추가할 것을 주문한 바, 3월 회의시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사무국은 추가의견이 있을 경우 2.10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4. 동료심사(peer review) 방법론

■ 사무국은 회원국의 원조정책 동료심사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료심사 내용 및 학습지침(DAC Peer Review Content and Learning Guide)' 이라는 문서를 작성중인 바, 동 초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다수 참석자들은 사무국 초안의 내용이 훌륭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한편 일본은 다수 코멘트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특히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 이행실적을 모니터하는 것과 관련 여타 공여국과 비교하겠다는 것은 당초 합의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 동 지침은 우리의 원조정책 및 원조현황을 자체적으로 심사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도 동 문서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2007-08년도 사업계획

■ DAC는 작년 11월 이래 2007-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바, 다음 사항은 이미 합의한 사항임.

- 새로운 자발적 기여금 관리시스템은 2007년

부터 적용

- 사업계획에 대하여 먼저 합의하고, 이후에 필요시 산하 작업반 통폐합 실시
- 사업우선순위에 관한 일반원칙
- 핵심 산출물로 △DAC 정기회의 지원, △연례보고서 및 통계 작성, △동료심사 및 파리선언 모니터링 사업에 합의(2005.12 SLM 회의시 합의)

■ 회원국 및 산하작업반은 1.31까지 산출결과물(output results)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2.14 DAC 정기회의에서 사업우선순위리스트를 잠정 채택하고, 3월 중순까지 회원국의 ranking 작업을 받아서 4-5월중 사업계획안을 최종 수립 예정

■ 한편 사무국은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야(6개) 및 소요액(총 159만유로)에 대하여 설명하고 회원국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 바, 작년에 건의한 바 있는 DAC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 지원(non-DAC 공여국과의 정책대화분야에 약 5만불 지원)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람.

6. 의장, 부의장 선출 및 행정사항

■ Richard Manning 현 의장이 단독 출마하여 재선되었고, 부의장으로는 네덜란드의 Jeroen Verheul, 미국의 George Carner 및 뉴질랜드의 Stephanie Lee 대표 등 총 3인이 출마하여 별다른 이견없이 선출되었음.

■ 작년 10월, 11월 상주대표회의 및 12월 SLM 회의의 논의결과요약 관련, 사무국 초안을 일부 수정한 후에 채택함.

■ 빈곤작업반(POVNET)의 11월 회의결과 및 향후 작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함.

[자료 : 주오이시디 대표부]

제5차 ODA 평가 도쿄 워크샵 결과

일본 정부 주최 '제5차 ODA 평가에 관한 동경 워크샵' 이 1.26-27간 개최된 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주요 결과 및 평가

■ 금번 워크샵은 ODA의 '개발성과 매니지먼트(MfDR: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를 위한 모니터링 · 평가 시스템 구축' 을 주제로 일본 정부가 아시아 지역 수원국 원조담당 공무원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개최한 바, 모니터링 · 평가 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이슈보다는 아시아 수원국 및 국제기구가 자체 모니터링 · 평가 시스템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짐.

■ 아울러 일본측은 JICA, JBIC의 모니터링 · 평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Capacity Development 지원사업 설명에 주력하면서 아시아 수원국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일부 참가 수원국들도 일본과의 공동평가사업을 소개하는 등 일본이 금번 워크샵을 개최한 이유에는 일본 ODA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국 협조확보 목적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주요 논의사항

가. 제1세션

■ 동 세션에서는 '모니터링 · 평가시스템에 있어서 개발성과 메니지먼트의 의의' 주제하에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및 인도가 자국의 평가시스템 사례를 소개

- 방글라데시의 경우 자국 빈곤감축전략(National Strategy for Accelerated Poverty Reduction: NSAPR)상의 모니터링 · 평가 시스템을 설명
- 베트남의 경우 Paris Declaration(2005.3월)의 이행을 위한 Hanoi Core Statement, 2006-2010년간 5개년 사회경제계획에서의

목표 평가 등 베트남이 추진중인 관련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Donor Country와의 공동 평가 사례로서 일본과의 '홍강델타 교통개발사업'을 소개

- 태국의 경우 새로운 emerging donor로서 태국국제협력기구(Thailand Int'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TICA)를 통해 자국이 실시하고 있는 원조사업을 설명
  - 과거 주로 캄보디아, 라오스 등 CLMV 국가를 대상으로 하다가 최근 동티모르, 스리랑카, 아프리카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

■ UNDP, ADB, World Bank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각 기구의 ODA 모니터링 · 평가시스템을 소개

- UNDP의 Assessment of Development Results(ADR), World Bank의 Country Assistance Evaluation(CAE) 등

■ 한편, 동 세션 토론에서는 대체적으로 모니터링 · 평가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및 Donor와 Partner Country간 협력필요성 등이 강조되었으며,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은 Donor 위주의 평가항목 설정에 따른 national priorities와의 상충문제 등을 제기하기도 함.

나. 제2세션

■ 제2세션은 '모니터링 · 평가시스템의 owner-ship'을 주제로 두 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아시아 각국 사례 및 과제에 대해 토의

■ 구체적으로 political commitment 확보를 위한 (project/program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평가의 중요성, Accountability 및 Transparency 확보를 위하여 평가지수 선정과정 및 평가 결과의 피드백 과정에서의 국민참여 방안, ODA 평가와 국가 전체 예산과정 평가와의 연계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짐.

- 아울러, 모니터링 ·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법적, 통계적 제반 요인 등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짐.

다. 제3세션

■ 제3세션에서는 '모니터링 ·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Partnership'을 주제로 수원국 Capacity Development, 원조공여국회의 활용, 평가전문가간 network 구축방안 등이 논의됨.

■ 일본 JICA 및 JBIC은 발표를 통해 개도국 모니터링 · 평가 역량 지원(Capacity Development)을 위한 구체 활동을 소개

- JICA의 경우 정책형성 측면, 프로그램 개발 측면, 개별 프로젝트 추진 차원 등 각 정책순위별로 별도의 approach를 활용하고 있음을 소개

■ 아울러 2005.3월 Paris Declaration 후 World Bank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조공여국회의를 단순한 pledging 성격이 아닌 성과평가 중심논의로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소개된 후 이의 구체 추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한편, 수원국과 원조국간 평가전문가간

network 구축 필요성과 관련, 금번 워크샵 의장인 Hirono 교수는 일본 주관하에 2006.3월 말 아시아 지역 평가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Evaluation Network in Asia'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

- 동 관련, USAID 관계자는 유럽 및 미주지역 관련전문가들이 최근 'Evaluation Club'을 결성하였다고 소개

[자료: 주일본 대사관]

인도양 쓰나미 피해국에 대한 일본의 ODA 지원관련 중간평가

일본 외무성은 인도양 쓰나미 피해 발생 1주년이 되는 12.26(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피해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무상자금지원의 효과 등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쓰나미 피해 지원 개요

가. 지원방식의 특징

■ 자금지원단계에는 특정사업을 연계하지 않는 non-project 무상자금협력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피해국의 자체 수요를 감안하여 지원사업을 발굴가능

■ 일본의 국제협력단(JICA)을 조달대행기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원자금의 적절한 관리뿐만 아니라 피해국 정부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

■ 피해국 정부와 현지 일본대사관간 "정부간 협의회"를 설치 · 운영함으로써, 지원자금의 사용방안에 대해 피해국 정부의 희망을 반영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자문기능 수행이 가능

나. 지원의 흐름

■ 일본은 2005.1.17 각의 결정 직후, 5억불의 무상지원금을 1.19 피해국에 지원

- 그후 각 국별로 정부간 협의회에서 지원사업의 선정, 사업의 추진상황 관리, 실시 촉진 등을 실시

■ 개별사업은 ①조사 · 설계 등을 포함한 사전조사 및 구입기계 등에 대한 조사 단계, ②입찰자 선정을 위한 기준마련 및 입찰 참가자에 대한 설명서 작성 단계, ③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를 개시하는 단계, ④그리고 물건의 납품 및 시설의 준공 등 사업 완료, 계약금 지불단계로 구분 가능

다. 각 국가별 지원사업 내용(2005.12.15 기준)

■ 스리랑카

– 중고 진공자동차의 운송 및 고압세탁기 구입계획
– 급수차 및 저수탱크 구입계획
– 발전기 구입계획 상수도의 재정비
– 피해자용 주택건설계획
– 건설용 중기계 등의 구입계획
– 교량 건설계획
– 경찰서 재건계획
– 초 · 중학교 재건계획
– 어업용 기자재 구입계획
– 의료 연관 기자재 구입계획
– 피해지 순회용 차량 조달계획

■ 인도네시아
– 의약품 · 의료기기 공여
– 보건소 재건사업
– 라디오 · TV 방송지원사업
– 도로 복수사업
– 연안방수로 복구사업
– 수도 · 위생시설 복구사업
– 고아원 재건사업
– 어업 지원사업
– 시장 복구정비사업
– 대학 복구 등 지원사업
– 직업훈련학교 지원사업
– 토지대장 복구계획

■ 몰디브
– 어업관련 기자재 구입계획
– 공공시설 · 설비 정비계획(행정합동청사 건설, 배전망 복구계획 등)

2. 평가목적 및 방법

■ 쓰나미 발생 1주년에 즈음하여, 지원사업현황에 대한 대외 설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복구지원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①사업의 추진상황, ②사업의 타당성, ③시설/기자재의 활용도, ④사업 완료후의 기대효과, ⑤여타 지원국과의 관계(지원의 중복여부 등), ⑥홍보효과, ⑦피원조국에 의한 평가, ⑧현지 평가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청취를 통해 이루어짐.
– 현지 전문가 등 제 3자기관에 의한 평가도 실시

3. 각 국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가. 스리랑카

■ 사업추진 상황은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편이나, 발전기 · 급수차 등 긴급한 물자 구입에 있어서는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이 지적

■ 피해지역의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발굴하였기에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높음.

■ 시설 · 기자재의 활용도는 높음.

■ 피해지역 구제에 기여하는 등 기대효과도 높게 평가

■ 여타 지원기관과의 관계와 관련, 지원사업의 중복이 없으며 상호 연계되어 추진

■ 홍보효과와 관련, 현지 일본대사관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원사업에 대한 피해지역 주

민의 인식이 높은 편

■ 원조국도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

■ 조사, 평가자의 경우, 시시각각 변화하는 피해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적시에 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을 강조

– 이와 관련, 초중학교 건설계획 등 다수의 시설공사에서 JICA의 사전조사 기능, JICS의 조달 감시기능이 원활히 연계됨으로써 사업성과도 높고 향후 지원의 모델사례로 평가

– 다만, 현지통화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환율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자금 규모가 변화하는 등 환율관리 필요성을 지적

나. 인도네시아

■ 사업추진 상황은 전반적으로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되나, 여타 지원국과 비교시 일본의 지원속도는 빠른편

– 인도네시아 정부의 피해지역 지원사업의 조정기능 및 조정시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지연은 회피 곤란

■ 사업 타당성은 높게 평가

■ 시설/기자재의 활용도는 현재 다수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평가하기 곤란하나, 사업관련 기자재가 중간에 인도된 경우의 활용도는 높음.

■ 기대효과도 전체 사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여타 지원국에 의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일부 사업은 적절히 연계

■ 홍보효과와 관련, 토지대장 복구계획 등은 현지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인도네시아 정부내의 연락 및 정보공유부족 등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사업도 존재

■ 평가자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조직정비 뿐만 아니라, 추진사업 관리를 위한 체제정비의 중요성을 지적

다. 몰디브

■ 사업 추진상황, 사업의 타당성, 시설의 활용도, 기대효과, 홍보효과 모두 높게 평가

– 특히 시설재건 사업은 몰디브 정부의 "국가복구부흥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타당성이 높게 평가

■ 여타 지원기관과의 관계와 관련, 어업분야의 경우 FAO, JICS와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짐.

표제 중간보고서 全文은 PDF 파일 형태로 외무성 홈페이지(www.mofa.go.jp /mofaj/area/asia/pdfs/sumatra_tsunami_z.pdf)에서 입수 가능함.

[자료: 주일본 대사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에 대한 검토의견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에 대한 탄자니아 대사관 검토의견을 아래 보고함.

1. 총괄

아프리카 빈곤퇴치 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적 추세에 동참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을 증대하려는 금번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각국별 세부 이행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함.

2. 사안별 검토내용

가. 대아프리카 ODA 확대 계획

■ 우리나라의 ODA 확대 계획과 관련, 대아프리카 비중을 대폭 확대하려는 본부의 입장에 의견을 같이 함. 다만 선진국의 경우 총 ODA의 36% 이상을 아프리카에 지원하고 있는 점과, 극심한 빈곤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국가가 무려 53개국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지원목표를 양자간 무상원조의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한된 개발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한 바, 전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의 동시다발적인 원조 확대보다는, 최근의 경제발전 수준, 국가청렴도 및 지역내 중추적 역할 등 다방면에서 아프리카 모범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일부 국가를 중점협력국가로 선정, 우선 확대 지원하고, 나아가 인근국가 및 지역간 개발 효과로 이어지는 소위 '점-선-면' 단계적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나아가, 미국의 MCA(Millenium Challenge Account)와 유사한 원조체제를 도입하여 우리의 원조철학 및 국별전략에 의한 평가기준을 설정, 동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위주로 중점 지원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현행 대아프리카 무상원조는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물자지원 등 소규모 기술협력 사업이 대부분인 바, 대폭 확대될 협력사업 이행을 위해서는 중대형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사업 위주로 사업형태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나. 우리나라의 개발 및 Good Governance 경험 공유

■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전수 및 향후 협력사업 확대를 모색코자 2005년 최초로 실시한 아프리카 3개국(남아공, 탄자니아, 르완다) 경제협력세미나는 각국 정 · 재계의 높은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등 그 효과가 지대한 점을 감안, 향후 경제세미나 실시국가 및 횟수의 점진적 확대 필요.

■ 국별연수 확대,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 현행 소수 기술분야 연수와 병행하여 국별 특성 및 필요에 부합하는 국별연수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실시하는 한편, 각국 주요 도시 시장 또는 주지사 초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검토.

다. 아프리카의 MDG 달성 지원

1) 농업분야

■ **농업분야 연구 · 개발지원 강화**

–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농업분야 지원은 소규모의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및 물자지원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중장기 농업개발전략 수립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바, 아프리카 고유의 농업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 개발분야 지원 강화 필요.

• 예) 가칭 '농업기계화연구소 설립사업' 추진

▶ 아프리카 특유의 기후, 토질에 적합한 농기계의 개발, 조립 및 생산이 가능한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 검토(현재 소강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농기계업체 진출여건 마련)

2) 인적자원개발, 교육분야

■ **청소년개발, 중고등학교 기초교육 지원 강화 필요**

– 학교건립사업 및 교육분야 봉사단 확대파견 추진

라. 아프리카 지역기구, 국제기구와의 협력

■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확대 필요

– 다만, 아프리카 전체기구와의 협력은 우리 ODA 사업규모에 비추어 시기상조일 것으로 사료되니 EAC, SADC 등 주요 아프리카 지역기구를 우선 Focal Point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이들 지역기구 및 주요 국가와의 아프리카 원조공여국회의 및 개발협력 정책대화(Policy Dialogue) 등을 확대 실시(한–아세안 Dialogue 및 한–아세안 협력사업 등 참조)

■ 또한, 선진 원조기구(World Bank, USAID, JICA) 등과도 공동 협력사업(Joint Project) 추진 검토 필요

마. 부채탕감 (EDCF 공여 등)

■ 아프리카국가를 대상으로 현행 EDCF 수혜국 조건의 대폭 완화 등 보다 많은 아프리카국가들이 EDCF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3. 기타 검토사항

가. 이니셔티브 중장기 이행계획수립 및 실행 조직 확충

■ 상기 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에 의해 대폭 확대될 협력사업의 각국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KOICA 및 수출입은행 해외사무소 등 전담인력 확충 필요

나. 아프리카 지역연구 기능 및 현장중심의 조직 강화

■ 일본 JICA 아프리카지역본부(케냐) 등 선진 원조기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역본부제'를 도입하여 지역 연구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원조계획 수립 및 지역내 인력 및 예산운용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등 현장 중심의 원조 수행체제를 갖추고 있는 바, 금번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보다 다양한 아프리카 지역 연구 지원 및 KOICA 아프리카 지역본부제 도입 검토.

[자료: 탄자니아 대사관]

일본의 ODA 동향 : 총리직할 원조청 설립논의

일본 정부의 ODA 정책수립 및 집행기구 통합안 검토와 관련한 최근동향은 아래와 같음.

1. 관방장관 산하 유식자회의 발족

■ 일본 정부는 2005년 11월 정부계 금융기관 통폐합 기본방침을 확정하면서, 국제협력은행(JBIC) 엔차관 부문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는 총리직할 원조청 설립방안 등 ODA 정책수립 및 집행체제 전반에 대한 관방장관 산하 유식자회의의 추가 검토를 거쳐 금년 3월중 결론을 내리기로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5년 12월 관방장관의 사적 자문기구로 '해외경제협력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한 바, 동 검토회는 현재까지 3차례 회합을 개최하고 ODA 개혁 방안을 논의

2. 최근 논의 동향

■ 지난 1월 12일 동 검토회의 제3차 회합에서는 외무성, 재무성, 경산성 등 13개 중앙성청이 관여하고 있는 현 ODA 정책의 기획 및 입안에 있어서 총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총리역할 강화 입장에 따라 차기회합(1.18 및 1.25 예정)에서는 구체적인 조직 통폐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 1.16 '동경신문'은 총리산하 정책입안기구로서 'ODA 심의회'를 설치하고, JBIC의 엔차관 부문, JICA 및 외무성의 실시기능(무상원조)을 합친 '원조청'을 총리직할로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

- 동 보도에 대해 주일본 대사관이 접촉한 외무성 경제협력국 정책과 니시노 과장보좌는 총리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유식자회의 위원들간 의견일치가 있었으나, 원조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

■ 한편, ODA기능의 총리직할화를 반대하고 있는 외무성은 1월 7일 '테러와의 전쟁', '평화구축',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강화', '아시아의

경험의 아프리카 전파' 등 4가지 ODA 전략목표를 발표

- 동경신문은 동 전략목표 발표에 대해 외무성이 총리직할화 저지를 위해 외교목표 달성을 위한 ODA 활용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3. 향후 전망

■ 관방장관 산하 '해외경제협력에 관한 검토회'는 2월말까지 최종의견을 관방장관에 제출할 예정이며, 동 의견에 기해 3월중 총리산하 '경제재정자문회의'를 개최, 일본 정부의 최종 방침이 결정될 예정

- 정부 움직임과 별도로 여당인 자민당도 자체 검토회를 개최하여 2월말경 결론을 낼 예정이며, 동 입장도 최종 방침 결정에 반영될 전망

■ 한편, 총리산하 ODA 일원화 방안에 대해 JBIC 엔차관 담당부문, JICA 등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인데 반해, 외무성, 재무성 등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짐.

- JICA 오가타 이사장은 1.12 '해외경제협력에 관한 검토회' 회의시 총리산하 일원화 방침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언론 보도
- JBIC은 2000년 일본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OECF)가 통합된 조직이나 舊수은 직원과 舊OECF 직원간 인화부족에 따라 舊OECF 직원(현재 엔차관 부문)들은 일원화 방침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

[자료: 주일본 대사관]

일본의 ODA 동향 :
ODA 일원화 최종 보고서 제출

일본 정부의 ODA 개혁방안을 검토해온 '해외경제협력에 관한 검토회'(관방장관의 자문기구)는 2.28 '해외경제협력회의' 창설 및 엔차관, 무상원조, 기술협력사업의 JICA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채택한 바, 관련 내용 아래와 같음.

1. 보고서 주요내용

가. '해외경제협력회의(가칭)' 창설

■ 해외경제협력의 중요사항을 총리 및 소수의 각료가 기동적으로 심의하는 '사령탑'으로서 '해외경제협력회의(가칭)'를 창설(연호 'ODA 각료회의'를 의미)
- 동 회의에는 총리, 관방장관, 외무대신, 재무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이 참여하고, 필요시 기타 각료가 참석

■ 해외경제협력회의는 해외경제협력 관련 아래 중요사항에 대해 대국적 관점에서 기본전략 및 방향성 등을 결정
- ODA 전략 틀(ODA 대강, 중기정책, 주요 국별 · 분야별 원조계획, G8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일본이 추진하는 ODA 관련 이니셔티브 등)
- 주요 개도국에 대한 해외경제협력 내용(중점 전략분야와의 관계, 원조방법의 균형, OOF와의 연계, 민간자금의 활용 등)
- 특정 중요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
- ODA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평가, 국민참가, 현지 ODA 태스크포스 운영 등)
- 기타 해외경제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 ODA 사업은 안건발굴, 교섭, 국내조정 등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바, 현재의 외무성을 중심으로 한 실무현황 및 ODA와 외교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려, 향후에도 외무성이 관계성청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ODA 조정의 중핵을 담당

■ 한편, '사령탑'으로서의 기능을 기동적, 전략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소수정예의 사무국을 내각관방내에 설치

나. 실시기관의 JICA로의 일원화

■ 엔차관, 기술협력, 무상원조사업간의 연계강화를 위해 JICA로 실시기관을 일원화

- JBIC의 엔차관 부문은 JICA로 통합하며, 무상원조사업에 있어서도 JICA를 실시주체로 함.

■ 단, 엔차관에 있어 현재의 각성청간의 협의, 연계체제를 유지하여 재무건전성 및 무역 · 경제상의 관점 등을 확보

■ 무상원조사업 중 외교적으로 효과적인 타이밍에 기동적으로 실시해야 할 부문 및 위험지역 공여 등 실시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곤란한 사업은 계속하여 외무성이 실시를 담당

■ 현재 기술협력사업의 60% 이상을 JICA에서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약 40%를 13개 성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전략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무성 등 관계성청이 상호 긴밀한 정보공유, 연계를 강화

다. JBIC의 국제금융부문 처리

■ JBIC의 국제금융부문은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에 통합하나, JBIC의 해외 인지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의 국제부문은 일정한 조직적 독립성을 유지

- 또한, 국제부문 수장(首長)의 대외적 위치 등을 포함, JBIC의 현재 인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검토

■ 아울러 새로운 JICA하에서의 엔차관 부문과 국제금융부문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연락협의회 설치 등을 검토

※ 금번 보고서 원문은 www.kantei.go.jp의 '主な報告書 · 答申等'에서 입수 가능

2. 금번 보고서에 대한 일본 언론 평가

■ 일본 언론은 금번 보고서에 대해 대체로 ODA 관계성청의 기득권이 유지된 내용인 것으로 평가

- JBIC의 엔차관 부문이 JICA로 이동하게 되나, 재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등이 관여하는 기존의 협의체제는 그대로 유지
- 무상원조중 '효과적인 타이밍에 기동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업무는 외무성이 계속 담당 (마이니치 신문은 동 규모가 2005년 기준 외무성 무상원조예산 1,760억엔의 40%에 해당하는 약 7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
- 기술협력사업의 경우에도 40% 정도 사업을 13개 성청이 계속 담당
- 수출금융 등 JBIC의 국제금융부문은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으로 이관하게 되나, 조직적 독립성이 보장되고, 동 수장도 기존 JBIC하에서의 위치를 유지

■ 아울러, 관계성청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명목상의 일원화가 이루어져도 그 효과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

- 아사히 신문(3.1)은 재무성이 엔차관을, 외무성이 기술협력 및 무상원조를 사실상 계속 관할하게 됨에 따라 일원화에 따른 종합적인 기획입안 및 효율성 제고 효과는 없을 것이

라고 분석

– 마이니치 신문(3.2)은 '해외경제협력회의'가 ODA 정책의 평가도 담당하게 되나, 동 사무국이 사실상 재무성 및 외무성 관료로 충당될 가능성이 커,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

3. 향후 전망

■ 금번 '해외경제협력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에서 국제금융부문의 신정책금융기관으로의 이전 등 JBIC 개혁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일원화를 포함한 '행정개혁추진법안'을 3.10경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

– 이후 동 법안에 따라 구체 개혁추진

■ JICA로의 실시기관 일원화는 JICA법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

■ 한편, 금번 개혁에서 외무성의 ODA 조정기능 강화 및 일부 무상원조사업의 JICA 이전이 포함됨에 따라 외무성은 관련 조직개편을 포함한 구체 후속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

– 동 관련, 아소 외무대신은 2.24 기자회견에서 외무성내 '국제협력국' 창설 및 '국제협력종합정책본부' 설치를 지시하였다고 밝힘.

• 양자 ODA 등을 담당해 온 경제협력국과 국제사회협력부의 다자 ODA 기능을 합쳐 새로운 '국제협력국'을 창설, 양자 및 다자 ODA를 연계하고 외교전략에 입각하는 종합적인 기획입안 기능을 강화

• 외무대신 직할로 '국제협력종합정책본부'를 설치, 외무성내 모든 실국이 ODA 기획입안에 참여토록 함.

[자료: 주일본 대사관]

GTZ 대 페루 협력현황

1. 사무소 설치 및 인력현황

■ 1975년 사무소 설치, 단독건물(2개 층)을 사무소로 사용 중

■ 사무소 근무인력은 150명(계약직 포함)

– 전문가 50명(독일에서 파견 15명, 페루인 20명, 기타 전문가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 주변국 전문가)

• 독일 파견 전문가들은 프로젝트사업 추진

– 행정인력 및 기타 100명(대부분 현지인)

■ 현재 6개 지역에 분 사무소 운영

2. 추진경위

■ 74년 기술협력협정 체결

3. 사업추진 및 발굴

■ 대 페루 원조전략 수립(2개년~3개년)

– 경제협력개발부, GTZ ·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수립

■ 상기 원조전략에 의거, 수요조사 실시

– 페루 국제협력청으로부터 사업요청서 접수(대사관이 접수)

– 대사관 및 GTZ이 공동으로 일차적으로 사업요청서 검토

– 대사관, 독일 경제협력개발부에 사업요청서 송부

■ 2개년 사업계획 수립

– 경제협력개발부, 외교부 · 대사관 및 GTZ과 협의하여 우수사업 선정

■ 타당성조사 실시 및 협의

– 경제협력개발부, 타당성 조사단 파견

– 조사결과에 의거, 양국 정부간 협의 실시(독일) 및 지원규모 확정

■ 협정체결 및 사업추진

– 양국 정부간 2개년 협력 협정 체결 및 GTZ 사업 시행

– GTZ, 지원분야별로 자국 Consultant를 선정, Consultant를 통해 사업 실시(분야별 Consultant는 독일에서 선정)

■ 평가

– 양국 정부, 사업시행기관 등이 공동으로 사업 평가 및 반영

4. 중점 지원분야

■ 민주주의 강화 및 공공행정

■ 식수 및 위생

■ 농촌개발 및 자원 지속적 활용

■ 교육 및 보건

5. 지원규모 및 주요 사업형태

■ 연간 8~10백만 불

(중남미 지역 제 1 지원 대상국)

– 독일의 대 페루 지원규모 : 연간 약 50백만 불

(무상협력 8–10백만 불, 유상협력 40백만 불)

• 상기 지원 금액 외에 EU를 통해 지원

■ 현재 34개 프로젝트사업 추진 중

■ 프로젝트사업 위주로 실시하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은 매우 미미하며 연수, 국가개발 정책 자문 등 capacity building에 주력

6. 기타사항

■ **봉사단 파견** : DED에서 시행

■ **연수생 초청** : InWEnt에서 시행

■ **소규모 프로젝트** : 대사관에서 시행

■ **차관지원** : Kfw에서 시행

■ **독일 · 페루 기금 운용**

– 페루 정부에 기 제공한 차관 중 일정액을 삭감, 페루 정부는 삭감액의 40%를 개발 및 빈곤 퇴치 프로젝트에 투입.

[자료: 주페루 대사관]

제 8차 캄보디아 원조공여국 회의

I. 보고 요지

■ 향후 5년간 전략적 국가개발계획(NSDP 2006-2010) 이행을 위한 개발협력의 효율성 증대를 주제로 3.2(목)~3.3(금)간 캄보디아에서 세계은행과 캄보디아 정부 공동주관으로 제8차 원조공여국 회의가 개최되었음.

■ 금번 회의에서는 원조공여국과 주재국 정부가 공동개발한 NSDP 2006~2010의 이행 전략인 공공투자프로그램(Public Investment Program) 및 동 상황 점검을 위한 공동 모니터링 지표(Joint Monitoring Indicator 2006)가 채택됨.

■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총 601백만 불의 원조공약이 이루어졌는바, 지난 2004.12월 제7차 회의 시 공약된 총 501백만 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임.

- 우리는 향후 2~3년에 걸쳐 시행중인 사업을 포함, 총 2개 사업에 차관을 지원할 예정이며 (총 39.5백만 불, 연평균 15백만 불 수준), 무상원조 7백만 불, NGO 3백만 불 등 총 25백만 불의 지원 의사를 밝힘.

II. 회의 결과

■ 표제회의가 3.2(목)~3.3(금)간 세계은행 및 캄보디아 정부 공동주관으로 Hun Sen 총리, Sok An 부총리 겸 관방부장관, Keat Chhon 재경부장관 등 관련 부처 장·차관을 포함한 캄보디아 정부 대표단과, 총 12개 원조 공여국(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5개 국제기구(세계은행, ADB, IMF, UNDP, EU), 6개 옵저버국가(러시아, 폴란드 등), NGO 및 민간부문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개최 되었는 바, 주요 내용을 아래 보고함.

1. 개회식 연설요지

가. Hun Sen 총리(기조연설)

■ 2004.12월 제7차 원조공여국회의 개최 이후 달성한 성과 및 향후 추진할 정책 목표를 소개하고, 동 정책목표의 구체적 실천이 중요함을 역설함.

- 특히 캄보디아의 지속적 성장과 개혁을 위해 정치적 안정과 통합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 중요함을 강조함.

■ 한편 동 총리는 현행 원조 매커니즘을 재평가, 원조 효율성 증대를 위해 18개TWG(Technical Working Group)와 고위급 GDCC(Government - Donor Coordinaton Committee)를 설립·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기존 원조 공여국(CG) 회의를 GDCC로 대체하는 등 메커니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나. Ian Porter 세계은행 대표는 지난 제7차 회의 이후 각 의제별 진전사항과 당면과제를 소개하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 공여국들이 캄보디아 정부의 정책에 맞춰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함.

다. Keat Chhon 재경부장관은 지난 10년간 캄보디아의 경제성장 및 개혁 성과를 소개하며, 빈곤퇴치 및 성장을 위한 부패근절, 부채 탕감의 중요성을 역설함. 특히 IMF와 중국정부의 부채탕감 조치에 사의를 표명하고, 각 분야별 주재국 정부의 개선 방향을 폭넓게 제시함.

2. 의제별 토의사항

가. 의제 1 : 최근 경제사회 개발성과

■ 캄보디아 정부측은 지난 10년간의 경제성장 및 재정안정, 금융시장 발전 및 빈곤퇴치 등 전반적인 경제사회 개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함.

■ 이에 대해 IMF 대표는 캄보디아의 고도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공여국 및 캄보디아 정부가 향후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부채 탕감으로 인한 추가재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농업생산성 강화, 농촌개발을 통한 빈곤퇴치 및 사회개발 투자 등을 촉구함.

※ IMF는 캄보디아에 대해 1993년 이전 부채 8,200만 불을 탕감

나. 의제 2 : 국가전략개발계획 및 공공투자프로그램

■ 캄보디아측은 사각전략의 구체 실행과 캄보디아 새천년개발목표(CMDG)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 목표와 전략이 제시된 전략적 국가개발계획(NSDP 2006~2010) 및 동 전략지원 3개년 계획인 공공투자프로그램(PIP 2006~2008)을 소개하며, 원조 공여국들이 동 NSDP 및 PIP에 맞춰 원조를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함.

■ 이에 대해, ADB측은 파리선언에 따라 원조 공여국들이 NSDP에 맞추어 지원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고, 캄보디아 정부 측에 자체재원 확보

에 더욱 노력하고 세계은행의 빈곤평가보고서에 따라 NSDP의 세부계획, 동 계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수립을 촉구함.

다. 의제 3 : 2005년 공동모니터링지표 평가 및 2006년 지표 채택

■ 캄보디아 정부 측은 2005년 공동모니터링지표 평가 결과가 반영된 총 12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공동모니터링지표(JMIs)를 제시함 (상세 별첨 3 참조).

■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지난번 회의에 이어 캄보디아의 부패를 "disease, plague, cancer"에 비유하며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강력한 반부패법 제정 등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프랑스 측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 2004년 12월 공동모니터링지표로 설정되었던 8개 기초법안의 조속 입법을 요구함.

■ 덴마크 측은 행정 분야 개선 관련, 지표 달성을 위해 관련부처의 공조 및 정책결정권자의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 세계은행은 공공재정개혁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초석임을 강조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의 중요성을 역설함.

■ 독일 측은 천연자원 관리 및 농업분야 개혁과 관련, 토지 및 광산 소유권 허가에 대한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하며, 소유권 집중을 통한 빈부격차 확대 가능성을 우려함. 또한, 농촌 빈민들의 토지 확보를 위한 불법벌목이 산림훼손 및 지력 저하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림 및 농업을 포괄하는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요구함.

■ 한편 일본 측은 농업개발과 수자원 관리를 연계하는 포괄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함.

라. 의제 4 : 원조효율성 증대

■ 캄보디아 정부 측은 파리선언 및 로마선언에 따라 원조효율성 증대를 위해 달성한 성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며, 향후 공여국측 또한 원조 수행 시 캄보디아의 주인의식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함.

- 원조 조화와 일치를 위한 행동계획 수립 및 추진
- 개발협력 관리를 위한 전략적 틀 채택
-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한 관련 정보 공개

■ 이에 대해 영국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원조효율성 증대를 위해 취한 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기존의 공여국-캄보디아 정부간 조정 매커니즘(Consultative Group Meeting, Government-Donor Cooperation Committee, Technical Working Group)을 강화하는 한편, SWAp(Sector Wide Approach)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3. 우리측 수석대표 발언 요지

■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개발협력 파트너들이 앞서 지적한 바 있는 우려와 제

안에 동감하며, 주인의식 제고 및 원조효율성 증대를 위해 캄보디아측이 추진하는 NSDP/PIP 이니셔티브 및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원조 공약과 관련) 우리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국도 3번 개보수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차관지원과 함께, KOICA의 무상협력사업으로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크랑폰리강 유역 다목적 수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2~3년에 걸쳐 신규차관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힘.

■ 아울러 KOICA를 통한 국립소아병원 현대화,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등 각종 무상협력 추진을 위해 2006년도에 약 7백만 불을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차원의 각종 교류와 협력사업에 약 300만 불의 별도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회의 종료 후 캄보디아 실무자의 2006년도 지원 예정액 제시 요청으로 아래 산출근거에 따라 총 25백만 불 규모로 제시

– (국도 3번 1,200만 불/2년) + (수자원개발 2,700백만 불/3년) + (KOICA 무상협력 7백만) + (NGO 3백만 불)
= 총 2,500만 불

4. 2006년도 각국 원조 공약 현황

가. 각국의 원조 공약에 앞서 Keat Chhon 재경부 장관은 PIP 2006~2008 추진에는 NSDP 2006~2010 전체예산 규모의 약 56.5%인 총 1,975백만 불이 필요하며 (2006년 600백만 불, 2007년 650백만 불, 2008년 725백만 불), 캄보디아 정부가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초과분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 지원요청액 : 2006년 513백만불,
2007년 633백만불,
2008년 578백만불

나. 금번 원조 공여국 회의에서는 총 601백만 불의 원조공약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04년 제7차 회의 당시 공약된 504백만 불에 비해 97백만 불이 증가된 금액으로, 캄보디아 측이 지원 요청한 513백만 불을 56백만 불 초과하는 규모임.

다. 금번 회의에서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이 공약한 원조 금액은 아래와 같음(캄보디아 정부 측에서 2006년 지원 공약 금액으로 임의 산술 집계한 수치)

■ 주요원조공여국

– 일 본 : 총 115백만 불
– 미 국 : 총 61백만 불
– 프랑스 : 총 39백만 불
– 호 주 : 총 32백만 불
– 스웨덴 : 총 22백만 불
– 덴마크 : 총 14백만 불
– 캐나다 : 총 10백만 불

■ 국제기구

– EU : 총 164백만 불(무상)
– UN : 총 58백만 불
– WB : 총 53백만 불

III. 관찰 및 평가

1. 금번 회의에서는 주재국 정부의 5개년 NSDP 2006~2010 및 공공투자프로그램 (PIP 2006~2008)이 발표되었으며, 동 NSDP 및 PIP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원조공여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2006년도 공동모니터링 지표 (JMIs)가 확정됨.

■ 대부분의 원조 공여국들은 캄보디아가 달성한 경제성장 및 개혁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부패 퇴치, 천연자원 관리 및 농업분야, 공공재정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문제에서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미국은 향후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 개혁추진 성과와 지원 규모를 연계하여 실제 지원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2005년도에 총 63백만 불(USAID를 통한 지원액 57백만 불 포함) 지원

2. 한편 캄보디아 정부측은 그간 캄보디아에서 개최되어온 그간 3차례의 원조공여국(Consultative Group ; CG) 회의가 원조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정역할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고위급 정부-공여국간 조정위원회(GDCC)로 대체하는 메커니즘 개선을 선호하고 있음을 밝힘.

- 차기 원조공여국회의는 2007년 6월 당지에서 개최 예정

3. 또한 캄보디아측은 2009년 생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남서부 해안 유전개발 (미국 Shevron이 주도), 중북부 광물자원 개발(중국이 주도) 등 민간투자유치,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ASEAN 회원국의 신규차관 제공에 의한 철도 및 도로 건설 지원 용의 표명 등에 고무되어 과거 유럽(EU) 미국 눈치를 보던 입장에서 탈피, 독자적인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었음.

4. 대부분의 원조공여국들은 파리선언 등에 입각하여 캄보디아 개발전략 수립 및 이행과정 참여를 통해 각 분야별, 주제별로 특화된 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도 주재국 원조 매커니즘에 적극 참여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효율성 있는 원조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Ⅳ. 특이사항

1. 일본측은 당지 주재 대사를 수석대표로 JAICA 직원을 포함 총 6~7명이 참석하였으며, Pledge Session에서 2005년도 실제 지원실적이 당초 공약 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부각한 반면 2006년도 지원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없이 예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만 밝힘.

■ 또한 캄보디아 정부측이 기술원조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일본측은 특정기관(CDC를 의미)의 편견이 아닌지 문의하

고 현재 일본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매년 약 50~60명의 전문가 파견을 통해 기술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향후 일본의 대캄보디아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는 등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2. 특히 EU 국가 대사들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회의장을 떠나 복도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인 바, 캄보디아 정부측이 아직도 과거의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수원(受援)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면서, 특히 각종 부정부패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단속(인사조치 포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을 표명함.

3. 캄보디아 주재 북한대사도 첫날 상기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사전 참석통보를 하지 않아 일반 참가자와 함께 뒷자리에 착석하였으며, 추후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회의 이틀째부터 우리 대표단 좌석 옆에 국가 명패와 함께 자리를 준비하였으나 참석하지는 않았음.

4. 예년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상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싱가폴(옵저버)을 제외한 여타 ASEAN 회원국들도 참석하지 않았음.

[자료: 주캄보디아 대사관]

부룬디 원조 회의

1. 2.28(화) 부룬디 수도 Bujumbura에서 개최된 부룬디 원조회의(Conference des Partenaires du Burundi; Prgramme d'urgence de 2006)에는 EU, IMF, World Bank, AfDB, WFP, AU, UNDP, UN/AIDS, UNICEF, ONUB, IMF 등 개발원조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영국, 미국, 화란,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 공여국 대표 60여명(총 참가자 25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부룬디 동·북부 지역 가뭄으로 인한 기근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 식량 원조 방안을 협의한바(별첨 communique final 참조), 3.2일자 당지 일간 The Guardian지에 따르면 금번 회의를 계기로 현재까지 총 $170million 상당의 지원이 합의되었다고 함.

2. 상기 참가국가 및 국제기구들은 다양한 부룬디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서 금번 회의를 계기로 지원되는 금액과의 구분이 모호하나 현재까지 부룬디 외교부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국별, 국제기구별 대 부룬디 원조 규모는 아래와 같음.

국가/국제기구	원조 규모
EU	USD 59.5million
USA	USD 63.4million
World Bank	USD 40million
IFAD	USD 16million
Belgium	€ 31million
Nigeria	USD 0.2million
AfDB	USD 5million
IMF	USD 22million
Moroco	USD 0.1million
France	€ 4.5million
Japan	USD 8.8million
Netherlands	€ 2million
Egypt	USD 0.16million
Swiss	SFR 4million
Germany	€ 11million
Britain	£ 9million (USD 15.7million)

3. Pierre Nkurunziza 부룬디 대통령이 참석하고 Alice Nzomukunda 제2부통령(경제·사회 담당)이 주재한 상기 회의에서 부룬디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내전을 종식하고 '05.6-8 자유·민주 선거를 통해 신정부를 구성하였지

만 오랜 내전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최근 수년간의 가뭄으로 인해 최근 200여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기아 위기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부룬디가 당면한 긴급과제인 긴급식량원조, 교육, 보건, 선정(Good governance) 분야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 및 협조하여줄 것을 요청한 바, 본직은 상기 회의에서 KOICA 물자 지원사업 및 봉사단 파견, 우리정부의 ODA 증액계획을 소개하고 부룬디 정부가 요청하는 긴급 식량원조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 3.1-2 UNICEF, WFP, UNHCR 대표도 부룬디를 방문, 현지 사정을 시찰하고 최대한 지원을 약속함.

4. 최근 부룬디의 내전종식 및 민주적 절차에 따른 신정부 구성과정은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에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바, 상기 주요 공여국들의 지원규모, 아프리카에서도 최빈 개도국인 부룬디가 내부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 · 사회 재건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 최근 수년간의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기아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을 감안, 부룬디 긴급 식량 원조를 위해 USD20만불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니 적극 검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자료: 주탄자니아 대사관]

조류 인플루엔자 및 각국의 지원 동향

1. 인도네시아 조류 인플루엔자 동향

■ 3.9일 현재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는 총 21명이며 3.4일 숨진 10세 소년의 사망 원인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밝혀질 경우 22명이 될 것이라 함.

- 특히 지난 2003년 하반기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로 2005년까지 총 12명이 사망하였으나 2006년에 들어와 2개월 동안 9명이 발생하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급속히 증가되는 추세임. (치사율 75%, 총 28명 감염자중 21명 사망)
- 또한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로 감염 의심으로 치료 받고 있는 환자는 8명임.
- 주재국 보건부는 인체간 감염 사례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WHO 등 관련 국제기구는 인체간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2월에 주재국 보건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타미플루를 전국 4,000개 보건소에 보건소당 100정씩 총 400,000 정을 배포했음.

- 시티 파닐라 보건장관은 3월말까지 타미플루를 추가로 150만정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보 추진하여 총 1천 200만정을 비축할 계획임을 밝힘.

■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예산

- 바크리 복지담당 조정장관은 주재국이 향후 조류 인플루엔자의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총 US$9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동 장관은 주재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예산 배정 계획은 향후 3년간 US$6천만 정도이며 나머지 US$ 8억 4천만은 각국의 지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현재까지 국제사회에서 주재국에 지원하거나 지원 계획을 밝힌 금액은 US$ 1억 4천만 정도임.

2. 각국 지원 동향

■ WHO

–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 및 방역, 감염 감시 기술 지원 등

– 각국의 지원 자금으로 해당 국가와 협의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책 사업 추진 및 기술 지원

■ FAO

– 전문가 파견 및 각국 지원사업 기술 지원 및 자문

■ 미국 : 총 US$11백만

– 조류 인플루엔자 조기 경보 및 초기 대응 지원 프로그램

– 커뮤니케이션 및 국민인식 제고 프로그램 등

– 전문가 파견 등

■ 호주 : 총 US$15.5백만

– Tamiflu 10만정 기증, 전문가 파견, 감염 동물 처리 기술 지원

– 주재국 정부, WHO 및 FAO와 지원 프로그램 협의 중임.

■ 일본

– 아시아 지역을 위하여 US$135백만 규모의 지원 계획을 갖고 아시아 각국, WHO, FAO, OIE(국제수의 사무국)과 사업 추진 중임.

※ OIE를 통하여 국가수의 서비스, 긴급계획,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 WHO를 통하여 감시능력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 그 외 수의전문가 지속적으로 파견

■ 캐나다

– US$10백만을 지원키로 약속

– WHO 통해서 앞으로 5년간 감염 질병 대책 프로그램 추진 계획임.

■ 네덜란드

– 주로 양자 회의를 통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 농업부와 현장조사 사업 추진(백신 주사 효과성 분석 등)

■ 한국

– 조류 인플루엔자 진단시약(US$25만 상당, 2005.11) 지원

※ (주)에스디에서 주재국 농업부에 기증

■ 세계은행 및 EU

– 지난 1월 16-17일 북경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인도네시아에 US$12백만을 지원키로 약속

[자료: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스리랑카 원조동향 보고 : 2005년 12월

1. 일본

■ 동북부 지역 도로개발을 위해 40백만불 추가 지원 확정

- 일본은 스리랑카 동북부 지역의 도로개발을 위해 40백만불을 추가 지원키로 함.
- 금번 지원분 외에 일본은 이미 쓰나미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하여 180백만불(차관 100만불, 무상원조 80백만불)을 지원한 바 있음.
  - 차관 지원 내용 : 연이율 0.75%, 상환기관 40년의 지원조건으로 쓰나미 피해지역의 인프라 개발 및 Central Bank에서 쓰나미 피해 중소영세 기업들을 위해 마련한 Susahana Loan Scheme 지원
  - 무상원조 지원 내용 : 수산분야(27%), 도로개발 분야(21%), 교육분야 (20%), 기타(식수, 위생시설, 보건의료, 주택 및 전기 등)

■ 트럭 64대 지원

- 일본 정부는 스리랑카 정부의 쓰나미 피해복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픽업트럭 64대를 무상 지원
- 금번 지원되는 트럭들은 11개 District 및 53개 Divisional Secretariats에 배분되어 지방행정기구의 쓰나미 피해복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활용될 예정임.

■ JICA의 5년 과정의 현지연수 프로그램 중 1차년도 사업 종료

- JICA가 지원하는 5년 일정의 현지연수(In-Country Training Programs; ICTPs) 프로그램 중 1차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
  - 콜롬보대학 컴퓨터학과(University of Colombo School of Computing; USCS)에서 진행되었으며, 1차 수료자는 총 16명
- 동 현지연수 프로그램의 목적은 스리랑카내 IT 산업기반의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층 고용창출임.
- 현지연수 프로그램 개요
  - "Interactive Multi-media of E-Learning Content, Design and Development on Web Based Training" 등으로 24일간의 교과과정 구성

• 연수참가자는 직업훈련청(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콜롬보대학, 켈라니야대학, 스리자야와르다나푸라대학, 모라투와대학, 개방대학 등에서 추천

• 스리랑카 내국인을 위한 2개 과정이 매년 개설되며(ICTP), 단계적으로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3국 연수(Third Country Training Program)도 추진 예정임.

2. 이태리

■ 스리랑카 남부 및 동부 지역의 쓰나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총 52백만 유로 상당의 재정 지원

– 현재 교육, 의료보건 및 환경 분야 4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음.

– 특히, 15개 프로젝트가 남부 골 및 동부 트린코말리 지역에서의 학교 개발과 관련한 사업임.

3. 독일

■ 74.3백만 유로 상당의 무상원조(57백만 유로) 및 차관(17.3백만 유로) 지원협정 체결

– 17.3백만 유로의 차관을 KfW(German Reconstruction Bank)을 통해 지원하며, 동 차관은 자프나-킬리노츠치 송전망 복구 및 동북부 지역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투입 예정임.

– 기술협력 사업으로 21백만 유로의 무상원조 지원, GTZ(German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를 통해 동북부 지역의 직업훈련, 영세사업자 지원 등 분쟁지역 복구사업 실시 예정임.

– 쓰나미 피해지역 복구를 위하여 36백만 유로의 무상원조 지원, 직업훈련, 주택개발, 인프라시설 복구, 교육 및 영세, 중소기업 진흥 사업 실시 예정임.

■ 쓰나미 피해지역 인프라 복구에 15백만 유로 지원

– 독일은 독일개발은행(German Reconstruction Bank)인 KfW를 통해 바티깔로아 지역의 인프라 복구를 위해 15백만 유로를 지원키로 함.

– 금번 지원사업은 벨라아츠체나이(Valachchenai) 지역의 지역용수 공급망 등 기존 인프라 시설의 복구 및 신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안지역의 재해복구 주택건설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 독일 GTZ는 주택건설부 산하 "전국 주택개발 위원회(National Housing Development Authority;NHDA)"와의 공동작업으로 재해 후 해안지역의 주택복구를 위한 지침성격의 책자 발간(Guidelines for Post Disaster Housing in Coastal Sri Lanka)

– 동 책자는 크게 아래 두 섹션으로 구성됨.

• 해안지역 주택건설과 관련한 스리랑카 건축관련 법규 안내

• 재해복구 사업중 주택건설 부문에서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모범관행 안내

① 참여적 개발 방식, ② 정착계획, ③ 주택지구 및 가구별 레이아웃, ④ 열효율이 높은 주택 건축방식, ⑤ 지속가능한 설계, ⑥ 원자재의 효과적인 활용, ⑦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택 건축방식 등

4. 스웨덴

■ '06 ~ '07 개발협력 협정 체결

- 스웨덴은 '03년 체결한 양국간 개발협력협정(development cooperation agreement)을 갱신, '06~'07년간 23.4백만불 규모의 무상원조 지원을 확정짓고, 평화 · 민주주의 · 인권증진, 빈곤완화, 쓰나미 피해복구 지원 등 우선지원 부문 선정

5. 프랑스

■ 트린코말리 지역 용수공급 확대(the Greater Trincomalee Water Supply Scheme)를 위하여 10백만 유로 상당의 재정지원 협정 체결

- 칸탈레(Kantale) 지역 정수장 복구 및 확장, 마하웰리(Mahaweli) 강유역 취수펌프장 및 40km의 송수관로 건설
- 프랑스는 이미 쓰나미 복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트린코말리 지역의 송수관 및 배수로 등 기초인프라 복구를 위하여 64백만 유로 상당의 TIIP(Trincomalee Integrated Infrastructure Project)를 지원한 바 있음.

6. 미국

■ 향신료 산출 시범마을 개발

- 스리랑카 향신료 위원회(Spice Council)는 미국 USAID의 The Competitiveness Programme(TCP) 일환으로 마탈레(Matale) 지역에 향신료 산출 시범마을 개발 계획 수립
- 동 시범마을 개발 사업을 통해 향신료 작물을 생산하는 영세농가와 표준 규격에 맞춰 향신료를 가공하는 중앙집중화된 생산시설을 연계하는 시범 마을을 조성
- 동 사업을 통해 영세농가의 향신료 작황 수준을 경제적 자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림은 물론, 지속가능하고 수출을 목표로 하는 시장지향주의 생산농가로 개발하고, 영세농가의 집단화를 통해 가구별 생산역량을 확충,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Spice Council이 부지 제공 및 사업운영 등에 소요될 예산 일부(25%)를 부담하고, USAID가 나머지 75% 부담

■ 지방 지역 산업지구 조성사업

- 미국 정부는 지방지역의 기간산업 개발 및 이를 통한 고용창출 증대를 위하여 함반토타, 케골 및 암파라 등 3개 지역에 총 60백만불을 투입, 산업지구(industrial zone) 조성 예정
  - Millenium Development Fund로부터의 재정지원으로 전액 무상
- 지역별로 20백만불씩 투입하여 40여개 이상

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는 지방거주 노동력의 도시로의 이주를 줄임으로써, 지방도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7. 인도

■ 콜롬보-마타라간 160km에 이르는 철도 현대화 사업 지원

- 현 철로구간 개보수 및 현재 콜롬보-칼루타라 구간에 한정된 복선을 마타라까지 확장
- 철로 노후화에 따른 속도제한으로 현재 콜롬보-마타라 철로 이용시 3시간이 소요되나, 동 현대화 사업을 통해 2시간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8. UNDP

■ 지방 행정기관의 쓰나미 피해복구 역량강화 지원

- 스리랑카 남부 및 동북부의 쓰나미 피해지역 지방정부 및 기관의 쓰나미 피해복구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하여 트랙터 및 트레일러 각 63대 지원
- 금번 지원은 노르웨이와 독일 정부가 재정부담하는 CADREP(Capacity Development of Recovery Programme)의 일환으로, 동 프로그램은 효율성, 효과성, 대응성, 책임성 및 투명성 등을 포함하는 지방정부의 국정 관리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는 지방행정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이해집단의 재해복구 사업 관리 역량 및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역량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상기와 같은 물질적 지원 외에 스리랑카측 재건복구 프로그램 담당자 및 선별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참여적 개발, 프로젝트 주기관리, 재정운용기법 등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 동 프로그램은 10개의 district secretariat, 48개의 divisional secretariat, 10개의 district audit office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기관 외에도 지역별 직업훈련청 및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 등도 대상으로 함.

9. 기타

■ 건축기술 훈련원 지원

- 스리랑카 내부적으로 약 4만여명의 건축부문 기능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는 쓰나미 피해복구 작업의 신속한 추진을 어렵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FCCISL), National Construction Association of Sri Lanka(NCASL), Chamber of Skilled Craft of Koblenz 등 3개 기관은 트린코말리, 파야갈라 및 암파라 지역에 3개의 건축기술훈련원을 지어 실업상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축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킬 기능인력을 양성키로 하였음.

- 동 85만 유로가 투입되는 금번 사업은 네덜란드와 독일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 예정임.
- 2년간의 훈련과정은 목공, 철제가공, 설비, 에어컨, 도료, 전기배설 등에 대한 기술훈련으로 구성되며, NCASL 출신의 강사진이 독일 직업훈련기술 수준의 교과과정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임.

[자료: 주스리랑카 KOICA사무소]

스리랑카 원조동향 보고 : 2006년 1월

1. UAE

■ UAE 쓰나미 피해지역 주택 1천호 복구 지원

- UAE의 적신월사는 UN-HABITAT를 통해 주재국 쓰나미 피해지역인 골, 트린코말리, 암파라 등 지역의 주택 1천호를 복구 및 건축키로 하였음.
- 금번 지원되는 UN-HABITAT의 주택사업은 실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의사결정 단계에서 최우선 고려하는 "community-based approach"를 모든 프로젝트에 채택,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별 조직이 건축의 제반 단계별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것임.

2. 일본

■ JBIC, 지방 도로개선사업에 50백만불 지원

- JBIC은 지방지역 도로개선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 50백만 불 규모의 지방도로 개선사업(Provincial Road Improvement Project)을 추진키로 함.
- 캔디, 마탈레, 누와라엘리야, 케골, 라트나푸라 등 지역내 총연장 600km에 이르는 지방도 및 70개 교량의 개량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약 400 만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로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의 직장, 학교 및 병원 등 시설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도로개선에 따른 유통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의 상업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것임.

■ 쓰나미 피해지역 학교 지원

- 일본은 쓰나미 피해지역 학교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파야갈라 지역의 Roman Catholic Girls School 교사 신축사업(약 70만불 상당)을 추진하고 있음.

※ 금번 신축교사는 강당, 실험실, 교무실, 직원실, 컴퓨터실 등을 갖춘 3층짜리 건물로 JICA가 설계를 담당하였으며, 감리 등을 포함한 사

업관리는 JICS(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s)에서 수행

- 일본은 동 학교 외에도 해안가의 쓰나미 피해 지역에 13개 학교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JICA 연수생동창회는 스리랑카 혈액수혈국(National Blood Transfusion Service)과 공동으로 "Blood Donation Campaign"을 개최하였으며, 동 행사에는 연수생동창회 회원, 일본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음.

3. 세계은행

■ 도로 및 교육사업에 160백만불 지원

- 세계은행은 스리랑카 도로개선 사업에 차관 100백만불 및 교육개선 사업에 무상원조 60백만불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이는 세계은행의 대스리랑카 지원액 중 최고임.
- 도로개선 사업의 경우, 620km에 이르는 니땀부와-캔디, 골-데니야야 및 파데니야-푸딸람 구간의 국도 및 635km에 이르는 우바 및 남부지역 지방 도로의 유지보수 및 복구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스리랑카 정부는 세계은행에서 차관 지원되는 100백만불과는 별도로 디젤 및 페트롤에 대한 특별세 부과를 통해 도로개발신용기금(Road Development Trust Fund)을 조성하고 스리랑카 자체적으로 2006년도 30백만불 및 2010년도 46백만불을 별도로 부담하여 2006년도부터 6년간 총 연장 600km(375마일)에 이르는 국도 및 지방도로 확충사업 추진 예정임.

■ 직업훈련 및 도시 기반 인프라 확충사업에 70백만불 차관 지원

- 직업훈련 분야 지원사업(20백만불)

※ 직업훈련 교육에서의 질적수준 개선,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와 직업훈련교육시스템(Technical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System)의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직업훈련교육개발(Technical Education Development) 프로젝트 추진 예정이며, 기술/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격차 해소를 통한 원활한 기능인력 양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라트나푸라, 아누라다푸라, 바둘라, 캔디, 쿠르네갈라, 마라다나 등 6개 지역 소재 기능대학(Technical College) 개선사업 및 직업훈련기술종합대학(University of Vocational Technology) 설립 등 2개의 주요사업으로 구성되며, 동 사업에는 첨단장비 지원 및 주재국 내/외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

- 지방소재 도시지역 기반인프라 확충사업 (50백만불)

※ 지방 지역 중소규모 도시들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 개선 및 도시관리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용수공급, 위생시설, 도로, 상하수 시설, 폐수처리 및 쓰레기 관리, 기초보건 시설, 공공도서관, 지역주민 여가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 및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4. 월드비전

■ World Vision Lanka, 쓰나미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식수 지원

- 월드비전은 매일 105,000리터의 식수를 발

라피티야, 카투월라, 히까두와 등 쓰나미 피해주민 임시주거 지역의 공용식수대 및 가정에 지원하고 있음.

구 분	모국어 교과 기준학점 이수율	수학 교과 기준학점 이수율	영어 교과 기준학점 이수율
도시 지역 평균	51%	52%	23%
농어촌 지역 평균	34%	35%	7%
스리랑카 전역 평균	37%	38%	10%

자료 : National Assessment of Grade 4 Learning Outcomes; National Education Research and Evaluation Center, University of Colombo

- 월드비전은 동 식수공급 사업에 매월 약 1만불을 투입하고 있으며, 동 사업과는 별개로 해당 지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National Water Supply and Drainage Board"과 공동으로 식수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5. 기타

■ 교육분야 5개년 개발계획

- 스리랑카 정부는 상기 언급한 바 있는 세계은행 지원액 60백만불을 투입, 교육분야 5개년(2006-2010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관련 세계은행은 스리랑카 정부의 동 개발계획 실행프로그램의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할 계획임.
- 스리랑카의 경우, 기초교육(1-5학년)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기회의 확충측면에서 볼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5년 과정 순 이수율 : 남녀 모두 95% 이상
- 이에 향후 5년간의 교육목표는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염두에 두고, 초등 (1-9학년) 및 중등(10-13학년) 교육을 망라하는 교육개발계획 수립(Comprehensive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Framework and Program for the period 2006-2010)
- 스리랑카 정부는 현 수준에서 취학율 또는 등록율 확충보다는 학업성취도 향상을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모국어, 수학 및 영어 등 기초학력에 있어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진급하지 못한 학생비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며, 이와 관련, 도농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동 5개년 개발계획의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음.
  ① 초등,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공평한 교육기회 확대
  - 지방지역 소재 학교의 시설확충 및 과학·영어 등 교과과정의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이 가능하도록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
  -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 초, 중등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과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를 통한 고용기회 확대

  ②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제고
  - 국제동향을 감안한 교과과정 재구축 및 개선
  - 교사의 교수능력 강화
  - 학사 검정 시스템(시험 등) 현대화

  ③ 교육에 있어서의 경제효율성 및 자원배분의 공정성 강화
  - 국가 및 지방별 교육시스템에 대한 다년간 계획수립, 실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중기 예산계획 수립
  - 교육예산의 공정한 집행 및 투명성 확보를 위

하여 예산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PEQETS;Public Expenditure and Quality Education Tracking System)

④ 교육행정역량 및 행정서비스 강화

- 교장 및 교사 등 인력의 역량을 제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력 균형적이고 학교중심적인 학교경영 및 학교 발전을 위한 이상적인 모델 구축
- 제도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 및 역량분석
- 교육현장에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전략 실행

■ 쓰나미 재건기금 관련 NGO들의 도덕적 해이

– 주재국 주택개발부에 따르면, 상당수의 NGO 단체들이 각 국 정부 및 기타 재원으로부터 모금한 쓰나미 피해 기금의 사용에 있어 불성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함.

– 주재국 정부와 쓰나미피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총 25개의 단체중 일부 NGO들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리랑카를 떠나 본국 및 파키스탄 등 인접국에서 기금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 하며, 이에 따라 주재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NGO들의 주재국내 사업추진에 있어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대상 NGO를 선별해 나갈 것이라 밝힘.

[자료: 주스리랑카 KOICA사무소]

스리랑카 정국동향

1. Burns 미국무부 정무차관보 주재국 방문

■ Nicholas Burns 미국무부 정무차관보는 연호 방문차 1.22(일) 스리랑카에 도착한 이후 Mahinda Rajapaksa 대통령, Mangala Samaraweera 외교부장관, Ranil Wickremesinghe 야당지도자 및 당지를 방문중인 Erik Solheim 노르웨이 국제개발장관 등과 면담함.

■ Mahinda Rajapaksa 대통령은 Burns 차관보에게 스리랑카 정부의 평화협상 재개 노력, 특히 지난 1.19 전체 정당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조속한 회담재개에 합의한 점 등을 설명하고 미국정부가 LTTE로 하여금 폭력을 포기하고 협상에 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함.

- Burns 차관보는 LTTE측이 최근의 폭력 급증 이유로 스리랑카 정부하 준군사조직(paramilitaries) 활동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 스리랑카 정부가 그러한 조직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Burns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LTTE는 폭력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At present the LTTE is using violence as its political weapon)"고 주장하고 LTTE는 폭력을 중지하고 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함.

■ Burns 차관보는 "함께 단결하여 평화를 지원하고 스리랑카 원조공여국 공동의장국에게 평화를 위해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메세지를 보내는 것은 스리랑카의 모든 우방국들의 의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미국정부는 스리랑카 정부가 미래의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 질 수 있도록 군사지원, 군인력의 훈련 및 양국 군대간의 군사훈련 등을 통하여 스리랑카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함.

■ Burns 차관보는 스리랑카 정부는 타밀측의 정당한 불만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미국 정부는 스리랑카 정부와 LTTE 양측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평화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

록 스리랑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함.

■ Mangala Samaraweera 외교부장관은 Burns 차관보 방문계기 오찬 연설을 통해 지난 25년 동안 LTTE를 협상에 참가토록 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지만 Rajapaksa 대통령은 종족갈등을 협상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확약을 공개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으며 평화를 위해 좀 더 노력할 준비가 되어있다(the Government of President Mahinda Rajapaksa is still committed to find a negotiated settlement to the ongoing conflict. In fact, the President has openly repeated, is still ready to walk that extra mile for peace.)고 설명함.

■ Burns 차관보는 Solheim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미국정부는 스리랑카 정전협정감시단(SLMM)과 함께 노르웨이 정부 및 Solheim 장관의 스리랑카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

2. Solheim 노르웨이 국제개발장관 주재국 방문

■ Erik Solheim 노르웨이 국제개발장관은 1.23(월) 스리랑카에 도착함.

■ Solheim 장관은 1.23(월)~1.24(화) Mahinda Rajapaksa 대통령, Ranil Wickremesingeh 야당지도자 및 정전협정감시단장 면담, 1.25(수) Prabhakaran LTTE 지도자 면담 등이 예정되어 있음.

■ Solheim 장관과 Prabhakaran 간의 회담이 스리랑카 평화협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큼.

3. LTTE의 무력도발 지속

■ 1.23(월) 오전 스리랑카 동부 Batticaloa에서 도로 순찰 중이던 군인들이 원격조정 클레이모어 공격을 받아 최소한 3명의 군인이 살해되고 2명이 부상당함.

■ 또한, Batticaloa 지역 Arasadi 교차로에서 LTTE 요원이 경찰초소에 수류탄을 투척하여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이 중상을 입음.

[자료: 주스리랑카 대사관]

Ⅲ. 기　　타

1. 지역연구

2. 개발협력 관련 국제기구 소개

3. 개발 NGO 소개

방글라데시의 경제현황 및 빈곤경감전략(PRSP)

이 정 욱 / KOICA 방글라데시 사무소장

Ⅰ. 최근 경제현황 및 빈곤문제
1. 최근 경제현황 ····· 78
2. 빈곤 문제 ····· 80
Ⅱ. 방글라데시 빈곤경감전략 보고서(PRSP)
1. 개 요 ····· 84
2. PRSP 수립관련 고려사항 ····· 85
3. 빈곤경감 추진전략(PRSP)- 기본전략의 설정 ····· 88
전략 1- 빈곤층을 위한 거시경제 환경 조성
4. 거시경제 개발 ····· 89
5. 무역활성화 및 해외근로자 송금 확대 ····· 92
전략 2- 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분야별 경제성장 촉진
6.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 발전 ····· 95
7. 농업성장 및 식량 안보 증진 ····· 97
8. 소액 대출(micro-credit) 활성화 ····· 98
9. 인프라 개발 및 개선 ····· 98
10. 빈곤경감을 위한 관광사업 개발 ····· 100
11.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지원 ····· 101
전략 3- 효과적인 사회안전 대책 프로그램
12. 빈곤경감을 위한 재해 관리 및 안전 대책 ····· 102
전략 4- 인적 자원 개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3. 교육 분야 ····· 103
14. 보건위생 분야 ····· 107
보조전략- 비주류의 사회참여 및 좋은 통치(Good Governance)
16. 여성권리 및 여성 참여 확대 ····· 110
17. 좋은 통치(Good Governance) ····· 111
Ⅲ. PRSP 평가 및 향후 전망
1. 향후 경제전망 및 PRSP 추진 ····· 113
2. 전략의 효율성 평가 ····· 114
3. MDGs 와의 연계 ····· 115

I. 최근 경제현황 및 빈곤문제

1. 최근 경제현황

가. 거시경제 현황

방글라데시 경제는 FY '04년 5.3%, FY '03년에 5.2%에 이어 FY '05년에도 비교적 고성장인 5.4%성장의 실질 GDP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경제성장은 '04년 7월 발생한 심각한 홍수피해와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제유가 및 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04년말 다자간 섬유협정(MFA) 종료에 따른 섬유수출 경쟁력 악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룩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동 기간중 제조업과 건설, 서비스 부문에서 지속적인 국내외시장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농업부문에서의 부진한 성과를 상쇄시키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 방글라데시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DP 추이〉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성장률(%)	4.9	5.9	5.3	4.4	5.3	6.3	5.4
1인당 GDP	354.1	367.3	371.1	372.0	389.0	418.0	445.0

자료: World Bank, Bangladesh Development Series, 2005

〈 방글라데시 거시경제 지표 1984 ~ 2004 〉

구 분	1984	1994	2003	2004
GDP(10억불)	19.7	33.8	51.9	56.6
총자본율/GDP대비	15.9	18.4	23.4	24.0
수출액/GDP대비	3.3	9.0	14.2	15.5
국내저축/GDP대비	6.2	13.5	18.6	19.5
총 저축/GDP대비	16.2	18.8	24.9	25.4
재정수지/GDP대비	-1.1	-0.3	0.1	0.3
외채이자 지급/GDP대비	0.6	0.5	0.3	0.3
총 부채/GDP대비	28.7	46.3	36.2	35.4
부채비율/수출액 대비	17.7	12.9	6.4	8.0
외채/GDP대비	..	..	24.7	..
외채/출액 대비	..	..	122.0	..

FY '05년의 GDP 성장은 개인소비와 수출의 확대, 50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해외근로자의 송금, 정부와 선진원조기관의 홍수피해 구호기금방출, 외국인 직접투자를 비롯한 개인투자의 급격한 성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내저축율은 FY '04년 GDP의 19.5%에서 FY '05년에는 20.2%로 증가하였으며 개인투자 역시 FY '04년 GDP의 17.8%이였던 것이 FY '05년 18.5%로 증가, 경제성장이 국내소비와 저축, 섬유업 수출에 의해 견인되며 성장내용도 견실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투자와 저축비율의 증가는 미래성장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주목된다.

〈 방글라데시 주요 경제지표 2005 〉

- ○인구 : 14,100만
- ○1인당 국민소득 (GNI) : 440불
- ○국내 총생산(GNI) : US$ 600억
- ○실질경제 성장률 : 5.4%
  - 90년대 평균성장률 4~5%에 비해 높은 수준
- ○물가 상승률 : 6.5%
- ○국내 저축율(GDP대비) : 20.2% 수준
- ○총투자율(GDP대비) : 24.4% 수준
- ○국내 실업률 : 18.5 %
- ○정부예산: 102억불(정부예산의 약 20%는 외국원조로 충당)
- ○총수출 : US$ 85.7억
- ○총수입 : US$ 118.7억
- ○경상수지 : US$ 32.95억 적자
- ○외환보유고 : US$ 30억불(05.5)
- ○해외근로자 국내송금 : 38.4억불(매년 10%이상 증가)
- ○환율 : U$1 = TK 67.5(2005.10월)로서 지속적 평가절하 추세
- ○대외부채 : US$178억불(비교적 부채율이 낮은 최빈 개도국)
- ○부채/GDP : 비율은 29.3%(90%가 장기대부 원조자금)
- ○평균수명: 62세(04년)

나. 재정 건전성 및 세수 개선

방글라데시의 재정적자 규모가 FY '05년도의

경우, GDP대비 3.5% 수준으로 FY '04년 3.2%, FY '03년 3.4%와 비교시 약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의 홍수피해 예산집행과 저조한 세수실적 때문으로 파악된다. 방글라데시는 만성적 세입부족으로 세수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토착화된 세무관련 비리로 징수율은 30%에 불과하며, 매년 정부는 세출예산의 약 20%를 외국 원조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세입예산이 GDP의 10%도 안될 정도로 매우 낮고 136백만 인구중에서 납세자는 아주 소수이다. 이는 방글라데시 국세청(NBR)에 대해 심각한 도전과제를 제시한다. 허술한 납세제도는 부정부패의 커다란 동기를 부여해주는 기초가 된다. 이는 정부에 개발사업과 공공서비스 지출에 충분한 재원을 공급하지 않으며, Rent-seeking(정부규제에 따른 독점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뇌물제공 및 로비하는 현상) 기회를 만들면서 공공서비스의 집행과 산업인프라의 구축을 방해한다.

정부는 재정적자폭을 GDP대비 0.2% 이내로 줄이기 위해 국세청(NBR) 및 조세행정 개선을 주요 PRSP 과제로 상정하고 있으나, 구조적 부패를 뿌리 뽑는데는 상당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예산(약 102억불)의 48%를 차지하는 개발사업예산(ADP) 집행율은 계획대비 16.8%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진국들이 원조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절차의 투명성(조달규정 개정)을 요구하면서 국내관련법 정비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외채 및 인플레이션

방글라데시의 부채규모는 GDP의 30% 수준으로 대부분이 세계은행 등 원조자금의 저리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 저소득국가에 비교시 동 비율은 낮은 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30억불) 및 수출규모(85억불)를 고려시, 중장기적으로 동 부채규모는 유동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 유동성 안정화를 위해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경상수지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경제관련 지표 중 우려되고 있는 것이 물가지수로 2005년의 경우 인플레율이 7.9%를 보였다. 물가상승율이 7.5%를 넘은 것은 1999년 6월이후 처음인데, 2004년 5.5%, 2005년 초 7.3% 등 인플레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과거 홍수로 인한 농업부분에서의 일시적 물가상승과는 다르게 전산업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석유관련 제품과 아만(Aman) 등 빈민층이 이용하는 수입쌀 가격의 급등을 불러와 서민들의 생활고를 자극하였다. 인플레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서민들의 생활고는 물론, 이자율의 상승으로 기업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염려된다.

라. 향후 경제성장 과제

방글라데시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즉,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과 수출주력부문인 섬유산

업이 다자간섬유협정(MFA) 폐지(쿼터제 폐지 및 자유경쟁에 근거한 수출시장 확보)에 따라 해외시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2007년 1월 총선을 대비한 국내정치 혼란 및 정치폭력(이슬람 원리주의자에 의한 폭탄테러 빈발),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행정 등이다.

국제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원유가는 방글라데시의 성장잠재력을 해치고,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외환사정 악화 등 방글라데시와 같은 저소득국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일으킨다. 치솟은 국제유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외환상환 압력을 가중시키며 달러화 유동성을 악화시켜 다카화 평가절하를 유발하고 있다. 다카화는 05년1월 이후 1년간 달러화 대비 15% 이상 절하되며 수입품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물가안정을 위하여 원유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나 이는 방글라데시 국영석유회사(BPC)의 부실을 촉진하고 공공채무를 증가시키는 등 국가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2개월간 국내유가는 국제원유가 상승분(86%)에 비해 매우 적게(30%) 상승했는데, 이로 인한 FY06년 국가재정 손실이 300억TK(4.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섬유산업은 방글라데시 총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국가 주력 수출산업으로, 다자간 섬유협정(MFA) 종료에 따른 방글라데시 섬유업체들의 수출경쟁력 확보 여부가 과제로 남아 있다. 2005.1 MFA 폐지이후 몇 달간 실적을 보면 대미 직물수출이 급격히 증가, 2005년 상반기중 전년 동기대비 21.5%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은 상당폭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니트웨어 수출이 강세를 보이는 등 섬유업 전체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업자들의 경쟁으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MFA 종료이후 방글라데시 섬유업이 지속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 리드 타임(기획에서 제품화까지 소요시간) 축소, 노동환경 개선 등 3가지 과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우수한 기술력과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섬유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내시장을 정비하고, 경쟁국가들보다 1개월 이상 긴 리드타임을 줄이는 노력(수출관련산업의 수직 계열화로 리드타임과 제조원가 절감), 선진국 대부분이 섬유제품 수입시 여성 및 미성년 고용금지 등 국제노동협약 준수여부를 검증하는 점을 고려한 노동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 밖에도 경제발전의 병목 요인들, 예컨데 인프라(에너지, 항만, 도로 등) 개선 및 과학기술과 기초 기술을 향상시키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관계 증진, SME(중소기업) 부문의 육성 등이 주요한 과제로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2. 빈곤 문제

가. 빈곤경감 노력과 성과들

1971년 독립한 방글라데시는 극도로 빈약한 국가재정, 정치불안 및 폭력, 공공부문 비효율, 홍수 등 만성적인 자연재해와 이러한 요인들 로 인하여 고착된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들에 맞서 상당히 긍

정적인 발전을 성취했다. 방글라데시는 저소득 국가중 1990년 초반 이후 매년 긍정적인 1인당 성장을 지속하는 몇몇 나라 중 하나이다.

빈곤상황의 개선을 보면, 1990년 60%이였던 빈곤율(poverty rate)이 2000년 50%로 감소되었고, 1990년 이후에는 빈곤율이 매년 1%씩 감소하고 있다. 유엔은 저소득국(Low-income countries) 중 최근 5년간 경제성장율이 평균 5%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소수의 나라중 하나로 방글라데시를 주목하고 있다.

〈 방글라데시 빈곤 추이비교 1992 ~ 2000 〉

구 분	상위 빈곤선(소득: $1/일)			하위 빈곤선(소득:$1미만/일)		
	1992~92	1995~96	2000	1991~92	1995~96	2000
빈곤인구						
국가	58.8	51.0	49.8	42.7	4.4	33.7
도시	44.9	29.4	36.6	23.3	13.7	19.1
농촌	61.2	55.2	53.0	46.0	38.5	37.4
빈곤 GAP						
국가	17.2	13.3	12.9	10.7	7.6	7.3
도시	12	7.2	9.5	4.9	2.6	3.8
농촌	18.1	14.5	13.9	11.7	8.6	8.2

Source : Poverty in Bangladesh : Building on Progress : June 2002

한편, 방글라데시 사회개발 지표(Social Development Index)의 개선 도 괄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남녀 취학률은 100%에 근접하고 있으며 중학교 취학률도 독립이후 2배나 향상되었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이미 중학교와 초등학교 남여입학 성균형(gender parity)에 있어서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충족시켰다.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이후 아동사망률이 반감(半減)했으며 평균 기대수명은 15년(46세 → 61세) 이상 증가하였다. 유아와 아동 사망률은 1972년 각각 천명당 140명과 95명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60명과 30명으로 개발도 상국중 가장 빠른 감소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방글라데시와 몰디브는 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아, 아동 사망률 감소에 있어 그들의 MDGs를 달성하는 유일한 나라들이 될 것이라고 유엔보고서는 지적하였다. 가족계획 성과에 있어서도 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가 1975년 6.3명에서 3.3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방글라데시의 고질병중 하나였던 인구 성장률을 1990년 중반까지 년1.5%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비록 방글라데시가 종종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있는 불행한 나라로 여겨지지만 성장률과 실제 사회개발의 성과면에서 적지 않은 열매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방글라데시는 동 지역 여타 저소득국가와 비교시 사회개발 측면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 서남아시아 국가별 보건지표 개선 비교 1990 ~ 2000〉

국가명	아동영양결핍 감소율(%)	산모 사망률 (만명당)출생율(%)	출생율(%)	초등교육 진학률(%)	아동예방주사 접종률(%)	여성취업률(%)
방글라데시	-52	380	-29	59	85	68
인도	-29	540	-24	4	70	45
파키스탄	*	500	-22	*	67	39
네팔	-29	740	-23	19	78	58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 방글라데시 사회개발 지표 1970 ~ 2000 〉

구 분	년도별 증감 현황			지역/국가별 비교	
	1970-75	1980-85	1994-00	남아시아	저소득국(LIC)
인구총					
인구(백만)	75.6	97.1	131.1	1,335.1	2,459.8
인구성장율(%)	2.6	2.6	1.7	1.9	2.0
도시인구(%)	9.8	17.0	24.5	28.4	31.9
출산율(가임 여성1인당)	6.6	5.3	3.1	3.3	3.6
빈곤층(%)					
국가 평균	..	..	35.6	..	..
도시	..	..	14.3	..	..
농촌	..	..	39.8	..	..
소득					
1인당 GNI(US$)	200	200	370	440	410
소비자 물가지수(1995=100)	..	..	129	142	140
식량물가 지수(1995=100)	..	52	117	..	..
소득/소비 지출(%)					
Gini 계수	..	..	33.6	..	..
상위 25% 소득/소비지출(%)	..	..	8.7	..	..
하위 25% 소득/소비지출(%	..	..	42.8	..	..
보건,교육분야 공공지출					
보건예산(%, GDP)	..	..	1.7	0.9	1.2
교육예산(%, GDP)	0.8	1.4	2.4	3.0	3.4
사회복지, 안전예산(%, GDP)	..	..	..	..	..
초등학교 입학율					
전체	50	56	104	..	..
남자	66	65	106	..	..
여자	33	47	102	..	..
안전식수 이용율(%)					
전체(인구)	..	..	97	87	76
도시	..	..	99	92	88
농촌	..	..	97	85	70
예방주사 접종율(%, 1세미만)					
홍역	..	1	71	53	57
DPT	..	2	72	57	57
유아 영양실조율(%, 5세미만)	..	68	61	49	..
기대수명					
전체	46	52	61	62	59
남자	47	52	61	62	58
여자	45	51	62	63	60
사망율					
영아사망율(천명당)	138	114	60	73	76
5세미만아 사망율(천명당)	239	173	83	96	115
성인(15-59)					
남자(천명당)	473	383	278	227	294
여자(천명당)	486	388	272	212	261
모성사망율(십만명당)	..	..	600	..	..
안전출산율(%)	..	5	14	..	..

나. 현존하는 개발과제들

빈곤개선의 성과와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개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6,500만명이 아직도 빈곤선(poverty line) 아래에 있으며 하루 $2미만의 소득을 얻고 있는 빈곤인구가 전체 인구의 84%를 점하고 있다. 1인당 GDP 수준은 유엔의 조사대상국 201국중 174위에 머물러 있으며 문맹률(15세이상)은 60%에 육박하고 있다. 비록 방글라데시가 남아시아 지역에서 아동 영양 결핍율과 산모사망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나 남아시아 지역이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고 개도국 가운데 동 지표가 가장 열악한 지역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소득의 지역편차 및 양극화 현상도 심각하다. 1-3세 아동의 반 이상이 저 체중아이며, 성인 여성의 40%이상이 영양부족(실조포함) 상태에 있기도 하다.

한편 신생아 출산시 전문적인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저소득층의 경우 1.5%미만이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22%로 그 격차가 심각하다. 교육의 기회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부실하고 중도 탈락율이 높아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마치는 학생이 10%미만일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무엇보다 방글라데시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별히 법질서의 집행이 권력과 유관하여 자의적이며 공공조직은 각종 이권과 결탁하여 비리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나라에서 공공서비스는 뇌물없이는 적기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서비스 공급과 수요자 모두 뇌물을 주고 받는데 익숙하다. 국제투명성 기구(ITO)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5년 연속 세계 제 1의 부패국가로 지목되었으며 당분간 이는 개선의 전망이 없어 보인다. 세계은행의 2002년도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부패, 법질서 유지 측면에서 1990년 조사보다 후퇴하였으며 조사대상국 209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였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는 방글라데시의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쳐 장기간 해외자본 유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방글라데시 정부도 최근 선진 공여국의 도움으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은 공공 행정, 조세운영, 조달, 회계제도와 같은 공공부분 효율성 향상 및 부패방지에 있으며 거버넌스 달성을 위하여 최근 부패 방지위원회(ACC)를 설치하였다.

다. 방글라데시내 주요 빈곤 결정요소 및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방글라데시내 주요 빈곤 결정 요소를 10가지 정도로 분석하였다. 주요 요인은 아래와 같다.

1) 전기

전기 연결이 되지 않는 가정이 전기 연결이 된 가정보다 더 가난 해 질 가능성이 높다.

2) 여성보조금

여성에게 부여하는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은 빈

곤 삭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장의 문자해독률

문자해독률과 빈곤은 반 대칭 상관관계로, 문자해독률이 높은 국민일수록 빈곤에서 멀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4) 기술 취득률

기술취득및 기술력 향상 역시 빈곤 에서 벗어나는데 유용한 요소로 나타났다.

5) 토지소유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 것은 방글라데시에서 빈곤 삭감에 매우 중요하다.

6) 가족 구성원 수

가족 구성원의 수가 높을수록 더욱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인구성장률 감소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방글라데시내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① 노동력 활성화

빈곤층의 대부분에게는 노동이 가장 주된 자산이자 수입원이라 할 수 있다. 빈곤층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일자리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농업 과 비농업분야에서의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② 기술과 교육

기술과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빈곤층 노동자의 경제활동 참여 범위를 축소하고 있으며, 직업선택권도 좁아지게 하고 있다. 기술 훈련과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

③ 기초 인프라

전력, 도로 등 기초 인프라는 빈곤계층의 수입과 빈곤 삭감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 시설의 부족, 전기 연결의 실패가 빈 곤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④ 공공 서비스 및 시장이용 확대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시장이용의 부족은 빈곤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들이다. 극 빈곤층에게도 공공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제공 확산 및 수혜층 확대, 빈곤층의 시장(market) 접근, 이용율 향상 등이 불평등 및 빈곤의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II. 방글라데시 빈곤경감전략(PRSP) 보고서

1. 개 요

방글라데시 정부는 1971 독립이후 자국의 중장기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으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지난 아와미 정권 (Awami League) 시절까지 제5차 경제개발계획('97.7.1~'02.6.30)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2001.10월 출범한 현 BNP정부는 제6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대신 빈곤완화전략 보고서의 초안으

로서 '잠정 빈곤완화전략' (I'PRSP: Interim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를 작성하여 왔는데, 동 보고서에 정부의 빈곤완화 및 사회개발을 위한 중기 계획을 열거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정식 빈곤경감보고서 마련을 위하여 2003.4 재무부내에 전담팀을 발족시켰으며 여기에는 재무관료뿐 아니라, 19개 부처의 관계자와 세계은행등 원조기관, 학계, NGO 및 시민단체 등이 망라되었다.

2005년 10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빈곤경감 가속화를 위한 방글라데시국가전략' (원제:Unlocking the Poverty: National Strategy for Accelerated Poverty Reduction)을 발표하였으며 그해 11월 수도 다카에서 빈곤경감전략 집행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 동 전략에 대한 타당성 검증,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였다. 원조기관들은 동 전략의 수립과 진행 및 평가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방글라데시 정부의 자립역량 및 자율성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였다.

동 PRSP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2015년까지의 MDGs 과제 달성을 감안하며 자국 상황에 따라 장기적 개발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3년('06~'08)단위의 단기 운영계획(rolling plan)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서방의 원조기관과 방글라데시 정부는 PRSP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위해 매년 2차례 집행 및 평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PRSP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있다. 1장은 방글라데시의 전반적인 빈곤 현황에 관한 자료로 방글라데시의 주요 빈곤 경향, 주요 빈곤 요소, 빈곤 대응 방안과 함께 방글라데시의 빈곤 현황을 수치로 나타내어 대략적인 방글라데시 빈곤상황을 알 수 있다. 2장은 PRSP 전략 수립시 고려해야 할 주요 현안에 관한 내용으로 17개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3장은 PRSP 개발의 주요 13개 분야(거시경제 발전, 무역 및 송 금액 증가, 민간분야/중소기업 개 발, 농업성장 및 식량안보, 소액대출, 인프라개발, 관광개발, 정보통신 및 생명 과학개발, 안전대책 프로그램, 교육, 보건, 여성권리 고양, 선정)의 전략 수립,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소개 및 성과도를 점검하고 PRSP의 목표와 활동 계획들을 4가지 전략과 1가지 보조전략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4장은 목표달성성취 및 비용에 관한 자료로 몇 가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목표치와 달성 비용을 보여준다. 5장은 빈곤삭감 전략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자료로, 평가의 중요성, 과정, 절차 그리고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하 보고서 내용을 요약정리).

2. PRSP 수립관련 고려사항

방글라데시 정부가 PRSP 수립을 위한 전략 구상시 고려해야할 요인들은 아래와 같다.

1) 과거의 성과 평가

방글라데시는 독립이후 빈곤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힘써왔다. 특히 초등교육, 여성 교육, 예방접종, 소액대출, 여성 경제분야 참여, 인구조절 정책 등의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PRSP는 위와 같은 과거의 성과를 고려하며 수혜자 및 수혜지역 확대, 프로그램의 확장 등 다음의 개발과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발과제 정체현상 극복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인구정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으나 더 이상의 개선 없이 정체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임보급률의 확대로('70년대 중반 7%에서 2000년 54%)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7명에서 2003년 3.3명으로 감소되었으나 이 수치는 1993/94년부터 3.3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체현상 타파를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3) 정책의 실질 집행율 제고

개발사업의 실질 집행율이 저조한 점이 개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빈곤삭감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이 부적절한 계획 등으로 착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프로젝트의 실패가 방글라데시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프로그램 이행능력(정부,NGO등 사업수행자) 향상이 중요한 전략적 도전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선, 예산 미확보 문제와 사업계획의 미숙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4년 동안 개발프로그램의 집행률은 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중 15%의 프로젝트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는 공무원 및 개발사업 수행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및 동기부여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구체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의 부재도 거론된다.

4) 개발사업의 결과 중시 – 취업율 등 향상

빈곤경감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시 '취업률' 향상은 빼놓을 수 없는 이슈로, 개발사업이 1) 실질임금의 향상 2) 자영업 활동 확대 3) 노동생산성 증가 4) 농산품 및 무역증진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여성권리 강화 (Empowerment for women)

정부는 그동안 여성권리 신장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초중등 교육에서 여성참여율이 확대되었으며, 경제활동분야에서의 여성참여율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기관, 경찰서, 법원, 시장, 도로(공공장소) 등 많은 곳이 아직도 반여성 친화적이며 주요 분야에서의 여성 참여율은 여전히 낮아 여성권리 강화와 여성참여 프로그램 확대, 여성 노동 생산력 확대노력 등 각 분야에서의 여성권리 신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6) 소액 대출 프로그램 향상

소액대출(micro-credit) 프로그램은 빈곤경감 대책 중 가장 뚜렷한 성과를 거둔 분야의 하나다. 이는 방글라데시 빈곤경감 프로그램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효자 프로그램으로, 대출제도 개선 및 집중은 빈곤경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개선과제로는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한 효율적 운영방안, 절대 빈곤층까지로 수혜층 확산,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소액 보험제도와 같은 다른 상품과 연계,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 등이 고려 가능하며, 소액대출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2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는 현행 소액대출 금액(재원) 확대이며, 둘째로 지역별(소득수준별) 맞춤 대출 상품의 개발이다.

7) 빈곤층과 여성을 위한 정치

빈곤경감 정책이 가장 '요구' 되는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분석하여 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집중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여성과 아동을 주 수혜층으로 선정하고 생활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8) 개발사업의 모니터링 기준 설정

주요 빈곤경감 관련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결과에 의해 평가받으므로, 기준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및 정책 이행부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정책행동 지표, 결과지표, 중간점검 지표를 분리하여 감시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9) 교육의 질 확보

정부는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빈곤경감정책의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성과 측정과 교육 이수율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초등교육 이수자의 1/3이 언어능력과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Education Watch 2002 보고서). 또한 중등교육 이수자의 40%만이 10-12학년 시험에 합격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및 기술 · 직업교육의 질은 더 낮아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아동권리 향상 문제

방글라데시는 아직 법적으로 '아동' 의 정의조차 일정하게 제시하지 못 하는 수준이다. 많은 수의 아동이 보건서비스, 적절 영양 섭취, 위생, 식수, 안전문제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을 위한 법 제도 이행률도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 전체 노동력의 10.1%가 아동 노동력으로 나타났으며, 길거리 여아들이 성매매 및 밀수에 희생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권리 신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11) 토지정책 및 토지 행정개혁

방글라데시처럼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적은 토지를 소유한 나라는 효과적 토지운영이 중요하다. 방글라데시는 설상가상으로 극소수 인구가 토지를 점령하다시피 소유하고 있어 토지분야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토지개발 정책' 을 도입하여 현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토지의 이용율 향상 및 농촌토지 감소 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정부소유 토지, 버려진 토지, 수용토지 등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토지 정보은행' 을 설립하였다. 정부는 또 '토지문서제도' (certificate of land ownership)를 도

입하여 엉성하게 유지되어 오던 '가족 토지기록'을 대신하였다.

12) 도시지역 빈곤

방글라데시는 빠르게 도시화되고 있는 나라이다. 2010년에는 도시인구가 전체인구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민의 수입(income)은 전체 나머지 인구의 수입을 초과한 상태이다. 그러나 무계획적 도시성장 정책, 불법 토지 사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효과적 도시화 전략이 긴요하며 위생, 공공보건, 전염성 질병예방 및 빈곤여성과 슬럼가 주민들을 위한 상수, 전기, 에너지, 교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13) 주요 산업 인프라 구축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카-치타공간 고속도로, 파드마(Padma) 다리 건설, 동-남서간 철도 연결, 시내교통망 개선, 치타공 항구 개발, 내륙수로 개발 등 주요 인프라 개발의 장기적인 설계전략이 필요하다.

14) 선진 기술 전수

방글라데시는 섬유업등 가장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 의존국가로 노동자 해고와 같은 사태를 우려하여 산업분야 내 기술도입을 망설여 왔다. 즉 기술 향상이 정책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재 기술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1) 농업, 수산업계와 2) 정보통신 분야라 할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의 선진기술 도입은 식량 증산 등에 필수적이며 수산업계의 기술도입은 특히 수출산업으로 양식업 분야의 빠른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도입이 빈곤경감에 중요한 이유는 첫째, 정보통신이 가져다 줄 일자리 창출능력 때문이며, 두번째로 IT가 빈곤층의 역할 강화에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셋째, 정보통신이 국민간 거리감 해소에 중개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분야는 현재 여전히 1) 접속상태의 불안 2) 저조한 기술수준 3) 정보통신 훈련 제도 및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질 부족 등 3가지 장벽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도입 등 지원이 필요하다.

15) 사회안전망 확대

방글라데시인의 삶에서 위험성과 취약성은 특히 빈곤층에게 주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빈곤경감 전략의 일환으로 '안전대책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여전히 재해, 기근, 공공보건 위험성, 질병으로 인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국가이다. 여성의 지참금 문제, 가족제도 붕괴 문제와 같은 사회적 병폐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과제이다. 늘어나는 노인과 장애인과 같은 취약 그룹의 보호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3. 빈곤경감 추진전략(PRSP)-기본전략의 설정

방글라데시의 빈곤경감 가속화를 위한 전략 설정에는 3가지 과제가 따른다. 첫째는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과거의 성과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두번째는 전략 설계시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빈곤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고, 세번째가 민간.공공기관 및 지방기관 등의 모든 영역에서 빈곤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드맵을 위한 정책은 크게 3가지, 「빈곤층을 배려한 경제성장」, 「인간개발」, 「정치 및 거버넌스 향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빈곤삭감 가속화를 위한 전략 설정'은 4개의 큰 전략과 1개의 보조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13파트로 나누어져있다.

〈 빈곤삭감 가속화를 위한 PRSP 전략 구성 〉

전략 1부: 빈곤층을 위한 거시경제 환경 조성
- 1)거시 경제 개발
- 2)무역 및 해외근로자 송금액 확대

전략 2부: 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분야별 경제성장 촉진
- 3)민간분야 및 중소기업 개발
- 4)농업발전 및 식량 안보
- 5)소액대출(micro-credit)
- 6)인프라 개발 및 개혁
- 7)관광사업 지원
- 8)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개발

전략 3부: 효과적인 사회안전 프로그램 마련
- 9) 안전대책 프로그램

전략 4부: 인간 개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10) 교 육
- 11) 보 건

보조전략 : 비주류의 사회참여 및 거버넌스(governance)
- 12) 여성권리 향상(Empowerment)
- 13) 좋은 통치(good governance)

빈곤층을 위한 거시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 1부에는 1) 거시경제 개발, 2) 무역 및 해외근로자 송금액 확대를 위하여 회계정책, 금융정책, 시장정책 등 거시적 안목에서의 경제 개발을 위한 전략 설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분야별 경제개발 전략 2부에는 3) 민간분야/중소기업 개발, 4) 농업성장 및 식량안보, 5) 소액대출, 6) 인프라 개발, 7) 관광개발, 8)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분야 등 빈곤층 지원을 위한 주요 분야별 정부 목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한편, 효과적인 사회 안전대책 프로그램을 위한 전략 3부에서는 9)사회 안전대책 프로그램 전략 마련과 현 방글라데시내 주요 안전대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인적자원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전략 4부에서는 10) 교육, 11) 보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계획을 담고 있는데 단기적 목표 달성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빈곤경감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전략으로는, 12)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 지원, 13) 좋은 통치(good governance)를 다루고 있으며 여성차별 근절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여성의 사회참여 장려를 통한 빈곤경감 의지를 담고 있다. 좋은 통치는 방글라데시내 매우 중요한 이슈로, 전반적인 정부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빈곤경감 목표를 달성코자 하고 있다.

전략1. 빈곤층을 위한 거시경제 환경 조성

4. 거시경제 개발

가. 예산 및 회계 정책

1) 회계의 투명성 및 빈곤층 지원예산 확대

■ 부채 관리

정부의 국채발행 규모는 2001년 GDP의 3%에서 '05년 GDP의 1%로 감소되었으며 다카화 가치안정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 경제부처를 연결하는 '내부통제 체제' (Internal Control Manuel : ICM)가 완성되었다. 재무부내에 공공채무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되어 효율적인 국채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 PRSP는 회계년도 2005~'07기간중 재무부내 '금융자원 및 부채관리 담 당과'가 조기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정부는 2006년부터 4개 부처(농림부, 교육부, 복지부, 여성·아동부)에 '중기예산 편성' (MTBF)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예산 집행과 감독을 위해 모든 정부부처에 예산관리 위원회(BMCs)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2005년 7월에는 '공공지출 관리매뉴얼'을 발행,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예산편성시 빈곤층 및 여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하였다.

- PRSP는 회계년도 2005 ~' 07기간중 예산관리위원회가 각 단계별 예산집행 내역을 점검하도록 권고함. 또한 '중기예산 편성제도' (MTBF)는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등 6개 부처로 확대하고 점차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임.

■ 예산집행의 투명성 증진(감사제도 개선)

정부는 투명하고 효율적 회계시스템 정립을 위해 감사제도 및 관련 조례안들을 개정하였으며 감사요원을 대상으로 전문훈련을 실시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 PRSP는 회계년도 2005~'07 기간중 국가감사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관련제도개선, '공공회계 위원회' 설치 등을 목표로 설정함.
- 또한 PRSP는 동 기간중 모든 부처에 '내부통제체제' (ICM) 정착을 제도화하여 회계관리와 통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목표로 설정함.

■ 빈곤층 및 여성대상 예산배정 확대

정부의 빈곤층에 대한 예산은 2003년 GDP의 6.02%에서 2006년에는 GDP의 8.39%로 증가되었다. 재무부에는 전담부서(General Economic Division)를 두고 빈곤층 지원을 위한 예산확대 및 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 또한 빈곤 여성지원을 위해 '빈곤여성지출예산' (Recurrent, Capital, Gender and Poverty : RCGP) 모델을 개발, 빈곤여성관련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 PRSP는 회계년도 2005~'07 기간중 빈곤층 지원예산을 매년 확대해나갈 것을 천명하였고, 빈곤층대책의 부처간 연계강화를 목표로 설정함.
- 또한 동 기간중 빈곤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증을 위한 모델링 능력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설정.

2) 세금제도 개혁

■ 징수율 향상

정부는 그간 징수율 향상을 위해 '세금제도 개혁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며, 2005년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공평과세 및 비과세 항목 축소 등 세금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세금제도 개혁조치들을 지속 추진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직접세와 부가세(VAT)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릴 것을 목표로 정함.
- 또한 동 기간중 세입 증대를 위해 비과세 세목 축소를 강력히 추진 할 것 을 천명함.

■ 조세행정 향상

정부는 외부의 회계 전문기관을 활용, 세금누수 및 탈루행위를 점검하도록 하였고 조세행정 개선을 위한 '조세행정 개혁안'을 실행해 왔다. 국세청 직원들의 전문화 및 세금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통관, VAT, 소득세 분야의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대규모 납세 담당과'(Large Taxpayer's Unit)를 설치, 1,000여명에 이르는 대형 납세자를 별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세금 누수 추적을 위한 '중앙조사 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으며, 생수, 소다수, 화장비누와 같은 제품에 새롭게 VAT를 적용하는 등 세목 확대를 추진중이다.

한편, 관세행정 향상을 위하여 세관에 '자동통관 데이터 시스템'을 운영하여 통관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세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정부는 관세행정 전문화를 위해 세관의 각종 설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치타공 세관에 세무공무원 훈련센터를 설립하는 등 세무행정 전문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금 옴브즈만이 시행중에 있다.

- PRSP는 회계년도 2005~'07 기간중, 탈세를 최소화하고 세입증대를 위해 관세, VAT, 소득세 담당 부처간 자료 교환 및 공유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무서와 국세청간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또한 세원확보를 위한 '대형 납세자 담당과' 활동 확대, '중앙조사 위원회' 역할 강화도 추진 목표로 설정.
- 부가세 적용항목 확대, '자동통관 데이터 시스템'의 운영정착도 목표로 삼고 있음.

나. 금융 개혁 및 경쟁력 강화

1) 금융분야 관리능력 향상

최근 정부는 은행의 유동성확보 비율(Statutory Liquidity Ratio : SLR)을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하고 지불준비율(Cash reserve requirement)도 4.5%에서 5%로 상향조정하여 인플레 압력을 낮추고 자금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예금이자율이 하락하였으며 재무부 국채(Treasury Bill) 이자율도 조정되었고 환매계약(Repo)과 반환매계약(Reverse Repo)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채 유통시장 활성화 조치 등 정부의 금융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었으며 빈곤층을 위한 대안적 예금 기관들이 제안되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빈곤층을 위한 대안적 금융기관 개발, 은행간 금융시장 설치, 은행간 협력 증진, 금융의 인터넷활용 확대, 인재양성 등 방글라데시 은행의 현대화가 목표로 설정됨.

2) 국영 상업은행 개혁

정부는 경쟁력 없고 적자상태인 국영 상업은행의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현재 남아있는 4개의 국영 상업은행(루팔리은행, 아그라니은행, 자나타은행, 소날리은행)에 대하여는 특별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는 금융개혁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은행별로 금융관리 전문가 확보, 적자상태인 국영 상업 은행정리 등을 목표로 설정.

3) 국영기업 개혁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에 목표를 두고,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집중지원하는 한편, 부실기업에는 국영 상업은행의 신규 대출을 축소하는 등 국영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경영활동을 정밀하게 모니터링, 회계연도 2003년도의 경우, 황마생산 공장을 포함 28개의 부실기업이 정리되었다. 2001.11~2005.7 사이 17개의 공장이 업종전환 되었고 4개의 기업은 민영화되었으며, 현재 국영제조업체 25개가 민영화 리스트에 올라 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국영기업의 적자 감소와 민영화 촉진, 국영기업대상 예산지원 축소 등이 목표로 설정됨.

4) 자본시장 활성화

국내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 발행촉진 및 자본시장의 안정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 PRSP는 회계년도 2005~'07기간중 자본시장 안정 강화, 법규정 정비, 세법 개정을 통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함.

5)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감시제도 향상

정부는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은행에 내부 감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최소 자본비용을 2억다카에서 10억 다카로 증액되었고, 개인대출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였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는 은행의 감시제도 강화와 감사의 전문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5. 무역활성화 및 해외근로자 송금 확대

가. 섬유수출 지원

1) 수출 현황

정부의 수출절차 간소화 정책, 품목제한 완화, 수입관세 철폐 및 하향 조정, 경쟁적 환율 등은 결과적으로 방글라데시 제품의 수출증대로 나타났다. 1990년대 수출 신장율은 매년 평균 12.5%로 GDP 성장률 4.8%와 1980년대 수출신장율 3.9%와 비교해 보아도 높은 수치이다. GDP 대비 무역

비율은 1980년대 중반 17%에서 2000년 33%로 증가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빈곤경감을 위한 경제성장에서 수출 촉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섬유업 수출 집중 및 수출저해 요인

■ 섬유업 수출 및 MFA 철폐

방글라데시의 섬유제품 수출은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등 수출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이다. 그동안 섬유업계의 수출은 MFA(다자간 섬유협정) 제도의 수혜를 받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2004년말 MFA 철폐되었으며 방글라데시는 중국,인도,터키 등과 EU 시장에서 힘겨루기를 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MFA 철폐 이후 방글라데시 수출이 최대 50%정도 감소(이는 GDP의 2.3%, 전체 고용의 13%에 영향을 줌)할 것으로 예측된다.

■ 미국시장의 높은 관세율

미국으로의 섬유 수출에 부여된 높은 관세율(평균 16.5%)도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46%에 달하는 방글라데시 의류 수출제품은 평균 15.1~2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13%정도가 25%이상의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EU 시장의 원산지 규정

EU는 최빈국(LDC)에게 무관세 혜택 및 수량제한 비적용 등 방글라데시는 EU시장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EU 시장에서도 원산지 규정정책(Rules of Origin : ROO)의 시행으로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 수출 신장이 불확실한 형편이다.

3) MFA 종료후 섬유수출 촉진 정책

■ MFA종료 대비 프로그램

정부는 MFA 종료후의 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조정 위원회' (NCC)를 설립하였다. 동 위원회는 원산지 규정, SAARC역내 무역활성화, 수출인프라 개선 등에 관해 세부 제안서를 작성하였고 의회는 상당수의 제안서를 승인하였다. 방글라데시 상무부는 미화 4천만불 상당의 'MFA종료후 프로그램' (Post-MFA Action Program)을 입안하여 MFA 철폐로 인한 부정적 영향들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섬유 수출증진 프로그램

정부는 섬유업 수출경쟁력 향상지원을 위해 6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먼저, (1)생산기술 및 품질 향상계획(SQDP)은 섬유류 품질향상, 생산관리, 마케팅, 통관절차 등 7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중이다. (2)퇴직여성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DWRP)은 수출감소로 퇴직한 섬유업종사 여성노동자들의 재활 및 재취업 훈련프로그램이다. 정부는 퇴직노동자 훈련 및 재취업을위해 2006년에 2억 다카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3)중소기업 수용력 강화 프로그램(SECEP)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개발 프로그램이며 그밖에 (4)제품의 질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한 기본 기술지원 프로그램 (5)수

작업 분야 생산성 향상 지원 프로그램 (6)관련 사업간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 미국 시장수출 대비

미국은 단일시장으로는 가장 큰 방글라데시 섬유 제품 수출 시장이다. 정부는 미국정부와 수출관련 무관세혜택을 받기위한 노력들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방글라데시 섬유수출협회'(BKMEA)와 공동으로 미국에 섬유제품 무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 로비스트를 선임하였다. 그밖에 수출장애 요인을 밝혀내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구상 되었으며, 항구 및 통관 제도의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조치들도 시행되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 따르면 정부는 EU의 원산지 규정 (ROO)이 방글라데시에 미칠 영향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도록 결정하고, 선진국 원조기관을 통한 섬유기술 향상, 퇴직(여성) 노동자 훈련 프로그램 실시할 것을 목표로 설정함.
- 노동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약 3만 여명의 퇴직노동자들이 재활훈련을 받도록 하고 노동자 은행과 BRAC은행을 통한 최대 7만5천 다카(약$100)에 상응하는 대출 제도를 마련할 예정임.
- 정부는 선진국과 후진국 시장에서 방글라데시산 섬유제품의 무관세 혜택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시킬 예정이며 화물수송 비용도 현재 10,000~20,000다카(톤당)에서 1,250다카(약$20)로 축소할 것을 목표로 설정.

나. 수출 다변화 및 국제경쟁력 향상

정부는 동 유럽지역으로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고 수출 확대를 위한 '3개년(2003-2006)수출정책' 및 '수출 진흥 협의회'(Business Promotion Council)를 설립, 수출기업 인센티브제 실시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섬유수출 업체에는 정책자금지원을 통하여 EU, 캐나다,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강화코자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이미 SAFTA, BIMSTEC, TPS-OIC 등 3개의 지역 자유무역 협정에 조인한 상태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였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에 수출 개척단을 파견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더 많은 수출항목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목표로 함.
- 수출가공공단(EPZ), 방글라데시 관세위원회 등 수출유관 기관의 개혁작업을 기간중 완료할 예정임.
- SAFTA, BIMSTEC, TPS-OIC등 지역불럭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별도의 협상팀을 구성함.

다. 해외근로자 송금 및 FDI 증진

정부는 외환부족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500만에 이르는 자국 해외근로자의 경비송금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영은행에 '송금 지원부'를 설치하고 공식적 채널을 통한 외환 송금 증진에 노력중이다. 또한 재무부 내 감사팀을 운영하여 송금

자들의 민원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법적 및 공식적인 채널을 통환 외환 송금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목표로 정함.
- 또한 돈세탁 감시활동의 강화로 불법송금 및 암시장 확대 등 외환의 비정상적 흐름을 예방함을 목표로 함.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경제발전 초기에 섬유업 발전 등에 기여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에너지.광물자원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FDI는 외환 안정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기술이전, 경영관리 기술 향상, 사회변혁 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방글라데시의 해외투자제도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투자규모는 1990년대 년간 미화 2억불 수준으로 투자분야도 가스, 에너지, 통신분야가 중심으로 제조분야의 FDI는 저조하였다. 최근 수출가공공단(EPZs)내 투자가 빠르게 성장(2002~' 03년 1억3천불, 이중 80%가 해외직접투자액)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평균 FDI 수치는 낮은 편이다.

전략2. 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분야별 경제성장 촉진

6.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 발전

가. 정치적 환경 조성

민간 부문 및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법적기본 틀을 제공하고 민간부분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였고, 중소 민간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역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다른 국가의 경험을 연구하여 '민간분야 개발전략'을 입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민간부문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 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며, 노동법 개정도 추진 예정임.

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설비 향상

인프라설비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시행되었다. 인프라건설이 주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되지만 방글라데시의 허술한 인프라는 특히 중소제조 업자에게 큰 영향을 준다(교량, 대중교통의 부재로 운송비등 부담가중). 자무나철도교량 건설공사(Jamuna Bridge Railway Link Construction Project)가 2006년 6월 완성을 목표로 199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다카–치타공간 고속도로 공사에 말레이지아 '아즈맛 콘소티움' 사와 한국의 '룩손 글로벌' 사 등 2개국의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주요 항만의 현대화 및 항만청 관리. 경영개혁, 민간투자 항구 설치, 다카–치타공간 고속도로 건설, 다카–락샴간 Cord Line 프로젝트 실시, 자무나 철로 프로젝트 시행 등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

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 및 기술개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 및 기술개발을 위해서 회계년도 2005~'07 빈곤삭감 보고서에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교과과정'이 민간분야의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훈련 및 기술개발 활성화, 인턴 쉽 촉진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라. 취업률 향상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기회가 확대되었으며, 고용인구도 1990년 3,480명에서 1995~'96년 3,900만명으로, 2001~'02년에는 4,430만명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면이나 다양성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으며 실업률이 1999~2002년간 4.3% 수준을 기록하였다(비공식적으로는 20%를 넘는 것으로 예상). 정부는 빈곤층에게 고용기회 확대, 임금 향상, 비공식적 분야에서의 고용 확대 등 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8년까지 총 고용 인구를 5,800만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규 고용 창출도 330만명을 목표로 삼고 있다.

〈 방글라데시 정부의 고용향상 추진계획 2003~2008〉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총고용인구 (백만명)	44.30	46.75	48.92	51.69	54.75	58.08
농촌지역 고용	33.60	34.96	36.64	38.30	40.35	42.57
도시지역 고용	10.70	11.77	12.28	13.39	14.40	15.51
새로운 일자리 고용인구 (백만명)	-	2.43	2.19	2.77	3.06	3.33
농촌지역 고용	-	1.36	1.68	1.66	2.05	2.22
도시지역 고용	-	1.07	0.51	1.11	1.01	1.11

마. 기업 지원서비스 향상

정부는 기업지원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해외직접투자(FDI)를 확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생산제품의 질 향상을 위해 품질기준 설정 및 품질관리기술 향상 등 조치들도 시행되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방글라데시 통계청(BBS) 내 '산업 통계 분야'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설정함.
-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품질검사 기준 설정 및 품질검사청(BSTI) 기능강화, 민간투자 등록제 시행을 통한 기업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
- 더불어 기업지원활동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방글라데시 투자청(BOI)과 방글라데시 수출가공공단 협회(BEPZA)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출진흥공단(EPZ)만을 위한 서비스 지원활동을 통하여 수출진흥 공단의 외국인 투자 및 기술이전 능력을 강화할 예정임.

바. 민간분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민간분야의 여성참여율을 현재의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여성 기업인의 증가를 위해 정부는 여성 중소기업인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관련 전문 기술훈련을 제공하여 전체적으로 여성의 수입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성 무역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및 비즈니스

센터가 설립되었고, 무역 전시회 등에서 여성들을 위한 장소 및 필요설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다. 그 외, 여성대상 사업 발굴, 기업운영상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 여성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고 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여성의 관점에서 '산업 및 중소기업 정책'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됨.
- 정부는 동 기간중 신설 산업에 여성 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기업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 또한 여성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섬유업계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등 여성기업인 키우기에도 집중할 예정.
- 한편, 무역 협상대표단에 여성대표를 포함하고 국내 및 해외 무역 전시회에 여성 기업인 참여를 촉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7. 농업성장 및 식량 안보 증진

가. 농산품의 생산성 증가 및 식량안전 확보

정부는 2006년까지 쌀 생산을 2천9백만 톤으로 증산하고 원예분야 및 다른 농산품의 생산성 증가를 목표로 '국가 농업정책'(National Agriculture Policy)과 ' 행동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그외, 쌀, 밀, 옥수수, 감자, 과일, 야채 등 필수농산품 생산량 증대 및 빈곤층의 영양섭취 향상을 목표로 1997년에 '국가 식량 및 영양 정책'을 제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정확한 정보 수집과적절한 식량정보 활용을 위해 '식량안보 및 취약성 탈피 제도'(FIVIMS)를 운영중에 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행동 계획안'에 따라 세부 이행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목표가 설정됨.
- 또한 빈곤층의 실질적 영양 개선을 위한 이행과제들도 설정됨

나. 수산 및 축산업 생산성 증대

수산 · 축산업 및 가금류의 사육 활성화를 장려하며 정부는 축산정책을 재검토, 관련 분야에 세금우대 및 통관상의 특혜를 부여키로 하였다. 이와 별도로 축산/가금 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각 분야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관련 기술지원 및 예산배분이 확대되도록 목표로 설정함.

다. 농업분야에 여성참여 증대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목표로, 정부는 농업분야에서 여성의 농업기술 지원, 여성이 재배한 농산물의 마케팅 지원 등 여성참여를 고양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취하였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여성참여 확대를 목표로, 여성 중심의 '농업정책' 수립, 주요 여성참여촉진 프로그램의 예산확

대 편성, 과부, 이혼녀 등 빈곤 여성들에 대한 정부소유 토지 지원, 긴급 식량지원, 농업 대출 지원, 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라. 식량 안보 증진

식량안보 확보를 목표로 정부는 1997년에 '국가 식량 및 영양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동 정책하에 식량안보 관련 활동계획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다양한 농업개발 정책과 식량증산 프로그램 및 농촌 보조금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산·축산업 생산성 향상도 지원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도 식량관련 무역이 가능하도록 허가되었으며, 식품관련 수입절차를 완화하였다. 또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개발에 개발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었다. 식량 및 긴급재해부(Food and Disaster Ministry)는 상황에 맞춘 식량분배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공개시장 정책 등 식량안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식량안보 관련 프로그램에 예산이 확대 편성될 예정이며, 새로운 '농산품 확대 정책'을 실시할 예정임.
- 식량관련 민간무역 활성화, 식품보관 관리기술 현대화, 신속한 식량분배를 위한 활동계획안이 마련될 예정임.
- 나아가 동 기간중 '식량안보 활동계획'(Food Security Action Plan)을 제정하고 '국가 식품안전 의회'(National Food Safety Council)를 설립하여 제품안전 및 위생기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행정 일원화, 농산품 보험제도 등의 도입을 목표로 설정함.

8. 소액 대출 (micro-credit) 활성화

빈곤삭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정부는 소액 대출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빈곤층의 빈곤경감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NGOs와 연계하여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극빈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자층의 확대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보다 많은 돈을 무담보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융자금 상환이 보다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 목표에는 정부-NGO간 협력 확대, 주요 소액대출 수혜자 발굴 및 전달 시스템 강화, 무담보 대출 정책 확대, 영세기업대출 지원 및 생산품 다양화 추진, 특수화된 서비스 기관 설립 지원, 대출 확대를 위한 자본확대 지원, 대출 이자율의 축소 등이 있음.

9. 인프라 개발 및 개선

가. 전력분야-방글라데시 에너지 개발청(BPDP)

전력분야는 산업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방글라데시의 전력분야는 위기에 서 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지연으로 인하여 신규 발전소 건

설도 늦어져 06년도에만 3,000MW의 공급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체 전력생산의 40%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가격 정책' (Power Pricing Framework)을 수립하였으며 6개월마다 에너지 요금을 수요량에 따라 변경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분야 개혁 및 발전안을 담은 '3개년 발전전략 및 개혁안' 이 수립되었고 '에너지 위원회' 가 설립되었다. 경영효율이 떨어지는 Ashuganj 발전소를 민영화하였으며, 남부 및 북부지역의 에너지 송배전회사 설립계획이 승인되었다. 또한 잠재 발전용량을 최대 7,000MW로 확충하는 것과 실 발전용량을 5,000MW로 확대하고 송배전선을 47,000km로 확대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전력분야 PRSP에는 전기요금 결정절차를 보다 합리화하고, 발전소 운영 적자를 21%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또한 전력설비 수입관련 관세율을 합리화 하고 발전, 변전, 송전 등 각 분야별 기술향상, 에너지 분야의 비리척결을 위해 감사제도를 도입함을 목표로 하고 있음.

나. 도로 및 고속도로 확충

정부는 2,300km에 달하는 새로운 도로건설과 1,350km 도로보수, 11,000m 다리 건설, 2,000m의 다리 재건설, 1,500m의 고가도로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실행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국가토지 · 교통 정책' 초안을 승인하였고, 효과적 도로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로 도로 및 고속도로과(Road and Highway Department: RHD)의 사업계획과 관련 매뉴얼이 마련되었다. 고속도로의 차선을 넓히는 확장공사와 도로성능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재공사가 이루어졌다. '도로보수 기금' 설립을 위한 법안의 초안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정기적인 도로점검과 수리가 지속되었다. 주요 도시에 행인들을 위한 인도가 만들어졌으며, 2개의 고가도로가 공사중에 있다. 도로 표지판과 표지판 매뉴얼이 작성되었으며, 도로안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 회계년도 2005~' 07을 위한 PRSP에는 1925년에 발표된 '고속도로법' 의 개정, 도로건설 민간투자 유치, 도로분야 마스터플랜(Master Plan) 일원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현재 공사중인 고속도로 확장공사 완성, 다카시내 고가도로 및 인도공사 완성 등이 목표이며 교통수단과 도로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이 지속될 예정임
- 나아가 향후 다카–치타공간, 다카–쿨나간, 다카–실렛간, 다카–탄가일 간 도로를 4차원으로 증축하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다카–치타공간 고속도로 공사, 다카 시외에 원형 도로(ring road) 공사 등을 추진예정임.

다. 항공분야

방글라데시 항공사인 '비만 항공사' 는 점차적

으로 성장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항공분야에서의 인프라 향상을 목표로, 노후된 DC10-30과 F-28기의 항공기 교체를 통한 항공분야의 현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현재 2대의 DC10-30의 추가 임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우즈벡 항공사, 말레이시아 항공사, 사우디 아라비아 항공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화물서비스를 제휴하여 항공운송능력이 증대되었다.

- 회계년도 2005~' 07을 위한 PRSP에는 항공기 구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고 더 나아가 방글라데시 항공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비만 프로젝트' (Project Biman)가 시행될 예정임.
- '투자보장 정책'을 비롯하여 항공분야에 민간참여를 장려하고, 중동 및 다른 국가로의 비행 횟수를 확대할 예정
- 그 밖에 항공운송 절차 간소화 추진, 농산물 등 신선식품(perishable export) 운송이 가능하도록 외국 항공사 유치도 추진 예정.

라. 교통수단 분야

정부는 교통수단 인프라 향상을 목표로 200여 개의 단층 및 복층 버스를 수리하였고, 7개 지역에 자동차 정비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자들의 기술향상을 장려하였으며, 각 교통수단별 요금확정 및 속도제한 제도를 실시하였다. 한편 지난 1년간 450,000개의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대중교통안전 캠페인 및 영상물 제작 등 도로안전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최소 7개 주요지역에 과속 및 과중 트럭단속을 위한 하중측정기 설치가 예정됨.
- 또한 다카시내에서 3륜 CNG 택시와 2륜 인력거(릭샤)의 도로주행 제한 및 단계적 철폐를 추진예정.
- 다카시내 20년 이상된 노후버스와 25년 이상된 트럭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
- 600,000개의 코팅된 면허증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로안전교육 캠페인을 전 방글라데시로 확산하는 방안을 구상중.

마. 항만 분야 – 치타공 항만청

치타공 항구내 신설 계류지역(mooring areas)에 1,000m규모의 정박 컨테이너 터미날 건설을 목표로 최근 치타공(방글라데시 제2도시 이자 항구도시)에서 공사가 준비중에 있다. 관련 터미날을 위한 토지구입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82개의 컨테이너 운반기 및 59개의 가교크레인 구입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항만분야 인프라 향상을 위해 항구의 수용능력 강화, 항만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거리 연결도로공사, 오래된 컨테이너 계류지역 재공사 실시를 목표로 설정함
- 또한 항만행정 운영효율화를 위해 포괄적 전산시스템 도입, 운송 및 통관절차와 서류검사 현대화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10. 빈곤경감을 위한 관광사업 개발

정부는 빈곤경감 정책 추진에 '관광사업 확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광사업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2년 제정된 '국가 관광정책'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방글라데시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관광개발 위원회'(District Tourism Development Committee)가 설립되었고, '방글라데시 관광 비전 2020'도 제정되었다.

정부는 주요 관광지역에 '관광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 홍보물 및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외국 공관과 해외 항공사, 각 나라의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배포하였고, 외국 신문사와 잡지사에 광고물도 게재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2년짜리 디플로마 과정으로 '호텔 경영학과'를 신설하여 관광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며, 콕스바잘(Cox's Bazaar: 방글라데시 남부 해안지역)에 정부소유 토지를 민간기업에게 양도하여 호텔과 모텔 건설을 장려하였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특정 지역 관광개발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 플랜 수립 등을 목표로 설정
- 또한, 자국 관광지 홍보 및 관광 정보수집을 위하여 '세계 관광기구' 가입 및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에 참여를 추진할 예정
- 관광분야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 도입, 관광상품 개발, 관광시장 촉진을 위한 기금 확보도 추진예정
- 국가운영 호텔 및 관광훈련원(National Hotel and Tourism Training Institute)의 훈련설비를 향상시키고, 대규모 국제회의 및 전시가 가능한 전시장을 구축하는 등 목표를 가지고 있음.

11.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지원

가.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개발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국가 과학 · 기술 정책'(National Policy on Science and Technology) 및 '국가 정보통신 정책'(National Policy on ICT)을 제정하였으며, '국가 과학 기술협회'(National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와 국가 생명공학 상임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mmittee on Bio-technology)가 설치되었다. 한편 분야별로는 농작물 생명공학, 동물.수산물 공학, 의료 공학, 안전공학, 생물다양성 등 5개 분야의 '기술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정보통신 관련제품에 대한 VAT 철폐 및 세금 면제, 정보통신 기금 설치 및 지원, 정보통신 인큐베이터 센터 설립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보통신 사업 진흥협회'가 설립되어 방글라데시 IT 사업진흥에 기여하였고, 해저 광케이블 연결로 인터넷 속도 향상을 이루고자 하였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국가 과학 · 기술 정책' 및 '국가 정보 통신 정

책' 개정, '생명공학 정책'의 기본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과학 · 정보통신부내 생명공학부(Bio-technology Cell), 정보통신부, 지적재산권부가 신설될 예정.
- 농작물 생명공학, 동물 · 수산물 공학, 의료공학, 안전공학, 생물 다양성 등 5개분야에 대한 실행전략과 세부 활동계획이 수립 예정임.

나.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분야 인재육성

정부는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해 학교와 대학내 정보통신 담당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몇몇 대학 내에 정보통신학과가 개설되었다. 방글라데시내에 6개의 IT 훈련기관이 설립되었으며, '국가정보통신 자격시험'(National ICT Certification Examination)과 제도를 도입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정보통신 전공 졸업자들을 위한 인턴쉽 프로그램이 소개되었고, '국가 생명공학기관'이 설립되었다. 일부에서는 E-비즈니스 활동이 시도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서비스 확대 및 현대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중에 있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 내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점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투자청과 같은 정부기관에서는 온라인 파일 추적시스템 (file tracking system)을 구축하였고, 몇몇 정부부처는 쌍방향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선보였다. 주요 정부부처는 LAN선을 통해 기획위원회와 총리사무국이 연계되도록 하였다. 정부는 '정보통신 사업진흥협회'(ICT Business Promotion Council)를 설립하였고, 2002년 11월부터 다카시내 중심부에 '정보통신 인큐베이터 센터'를 설립하여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넷 대여 보조금을 제공하여 인터넷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IT 훈련센터를 15개로 확대설립하고 중.고등학교에 IT교육을 교과과정으로 추가할 계획임.
- 방글라데시-한국 IT훈련센터(BKIICT)가 설립되어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며, 정보통신 인프라 설계를 위한 로드 맵이 제시되고 전국 모든 중등학교에 컴퓨터 교육과정이 도입되도록 할 예정임.

한편, 정보통신 기술을 지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전화국은 전화국-가입자간 회선을 무선으로 연결하는 무선가입자 회선(Wireless Local Loop) 기술을 사용하여 농촌 및 원거리 지역주민들도 낮은 비용으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인터넷 카페, 인터넷 의료원 등이 지방지역에 설립되어 지방에서의 정보화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각 부처가 LAN 선을 통해 연결될 것이다.

전략 3. 효과적인 사회안전 대책프로그램

12. 빈곤경감을 위한 재해 관리 및 안전 대책

가. 빈곤경감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빈곤층을 위한 공적구제 제도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노후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수혜층이 넓어졌으며, 보조금 수준 또한 향상되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다른 나라의 공적 구제제도를 점검, 비용효과가 큰 프로그램의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추진 예정.

나. 재해 관리

홍수 등 빈곤층을 대상으로 재해관리를 위하여 정부는 '포괄적 재해관리 프로그램'(CDMP)을 제정하고 기상재해 및 예측 불가능한 재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였다. '재해 영향평가'(Disaster Impact and Risk Assessment: DIRA)를 통하여 피해 예방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며 외국 원조기관의 도움으로 긴급 피난지역 등이 설치되었다.

정부는 늘어나는 재해의 효과적 예방 및 긴급구호를 위하여 '재해 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부처간 재해관련 협조계획을 담은 2005~'09년 재해관리부처 협력계획' 수립 및 부처간 협의체인 재난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재해관리 부처를 재해관리부 뿐 아니라, 국가경제부 및 재무부 등 국가정책 주요부처로 확대하고 재해 및 기상 변화, 위기관리와 같은 재해대책 프로그램의 공동 대응을 추진 예정임.
- 이를 위한 국가적 재해위기 감소를 위한 관련 기관간 연계 및 협력 증진,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선(先)경보 제도, 재해 대비,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 감소 및 재해후 활동의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난 구제 기금'(Calamity Relief Block Fund)을 설치함.

다. 정부 기능 강화

정부는 재해 관리분야에서의 정부기능 강화를 목표로 모든 '재난관리위 원회'의 규정과 책임을 재검토하였고, '훈련수요 평가'(Training Need Assessment)를 시행하였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모든 수준에서 '재난관리 위원회'의 수용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적, 국가적 협력 메커니즘 강화, 재난 정보공유를 위한 인터넷 네트워킹 설계 등을 목표로 삼고 있음.

전략4. 인적자원 개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3. 교육 분야

가. 영 · 유아 교육

인간개발을 목표로 방글라데시 안에서도 유아 · 유치부와 같은 초등교육 이전의 교육활동의 중요

성이 이슈화 되었다. 정부는 초등교육 이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유아 · 유치부의 커리큘럼 작성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다방면에 걸친 유아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국내 비정부기관(NGO)은 물론 국제 NGOs의 지원하에 지역별로 유아 보육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아동권리 신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NPA)' 이 준비 중에 있으며, NPA내, 유아 · 유치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증진을 목표로 한 제안서가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유아교육 및 초등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여러 가지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함.
- 도시 및 농촌지역의 빈곤가족에게 출생부터 단계적으로 보육을 지원하는 무료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함
- 유치원을 초등학교와 붙여서 운영하는 병설 유치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지역학교가 NGO와 지역기관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는 정책을 수용할 예정임.
- 영 · 유아 학습센터 확대, 유치원 교사의 자격증제 도입 예정임.

나. 초등교육 분야

■ **초등교육 분야 PRSP**

초등학교 입학율 100% 달성과 통합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국가 경제협의회 2003(National Economic Council)' 의 교육부문 제안사항의 시행이 검토 중에 있다. 초등교육 성취율 향상을 목표로 출석률 향상, 초등교육 이수율 향상(현재의 68%에서 80%로) 등이 추진중이며, 중퇴비율 감소 및 중퇴자들의 재입학률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빈곤층을 위한 교육 계획**

정부는 35만에 이르는 도시지역 아동 근로자들에게 기본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던 50만명의 아동들을 포함하는 'Reach Out of School children'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초등교육 개발 프로그램II' (PEDP II)에서는 비교육적 환경에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소외계층을 위한 혁신적 보조금 지원정책이 실행되었다.

한편, 빈곤계층 자녀의 학업장려를 위해 정부는 빈곤아동의 입학 및 출석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하는 'Cash for Education'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정부는 1993년이후 빈곤층 자녀에게 교과서와 음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중이다. 음식제공 프로그램은 후에 현금 인센티브제로 대체되어 한 가정에 한 학생을 보낼 경우 현지화 100다카 지원, 두명 이상 현지화 125다카를 지원한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초등학교 학습 커리큘럼에 방글라 언어능력 개발, 수 개념 개발, 기초 생활능력 개발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 유아.초등 교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목표를 설정함.
- 한편, 모든 학교에서 남녀, 장애인-비장애

인, 소수민족 등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민주주의적 커리큘럼을 개발 예정임.

- 빈곤계층의 학업중퇴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연구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원 예정임.

다. 중등교육

정부는 입학률 증가 목표치로 초 · 중학교 입학률을 60%에서 90%로, 중학교 입학률은 현재의 44%에서 66%, 고등학교 17%에서 25%로 증가하는 세부 목표치를 설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또한 마드라사(무슬림 종교학교) 및 일반학교 중퇴비율을 50%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외 중.고등교육 이수 자격시험인 SSC와 HSC(Higher Secondary School Certificate)의 합격율을 2008년까지 최소 65%로 증가시키고 여성의 교육참여율 증가, 빈곤층 중등 교육 중퇴율 50% 절감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소외계층까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지역까지 교육을 확대할 예정임.
- 교육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될 예정이며, 교사훈련 및 활동실적에 따른 임금제 도입, 학생성과 평가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추가함.
- 모든 중학교에 안전식수 제공 및 위생기기 설비 추진
- 또한 출석 여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 보조금 혜택이 도지지역 빈곤가정과 빈곤가정의 남학생에게도 주어지도록 보조금 제도가 확대할 예정임.
- 아울러, 여학생대상 장학금제도 확대, 여학생 기숙사 제공, 여학생 교통비 지급 등 여학생의 중등교육 참여를 프로그램들이 도입

라. 기술 · 직업 훈련

'기술 · 직업 교육' 프로그램은 8학년 이상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1년에서 4년까지 기술 및 직업관련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격증 코스는 163개 기관과 2,514 비정부기관(NGOs)에서 제공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약 28,000명의 학생들이 등록하여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빈곤경감 프로그램에 직업훈련 과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직업훈련학교 입학률 50% 확대, 여성의 직업기술 교육 참여율 60% 확대, 각종 기술자격증 취득률 80% 확대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노동부산하 직업훈련센터의 2부제 운영을 결정하였고, 여성의 직업기술 교육참여율 확대를 위해 직업교육을 받는 여성에게 특별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또한 여성전용 3개의 기술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졸업생들의 구직확보를 돕기 위해 각 NGOs와 연계하여 직업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기업, NGOs와 협력, 여성포함 소외 계층을 위

한 자영업 기술, 소득창출을 위한 기술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임.

- 민간부문에서의 직업훈련 교육을 적극 지원 예정이며 현행 직업기술 교육 커리큘럼을 재검토하고, 여성 직업기술교육 이수 학생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예정
- 직업훈련원 교사에 대한 교수법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될 것이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강화를 통해 직업훈련 교육의 질 향상을 추진함.

마. 고등교육 분야

2005년 현재 방글라데시는 26개의 공립 대학교와 54개의 사립대학 그리고 1,500개의 전문대학(college)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전문학위 입학율을 현행대비 40% 확대하고, 자연계열 전공자 확대, 전문 분야에서의 남.녀 입학율 50% 증가, 석사학위 취득율 50% 향상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 국립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기기 설비 확충 등 인프라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교수법 지원, 경영 및 자연계열 지원 제안을 수용하였다. 한편 연구비 지원을 위한 예산확대 방안들이 논의되었고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적용될 교육의 질 평가기준이 제시되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고등교육에 대한지원 확대, 교육분야 장기비전 제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위과정 개발, 고등교육 분야의 교육과정 및 시험과 학생평가제도 재검토 등을 목표로 설정함.
- 1973년에 제정된 '대학운영법'을 수정하여 대학교의 활동영역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 할 예정
- 대학내에 '대학기부금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하고 동위원회가 교육의 질 향상, 교육평등 구현을 위해 기능하도록 감독함.

바. 비공식 교육 지원

정부는 문맹율을 현재의 63%에서 60%로 개선할 것을 목표로 공교육 뿐아니라 비공식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동시에 2003년 비효율적이고 부작용을 양산한 문자해독률 증가 캠페인을 중단시켰다. 정부는 교육부 산하 교육기관을 통해 3백만명의 문맹자를 대상으로 문자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교육프로젝트를 설계하여 운영중에 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비공식부문 교육지원을 위해 NGOs 와 지역사회간 파트너쉽 확대, 기술적 지원 제공, 운영자금 지원강화 등을 추진예정.
- 그외에도 평생교육제도 개발 정책을 위한 비전도 제시함.

사. 교육제도와 교육 재정

정부는 장기적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2007년까지 소외지역에 50%이상 학교 증설, 2007년까지 교육비 및 학교보조금 누락율 75% 축소,

2007년까지 모든 교사의 교원자격증 확보를 목표로 여러 가지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통합재정관리 개혁프로그램' 아래 교육분야발전을 위한 '중기지출 프로그램'(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2003년 '국가 경제협의회' 보고서는 교육분야에서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교육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빈곤경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교육예산 및 감사 제도를 평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학교운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학교 관리위원회'의 개혁과 국정교과서 인쇄회사의 민영화, 교육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교육예산은 현재 정부예산의 13.4% 수준에서 2004-2010년간 25%로 확대시키고 GNP의 5%로 확대편성을 목표로 함.
- 한편, 빈곤계층 학생을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들을 점검하고, 여학생 보조금 지원정책 관리 강화, 각 수준별 교사들의 활동실적에 따른 임금 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함.
- 아울러 교사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교사 최소 자질기준 설정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 활성화를 실현코자 함.

14. 보건위생 분야

가. 여성과 아동 보건 향상

정부는 2003년 여성과 아동의 보건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다분야에서의 보건행상 목표를 설정하여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실현되었으나 대부분은 PRSP를 통해 2007년까지 해결을 요하는 것이다.

- 신생아 사망률 2004년의 1,000명당 41명에서 2006년 32명으로 감소
- 유아 사망률 2004년의 1,000명당 88명에서 2006년 47.9명으로 감소
- 산모 사망률 2001년의 100,000명당 320명에서 2006년 275명으로 감소
- 5세미만 여아사망률 2000년 의 1,000명당 107명, 2006년 102명으로 감소
- 아동 사고사망률 1997년의 1.86%에서 2006년 1.1%로 감소
- 농촌지역아동 사망률 2000년의 1,000명당 140명, 2006년 120명으로 감소
- 여성 평균수명 2002년의 65세에서 2006년 70세로 연장
- 여성 질병사망률 2002년의 1,000명당 4.8명에서 2006년 4.4명으로 감소
- 산전진찰률 2004년의 48.7%에서2006년 60%로 증가
- 산후 진찰률 2004년의 17.8%에서2006년 30%로 증가
- 필수 분만간호 서비스 이용률 2003년의 26.5%에서2006년 40%로 증가
- 모든 필요여성에게 응급분만서비스 제공

- 전문의료진도움을 받는 출산률 2004년의 13.4%에서 2006년 25%로 증가
- 피임보급률 2004년의 58.1%에서 2006년 63%로 증가(남성의 피임도구 사용율 확대)
- 합계출산율(TFR) 2004년의 3.0명에서 2006년 2.8명으로 감소

정부는 보건분야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프로그램 확대, 급성 호흡성간염(ARI) 통제, 설사병 통제, 통합 아동질병 관리(IMCI), 학교 보건서비스 개선 등 아동을 위한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보건분야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가적 차원에서 '의약품 정책', '보건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모든 산모에게 파상풍 예방접종(TT)을 포함한 산전검진 서비스 제공과, 응급분만 서비스 제공, 위탁서비스 제공 등 여성을 위한 보건정책을 펼쳤다. 아울러 '인구조절정책' 시행, '산모보건' 전략 제시 및 응급 피임법 개발에 힘썼으며, 여성 매춘업 종사자들을 위한 HIV/AIDS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여성을 위한 2개의 '원스탑 응급센터'(One-stop Crisis Center)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회계년도 2005~'07을 PRSP에는 여성.아동 보건 프로그램 강화, 필수 분만 서비스 강화, 예방접종 프로그램 확대 및 유지, '통합아동질병관리' 강화, 법적 결혼 허용 나이 시행 강화, 신생아 등록 강화, 전문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출산율 강화, 남성의 적극적 피임사용 장려 등을 목표 함.
- 또한 장기적으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제공, 여성의 보건 · 의료관련 지식 증진, 여성과 아동의 보건 · 의료 관련 보조금 제공, 의사 · 간호사 등 의료진 전문화 훈련, 여성대상 보건서비스 확대 등을 목표로 함.

나. 청소년 보건 증진

정부는 청소년 산모비율 감소, 모든 청소년에게 출산관련 보건지식 교육, 청소년 HIV/AIDS 감염 통로 근절, 청소년 성적 학대방지, 알코올, 마약에서 자유로운 환경 제공 등을 목표로 학교내 보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왔다. 특히 청소년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였으며 HIV/AIDS 근절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청소년 보건 증진을 목표로 청소년 보건센터 건립, 청소년에게 '필수 보건서비스' 제공, 청소년 마약 중독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 설계를 목표로 함.

다. 전염성, 비전염성 질병 통제

정부는 방글라데시 질병통제의 일환으로 결핵 양성사례 발견률을 2002년 34%에서 2006년 65%로 확대하고, 2000년 10,000명당 0.63명의 나환자 발병률(leprosy prevalence rate)을 2006년까지 0.50명으로 축소, 말라리아 사망률은 2003년 595명에서 2006/7년까지 20% 축소, HIV/AIDS 확산 관리(발병위험 인구 5%이내), 심장병, 암, 당뇨, 상해, 사고 등 비전염성 질병률 및 사망률 감

소, 담배 및 알코올 소비량 통제 등을 목표로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결핵통제 프로그램과 단기 DOTS(직접관찰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또한 말라리아 조기 검진 및 조기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나환자 통제 프로그램, B형간염 예방 접종 프로그램, 식당 등 공공장소의 위생관리 점검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효과적인 질병통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혈액안전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 행동변화 프로그램(BBC) 확대 및 강화, 질병감시 프로그램 강화, 알코올 및 담배소비 확산통제, 당뇨병 · 암 · 심장병 등 비전염성 질병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확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라. 산모 · 아동 영양 개선

정부는 산모와 아동의 영양상태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 주요 2가지 단백질 결핍으로 인한 영양실조율(U2PEM) 1995년 12.6%에서 2006년 5% 미만으로 감소
- 극저체중아 출생율 1995년 50%에서 2006년 15%로 감소
- 발육 부전률 1995년 62%에서 2006년 35%로 감소
- 신체 질량지수 1995년 60%에서 2006년 40%로 감소
- 5세미만 여아 저체중률 1990년 8%에서 2006년 0%로 감소
- 5세미만 여아 극저체중률 1990년 26%에서 2006년 10%로 감소
- 1~5세 아동 야맹증 2003년 0.6%에서 2006년 6.2%로 감소
- 빈곤층 내 아동영양실조율 감소
- 산모 빈혈증세 현재의 70%에서 2006년 45% 로 감소
- 청소년 산모 빈혈증세 현재의 65%에서 2006년 25%로 감소
- 요오드 결핍증세 2003년 69%에서 2006년 25%로 감소

정부는 영양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미량영양소 보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저체중 아동 탄생률 감소를 위한 특별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향상된 영양 섭취를 위한 행동변화 프로그램, 산모수유제도 확산, 미량 영양소함유 음식섭취, 지역사회내 영양프로그램 개발, 요오드 결핍증세 통제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영양제도 및 영양 프로그램 농촌지역으로 확산, 도시지역내 필수영양 수요조사 실시, 지역 영양소를 현재의 20개 지역에서 64개 지역으로 확대, 학교내 급식프로그램 도입 등을 목표로 설정함.

마. 안전식수 설비

정부는 안전식수 비 수혜층을 2006년까지 전 가구의 26%에서 14%로 축소시키고, 위생지표 비도달 계층도 2006년까지 66%에서 33%로 절감하

기로 목표를 세웠으며, 2010년까지 100% 위생 도달률을 목표로 여러가지 방안을 내 놓았다. 그 외에도 오염된 식수로 인한 질병과 사망율을 경감하고, 비소함유 식수 섭취인구의 감소, 공공장소내 화장실 위생확보를 목표로 상수도에 비소(arsenic)함유 측정기를 도입하였고, 1998년에는 '위생개선을 위한 국가정책'을 실시하였다. 2004년에는 비소중독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비소함유 식수섭취 희생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시작하였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식수, 위생개선 정책수립, 위생 프로젝트와 상수도를 모든 도시 지역에 확대 설치, 수자원관련 문제 최소화를 위한 안전식수 공급 프로그램 운영, 식수의 질 점검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 또한 일반인의 위생습관 개선을 위한 행동변화 캠페인 전개와 저렴한 비용의 안전식수 공급과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임.

바. 전반적 보건 지수 향상

정부는 평균수명을 2000년 61세에서 2007년 66세로 증가시키고 인구성장률을 2000년 1.6%에서 2007년 1.5%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보건 서비스 개선 및 보건분야 예산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03-06년간 4년간 보건,영양, 인구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보건서비스 개혁 모니터링 , '보건 · 영양 · 인구 협의회' 설립, 빈곤지역 정기적 확인, 지역의료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실시, 지역보건소 관리 등을 목표로 설정함.

보조전략. 비주류의 사회참여 및 좋은 통치 (Good Governance)

16. 여성권리 및 여성 참여 확대

가. 경제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1) 일자리에서 여성 차별 현황

방글라데시내 여성의 고용인원은 남성 고용인원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저조한 편이며, 임금수준도 낮은 편이다.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동인력중 무급 노동자는 남성이 6.4%인데 비해 여성은 34.3%로 나타났다. EH한 자영업 종사비율을 보면 남성이 51.6%인데 비해 여성은 21.6%만이 자영업(self-employed)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방글라데시 여성의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58.5%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영업 종사여성의 66%는 한달에 1,000다카($15)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하여 자영업 남성 종사자들의 92.7%는 한달에 현지화 1,000다카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봉급자들의 경우 61%의 근로 여

성들이 매달 현지화 1,000다카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고 있는 반면 남성 근로자의 84%는 매달 1,000다카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실업율은 여성 7.8%, 남성 3.4%로 나타났으며 불완전고용율(underemployment)도 여성이 52.8%, 남성 7.4%로 나타나는 등 남 · 녀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여성차별 제거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모든 여성차별 장벽을 제거함과 함께 전문직 여성노동자가 고임금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 예산집행으로 여성의 직업훈련 및 IT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용기회 및 고용 절차에서 남녀차별을 줄이고 평등한 근로환경과 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고용인과 고용주간 노동법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3) 여성의 경제적 활동 참여 장려

정부는 2015년까지 빈곤 여성을 50%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 친환경적 일자리 조성을 위해 사내에 '아동 탁아시설'을 설립하고, 4개월-여성 출산휴가제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다. 농촌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여성 기업인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제도 및 빈곤여성을 위한 '취약계층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여성의 공정한 취업기회 제공 및 남녀평등 임금정책 실시, 물가상승율에 따른 임금 책정제도 강화를 주 목표로 하고 있음.

나. 여성 폭력 근절

여성폭력 사건이 100% 파악되도록 추적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발생율을 50% 축소할 것을 목표로 정부는 여성 납치, 성매매 관련 사회홍보 및 경찰 인지도 확산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여성간 네트워킹 구축, 강간피해 여성들을 위한 PEP test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탑 위기센터' 운영, 성매춘 여성 종사자들을 위한 재활센터설립 등 다양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2003년 제정 '여성 및 아동 폭력 금지법'에 가정내 폭력도 범죄로 추가 포함할 예정이며, 피해여성들을 위한 지원 확대, 여성폭력 예방캠페인, 여성폭력 담당 경찰관과 의료경찰 훈련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여성권리 관련 소송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규정에 입각한 법적판결을 내리도록 홍보할 예정임.

17. 좋은 통치(Good Governance)

가. 의미와 범위

좋은 통치(Good Governance)의 광범위한 의미는 국가기관의 권위와 정당성, 법 규범에 따른

권력행사, 국가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정부의 권한, 행정 관리, 회계 관계,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좋은 통치와 관련한 효과적인 전략 설정을 위해서는 4가지 취약점을 타파해야 한다. 즉 i) 어젠다 선정시 백과사전식 희망사항 리스트만 만드는 경향 ii) 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 부족 및 반발, iii) 진행되지 않는 현안에 관심을 더 깊은 가지는 한편, 진행되고 있는 현안에 무관심한 점, iv) 명확성 부족.

나. 우선순위 선정

다음 5가지는 거버넌스관련 이슈의 주요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것이다. i) 실천역량 강화, ii) 지방정부 능력향상, iii) 반부패 전략 강화, iv) 빈곤층의 사법제도 이용확대 및 형법 개혁, iv) 분야별 체제 향상

다. 전략 설정

방글라데시 내에서 공공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과보상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정부의 교육예산 분배는 그들의 활동실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활동실적 점검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시험합격률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설립된 '모범학교' 프로젝트는 교육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혁신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교육, 보건의 질 향상은 사회개발의 불균형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빈부격차 및 도-농간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여전히 극빈층은 여러가지 사회적,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개발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 정부의 활동 및 PRSP 의제

■ 실천역량 강화

거버넌스 이슈 관련, 정부는 실천역량의 강화를 위해 2005년 '중기예산편성제도' (Medium Term Budgetary Framework)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재원부족(under-funded) 으로 인한 프로젝트 실패 사례를 제거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10개의 정부부처에 3~5년 간 MTBF에 기초한 기본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국가 조정위원회' 가 총리실에 설치되어 시급한 국가적 현안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검토할 '지불 위원회' (Pay Commission)의 년간 사업검토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중기예산 편성제도'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동 제도를 더 많은 부처에 확산하는 조치가 시행 예정임.
- 그 외에도 공공부문 우수인력 확보 및 인력훈련 기관의 위상 강화, 우량 프로젝트의 시행 등이 있음.

■ 지방정부 역량 강화

정부는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상당수의 복합훈련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 공무원에게 각종 훈련을 시행하고 있

으며 지방정부 행정책임자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만을 위한 새로운 세금제도가 승인되었으며 소규모 행정단위(읍 · 면) 기능 강화를 위한 예비 프로젝트가 시행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체 개발사업을 위하여 연간 개발계획(Annual Development Program: ADP) 예산을 직접 공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지방정부 공무원 훈련편람이 개정될 예정임.
- 지방정부에 선거제를 도입하고, 지방정부 행정구조 및 선거주기(cycle)를 재검토하며, 포괄적인 '지방정부 법안' (Local Government Act)을 제정할 예정.
- 지방개발을 위한 예산지출시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지방정부가 직접 예산을 배정받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 및 부정소지 예방을 추진함.
- 현재 지방정부에 부여된 세입(현행 1%의 토지개발세)는 5%로 증가되어야 하며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세입예산을 관리 · 운영하도록 할 것임.

■ **반부패 전략**

방글라데시는 국제 NGOs인 Transparency International(TI)의 국가별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조사에서 조사대상 159개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5년연속 부패지수 1위인 가장 부패한 나라로 선정되었다. 본 조사는 방글라데시 내부행정 및 공무원들의 심각한 부패수준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지표이다. 정부는 부패 근절을 목표로 '반부패위원회 법안' (Anti-Corruption Commission Act)을 통과시켰으며, 3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설립과 동시에 예전의 반부패청(Anti-Corruption Bureau)은 해산되었다. 1992년 6월 정부는 '공공지출 검토 위원회' (Public Expenditure Review Commission)와 '공공세입제도 개혁 위원회' (Commission Reforming Public Revenue System)를 설립하였다. 또한 '중기예산 편성제도' 의 도입과 함께 '예산 모니터링 제도', '자원 위원회', '중기예산조정 및 자본위원회' 가 설치되어 공무원 및 정치인의 공무관련 부정방지를 막기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었고 비리자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였다.

■ **형사사법제도 개혁 및 빈곤층의 사법제도 접근 강화**

정부는 사법제도에서의 good governance 달성을 위하여 형사사법 개혁 및 경찰개혁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 정부는 2002년 일반인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속 재판법' (Speedy Trial Act) 안을 통과시켰고, 9개의 이동 법정이 지방에 설치하였다. 2004년에는 강력범죄 소탕을 위해 기동타격대(Rapid Action Battalion)가 생겼으며 2002년에는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한 염산 테러처벌법(Acid Offences Act)을 제정하여 시행

하였다.

현재는 형사사법 강화 및 빈곤층의 사법제도 이용율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시행중에 있다. 경찰력은 05년 현재 13,000명으로 증가되었으며, 경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주요 개선안이 정부에 제출되었다.

- 회계년도 2005~'07을 위한 PRSP에는 사법권을 권력에서 완전하게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수경찰대 등 치안확보를 위한 경찰력 강화와 동시에 경찰의 비필수적 업무(의전 및 VIP수행 등)는 축소 예정임.

III. PRSP 평가 및 향후 전망

1. 향후 경제전망 및 PRSP 추진

방글라데시 경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출, 외환관리면에서의 여러 가지 도전요인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의 안정과 개인투자 확대, 정부와 선진 원조기관의 경제개혁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진행된다면 향후 2-3년간 경제성장율을 5~6%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특히 항만과 에너지부문), 재정건전성 강화, 노동의 질 향상, 무역장벽 완화 등의 조치를 성실히 수행할 경우 경제성장율이 약 7~8% 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재정건전성의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저축율 증대만으로는 투자확대에 한계가 예상되며 국가세입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 및 징수율 확대, 공여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외국 자본유입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가 '05.11 마련한 빈곤경감전략 보고서(PRSP)는 개발과 성장을 위한 여러 도전과제와 실행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PRSP는 정부의 과감한 개혁을 강조하며 야심찬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과 '05 ~ '07년간의 운용계획(rolling plan)을 두고 있다. 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빈곤친화적(pro-poor) 전략을 추진하며 이는 MDGs의 달성과 연계하여 상호 조화로운 정책과 실시계획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05.11 다카에서 개최된 PRSP 집행회의에서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마련한 개발전략에 대한 공여국들의 동의와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는 결의가 있었다.

2. 전략의 효율성 평가

정부작성 빈곤경감 전략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여러 이해집단(학계, 경제계, NGO, 원조기관 등)간 논의와 과거 개발전략의 공과를 검토 후 작성되었다. 정부는 전략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전략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동 과정에 원조기관, NGO들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금번의 PRSP가 방글라데시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는지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보건 및 교육분야에서 방글

라데시가 분명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동 수준은 여전히 절대치로서 열악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의 보건의료, 교육분야 진전율은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인구증가율, 초·중등학교 수료율, 모성사망율 등의 수치는 정부의 노력과는 다르게 개선조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PRSP 장래를 어둡게 하는 것은 최근의 정치현황과 거버넌스 이슈이다. 방글라데시는 2007년 초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정치권은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과격테러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PRSP의 실효적이행보다는 여당인 BNP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는데 치중하고 있으며, PRSP가 자국의 빈곤 현실을 솔직히 드러내기보다 미래의 불확실한 목표들을 장밋빛으로 치장하였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거버넌스(좋은 통치) 이슈와 관련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방글라데시가 2000년 이후 거버넌스 상황이 개선되기 보다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며, 그것도 거버넌스의 주요 측면 – 부정부패 관리법에 의한 통치, 정치적 안정에서 조사대상국 209개국 가운데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여 PRSP 이행 가능성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낳고 있다.

원조기관들은 정치적 상황속에서 진행된 금번 'PRSP 집행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제시한 목표들과 목표들의 이행을 검증하기 위해 년간 2회의 집행평가회의를 갖도록 제안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마지못해 동의하였다.

PRSP 이행과 관련된 한 가지 긍정적인 요인은 방글라데시 경제전망이 밝은 편이고 민간부문의 성장을 통해 빈곤경감 이슈들도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조기관들은 정부의 행정관리 능력 향상과 함께 민간부문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원조전략을 마련하여 왔으며 향후 PRSP의 전개과정에서 원조기관과 NGO등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금번 정부가 작성한 PRSP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민간, 원조기관 모두의 협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3. MDGs와의 연계

PRSP는 2000년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ls) 달성을 위한 방글라데시의 국가개발전략 및 빈곤경감 계획이라 할 수 있다. PRSP는 빈곤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지 않고 우리 세대에서 해결하겠다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결의이다. MDGs 달성을 위해 방글라데시의 PRSP는 빈곤경감(특히 기아퇴치와 구조적 빈곤문제에 집중)과 사회개발(특별히 여성, 어린이 권익신장)이 상호 독립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방글라데시가 2015년까지 달성해야할 주요 MDGs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는 빈민층 50% 감소
- 모든 여·남아에게 보편적 초등교육 실시
- 초중등 교육 내 여성 차별 철폐

- 유아 및 5세미만 아동 사망률 65% 감소 및 남녀격차 해소
- 5세미만 아동 영양실조률 50% 감소 및 남녀 격차 해소
- 산모 사망률 75% 감소
- 생산적 보건 서비스 확산 및 서비스의 질 개선
- 사회적 폭력, 특히 빈곤층과 여성 및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 근절
- 국가 개발계획에 '재해 관리', '환경유지' 과제들을 포함시킴

〈 빈곤경감관련 사회개발 분야 MDGs 〉

개발 지표	1990년	2002년 기준	연평균 개선율 (1990-02) (%)	2015 MDGs 목표	연평균개선률 (2002-15) (%)
수입 빈곤층 (%)	59	* 50	-1.5	25	-3.3
절대 빈곤층 (%)	28	* 19	-3.2	9.5	-3.3
성인 문자해독률 (%)	35	49.6	3.5	9.	6.3
초등교육 입 학률 (%)	56	86.7	4.6	100	1.2
중등교 육 입학률 (%)	28	52.8	7.4	95	6.1
5세미만 사망률 (천명당)	108	76	-2.5	25	-5.2
산모 사망률 (십만명당)	554	390	-2.5	98	-5.8
평균 수명 (세)	56	64.9	1.3	73	1.0
인구 성장률 (%)	2.1	1.4	..	1.3	..
아동 저체중률 (%)	67	* 51	-2.4	26	-3.3

[참고문헌]

- Unlocking the Potential– National Strategy for Accelerated Poverty Reduction, GED, Planning Commission, Ministry of Finance, 2005
- Bangladesh Development Series– Bangladesh PRSP Forum Economic Update, 2005
- Bangladesh Progress Report–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UN/Government of Bangladesh, 2005
- The Structure and distribution of personal income and poverty reduction in Bangladesh, Khan A.R, 2004
- 2003 Statistical Year Book,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2004
- Annual Development Plan, Planning Commission, Ministry of Finance, 2005
- 200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2005
- 방글라데시 원조그룹 home page:
- UNDP home page:
- ADB home page:
- CIDA: www.acdi-cida.gc.ca/CIDAWEB/webcountry.nsf VLUDocEn/factsatsglance

유엔아동기금(UNICEF)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아동개발기구

"어린이에게 투자하라.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어린이이다."
– 제임스 그란트 (전 유니세프 총재) –

박 동 은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Ⅰ. 어린이를 도와주는 유니세프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는 전세계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해 일하는 유엔기구이다.

1946년 2차대전이 끝난 직후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유니세프는 지난 60년간 '차별없는 구호'의 설립정신에 따라 국적과 인종, 성별, 종교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구호의 손길을 전해 왔다. 전세계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155개 나라에서 그 나라의 정부 및 민간기구들과 협력하여 어린이를 위한 영양, 보건, 식수 및 위생환경, 기초교육, 어린이 보호, 긴급구호 등의 아동개발사업을 펼치고 있다.

1. 유니세프와 아동권리 발전의 역사

■ 1946년 12월 11일 : 유니세프 창설

2차대전 직후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유럽과 중국의 어린이들을 위해 유엔은 유니세프(유엔국제아동긴급구호기금,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를 창설

■ 1950년

유엔은 유니세프의 임무를 유럽과 중국 뿐아니라 개발도상국으로 확대

■ 1953년

유니세프가 유엔상설기구가 되어 영구적으로 세계 어린이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됨(본래의 명칭에서 International과 Emergency를 빼고 현재의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가 되었으나 널리 알려진 UNICEF라는 약자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

■ 1950년대

WHO(세계보건기구)와 공동으로 보건캠페인 실시– 결핵, 말라리아, 트라코마, 인도마마 등의 전염병 퇴치에 주력

■ 1959년 11월 20일 :

10개항의 유엔아동권리 선언

■ 1960년대

아동사업을 각국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는 한편 아동교육과 가족계획을 지원

■ 1965년

국가간의 우호를 증진시킨 공로로 노벨평화상 수상

■ 1979년 : 세계아동의 해

유엔은 1979년을 세계아동의 해로 선포하고 유니세프를 국제아동개발사업의 주관기구로 임명, 아동권리를 기념하는 행사와 향후의 아동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 1980년대

유니세프는 1983년 설사로 인한 탈수증 예방, 예방접종, 어린이 영양개선을 위한 모유수유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 캠페인' 시작. 80년대 말까지 계속된 이 캠페인으로 약 1천 2백만 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구한 것으로 평가

■ 1989년 11월 20일 :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의 권리를 총망라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됨

■ 1990년 9월 30일 : 세계아동정상회담

71개국의 정상을 비롯하여 159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유엔본부에서 세계아동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이 열림

1990년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과 2000년까지 성취해야할 27개 아동상황 개선 목표와 행동계획 채택

■ 2001~2002년

유니세프는 어린이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의 '어린이를 위한 지구촌운동(Global Movement for Children)'과 ' 아동보호서약(Say Yes for Children) ' 캠페인 전개 (1억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

■ 2002년 5월 8~10일 : 유엔아동특별총회 (UN Special Session on Children)

1990년 세계아동정상회담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0년까지 달성할 새로운 목표를 담은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발표

■ 2006년 12월 11일 : 유니세프 창립 60주년

2. 유니세프의 조직

유니세프는 전세계 190여개 나라에 조직을 가지고 있어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어린이 지원사업을 펼친다. 155개 나라와 지역의 개발도상국 대표사무소는 어린이들을 위해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한국을 비롯한 37개 선진국에는 유니세프국가위원회가 조직되어 개발도상국의 아동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기금모금과 홍보 및 교육사업을

실시한다.

유니세프의 아동개발사업을 위해 7천 명의 직원이 본부와 세계 각국에서 일하고 있다.

1) 유니세프 본부(UNICEF Headquarters)

■ 본부(Headquarters, 미국 뉴욕)

뉴욕에 있는 유니세프 본부는 정책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행이사회는 36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이사국은 3년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의해 선출된다. 이사국의 지역별 분포는 아프리카 8개국, 아시아 7개국, 동유럽 5개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5개국, 서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12개국으로 되어 있다.

사무국은 총재(Executive Director)의 책임하에 유니세프가 전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어린이를 위해 펼치는 실제적인 활동을 총괄한다. 현 총재는 2005년 5월 새로 취임한 앤 배너먼(Ann M. Veneman) 씨이다.

■ 유럽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 for Europe, 스위스 제네바)

한국을 포함한 37개 선진국 유니세프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관할한다.

■ 구호물품조달본부

(Supply Division, 덴마크 코펜하겐)

유니세프의 개도국 아동개발사업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구매하고 보관, 배송한다.

매년 7억 불 상당의 물품을 세계 각국으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고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 아래와 같은 구호물품을 조달하였다.

- 소아마비 백신 25억 개 (유니세프 물품의 절반을 차지)
-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살충처리된 모기장 730만 장
- 3억 9천만 불의 예방백신과 백신보관용 냉장기구세트
- 6,707만 불의 말라리아 치료약품(아르테미시닌)
- 7,100만 불 상당의 교육기자재
- 기타 천막, 담요, 식수정화제, 생활용품 등의 긴급구호물품

■ 이노첸티 리서치센터

(Innocenti Research Centre, 이태리 플로렌스)

유니세프의 조사연구기관으로 아동문제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며, 어린이와 관련된 정책을 분석 · 개발한다.

■ 브뤼셀사무소

(Brussel Office, 벨기에 브뤼셀)

각국 정부의 유니세프기금을 섭외하고, 정책결정자와의 협력을 조정한다.

■ 일본사무소 (Office for Japan, 일본 동경)

각국 정부의 유니세프기금을 섭외하고, 정책결정자와의 협력을 조정한다.

2) 유니세프 지역사무소

(UNICEF Regional Offices)

유니세프는 아래와 같이 7개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유니세프 지역사무소는 해당지역 국가의 대표사무소들이 현지 어린이들을 위해 펼치는 아동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며 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Office, 태국 방콕)
- 남아시아 지역사무소
  (South Asia Regional Office, 네팔 카트만두)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사무소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al Office, 요르단 암만)
- 서부/중앙아프리카 지역사무소
  (West and Central Africa Regional Office, 세네갈 다카)
- 동남아프리카 지역사무소
  (Eastern and Southern Africa Regional Office, 케냐 나이로비)
- 동유럽/독립국가연합 지역사무소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Regional Office, 스위스 제네바)
- 라틴아메리카/카리브연안 지역사무소
  (The America and Caribbean Regional Office, 파나마 파나마시티)

3) 유니세프 대표사무소(UNICEF Field Offices)

유니세프의 156개 대표사무소는 155개 개발도상국과 1개 지역(팔레스타인점령지역)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구호기구들과 협력하여 어린이의 영양개선과 보건서비스 확대, 식수공급과 위생환경 개선, 기초교육, 어린이 보호, 긴급구호 등의 아동개발사업을 펼쳐 나간다. (세부국가 및 지역은 별첨 표 〈P131. 유니세프가 활동하는 나라와 지역〉 참조).

4)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UNICEF)

우리나라를 포함한 37개 선진국에는 유니세프 국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주창하는 한편 유니세프가 전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장기적인 아동개발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세계어린이 상황과 유니세프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민간부분으로부터 기금을 모아 유니세프본부로 지원한다.

유니세프 국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나라 (37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미국, 벨기에, 산 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체코,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홍콩

3. 유니세프의 예산 (2004)

유니세프는 각국 정부와 기업, 개인 후원자들이 내는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2004년도 유니세프 수입은 19억 7천 8백만 불

〈 유니세프국가위원회 기부금 순위 〉 (단위: 천 불)

순위	국가명	기금액
1	일 본	103,208
2	독 일	89,613
3	네덜란드	66,679
4	이 태 리	55,929
5	미 국	48,940
6	프 랑 스	41,365
7	영 국	27,480
8	스 페 인	27,226
9	스 위 스	15,901
10	스 웨 덴	10,432
11	호 주	9,439
12	캐 나 다	8,675
13	한 국	8,334
14	핀 란 드	7,967
15	포르투갈	7,116
16	홍 콩	6,897
17	그 리 스	6,688
18	덴 마 크	6,159
19	벨 기 에	3,383
20	오스트리아	3,126

〈 정부 유니세프기부금 순위 〉 (단위: 천 불)

순위	국가명	기금액
1	미 국	262,782
2	영 국	187,957
3	일 본	155,605
4	노르웨이	135,130
5	네덜란드	113,405
6	스 웨 덴	111,597
7	캐 나 다	86,705
8	덴 마 크	38,147
9	호 주	32,199
10	이 태 리	29,407
11	핀 란 드	22,002
12	프 랑 스	16,618
13	스 위 스	16,563
14	아일랜드	14,158
15	벨 기 에	13,868
16	독 일	8,695
17	뉴질랜드	5,910
18	스 페 인	5,816
19	룩셈부르크	3,258
20	한 국	3,100

로, 이 중 70%는 정부 등 공공부문으로부터 모금된 것이며, 나머지 30%는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등을 통한 민간모금이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2005년 현재 연간 약 1천만 불의 기금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긴급구호 사태가 발생한 지역과 최빈국에서 전개되는 유니세프의 기본사업에 주로 쓰이고 있다. 일부 기금은 한국위원회가 직접 해당국가와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북한,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등의 아동개발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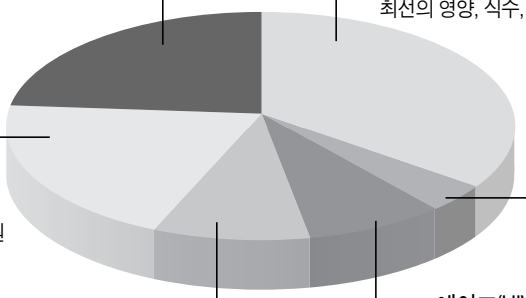
유니세프의 2004년도 직접사업비는 13억 4천 4백만 불로, 조기아동발달(34%), 종합면역사업(22%), 여자어린이 교육(21%), 어린이 보호(10%), 에이즈(9%) 등 유니세프의 5대 중점사업에 지원되었다.

지역별 지원규모는 동남부 아프리카(24%), 서부/중앙 아프리카(20%), 남아시아(18%), 중동/북아프리카(16%), 동아시아/태평양(9%),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연안(6%), 동유럽/ 독립국가연합(4%), 지역간 조정(3%) 순이었다.

4. 세계의 어린이들

날마다 3만 명, 1년에 1천 1백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가난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6억 명의 어린이가 하루 1불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층이다.

2004 유니세프 중점사업별 사업비



종합면역사업(Immunization 'Plus')
어린이 6대질병(소아마비, 디프테리아, 결핵, 백일해, 홍역, 파상풍 등) 으로부터 해마다 250만명의 어린이를 구함
2억 9300만불 (22%)

조기아동발달 (Early Childhood Development)
영유아 사망률을 줄이고,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되는 취학 전 시기의 어린이에게 최선의 영양, 식수, 교육 등을 지원
4억 5900만불 (34%)

여자어린이 교육
(Girls' Education)
여자어린이들이 남자어린이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2억 8200만불 (21%)

기타(Others)
5500만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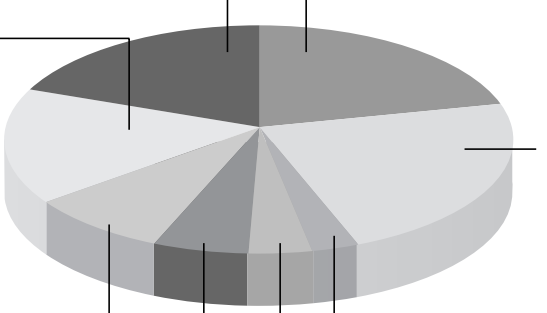
에이즈(HIV / AIDS)
청소년 에이즈 예방교육과 에이즈 고아보호, 어머니로부터 수직감염 예방을 지원
1억 1500만불 (9%)

어린이 보호
(Child Protection)
학대, 착취, 폭력,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1억 4000만불 (10%)

총 13억 4천 4백만불

*(프로그램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6천 4백만 불은 제외하였음)

2004 유니세프 지역별 직접사업비



남아시아 (18%)
중앙, 서아프리카 (20%)
중동 및 북아프리카 (16%)
동, 남부 아프리카 (24%)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9%)
지역간 조정 (3%)
중남미 지역 (6%)
동유럽/독립국연합 (4%)

총 13억 4천 4백만불

*프로그램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6천 4백만 불은 제외하였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48%를 차지함

■ **예방접종 못 받는 어린이 1백 40만 명**

예방접종은 지난 20년 동안 2천만 명의 어린이의 생명을 구했지만 아직도 1세 미만 영아 4명 중 1명은 기본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다. 해마다 1백 40만 명의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사망한다.

■ **영양실조 어린이 2억 명**

영양부족으로 체중이 미달되는 어린이 인구는 2억 명에 달한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 영양실조는 어린이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다.

■ **오염된 물을 마시는 인구 10억 명**

10억의 인구가 안전한 식수를 마시지 못한 채 살아간다. 오염된 물로 인한 설사병으로 날마다 5천 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잃는다.

■ **화장실 없이 살아가는 어린이 3명 중 1명**

어린이 3명 중 1명은 화장실 없는 환경에서 살아간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어린이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아주 높다.

■ **초등학교 못 다니는 어린이 1억 1천만 명**

초등학교 취학연령 어린이 1억 1천만 명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며 이중 60% 이상이 여자어린이이다.

■ **어린이 노동자 2억 5천만 명**

14세 미만 어린이 2억 5천만 명이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70%는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 **전쟁터의 소년병 30만 명**

18세 미만 어린이 30만 명이 전쟁터에서 소년병으로 싸우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강제 징집되거나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군대에 들어간다. 지난 10여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었으며 전쟁고아가 되었다.

■ **에이즈고아 1천 5백만 명**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의 수는 1천 5백만 명이 넘는다. 이들 중 90%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다. 에이즈고아들은 가난과 폭력, 착취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 에이즈에 감염된 개발도상국 어린이 중 80%가 5세 이전에 사망하지만 치료받는 어린이 비율은 5% 미만이다.

〈 **유니세프의 2006 ~ 2009 중점사업** 〉

유니세프의 2006-2009 중점사업	유엔이 정한 새천년개발목표
1) 영유아 생존과 발달 2) 기초교육과 성평등 3) 에이즈 퇴치 4) 어린이 보호 5) 어린이권리를 위한 정책 지지와 파트너쉽	1) 절대빈곤과 기아를 퇴치한다 2) 모든 어린이가 초등교육을 마치도록 한다 3) 성평등을 강화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한다 4) 어린이 사망률을 낮춘다 5) 모성사망률을 낮춘다 6)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을 줄인다 7) 지속가능한 환경개발을 이룬다 8)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

5. 유니세프의 2006-2009 중점사업

유니세프는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제시된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을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4년 단위로 중장기 전략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니세프의 전략계획은 2002년 유엔총회에서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8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 MDG)와 대부분 일치한다.

중장기전략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유니세프는 여자어린이 교육과 조기아동발달, 종합면역사업, 에이즈퇴치, 어린이 보호 등 5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아동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유니세프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향후 4년 동안 영유아 생존과 발달 증진, 기초교육 확산과 성평등, 에이즈 퇴치, 어린이 보호, 어린이 권리를 위한 정책 지지와 협력관계 강화 등 5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

가. 영유아 생존과 발달

어린이사망률 감소는 새천년 개발목표의 제4항이다. 유니세프는 0세부터 만 3세까지의 영유아와 이들을 돌보는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보건서비스와 영양, 식수/위생환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쟁이나 자연재해 지역의 어린이를 특별지원할 것이다.

■ 목표와 추진전략

- 어린이사망의 주요원인이 되는 기본질병에 대한 예방접종률 확대 (250만 어린 이의 생명을 구하는 효과)
- 정부 및 다른 유엔기구들과 협력하여 유아의 영양과 보건 분야 적극 지원
- 재정 지원 및 교육훈련을 통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 식수와 위생시설 개선으로 보건상황 개선
- 긴급사태 발생지역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
- 모든 나라에서 90% 예방접종률을 달성. 모든 지역에서 최소 80%의 예방접종률 달성을 목표로 예방접종캠페인 전개
- 말라리아 발생지역에서 모기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모기장 보급률이 최소 60%가 되도록 모기장 보급
- 비타민 A 공급 확대
- 완전모유수유율 높이기

나. 기초교육과 성평등

기초교육 확대는 새천년 개발목표의 제2항과 제3항에 공통으로 관련된다. 유니세프는 이를 위해서 초중등교육에서의 성차별문화를 없애고 특히 여자어린이들이 기초교육과 실용적인 교육을 받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목표와 추진전략

- 소수민족 어린이 등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교육기회 확대. 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가 기초교육을 받도록 함
-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어린이 비율 40% 줄이기

- 여자어린이와 장애어린이를 중심으로 중등학교 진학률을 높여 2009년까지 초등과 중등학교에서 성 평등 달성
- 교육의 질 개선과 중퇴율 낮추기. 90%의 어린이가 5학년까지 교육을 마치도록 지원
- '어린이에게 친근한 학교'에 기초한 교육의 질에 관한 규정을 가진 국가비율 60% 늘리기
- 학업성취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20% 늘리기
- 긴급사태나 전쟁, 에이즈 등 교육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교육시스템 조기 복구

다. 에이즈 퇴치

새천년개발목표의 제6항은 21세기 최악의 질병인 에이즈를 줄이는 것이다. 1분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에이즈로 사망하며 어린이 1명과 청소년 1명이 새롭게 에이즈에 감염된다. 에이즈고아의 수도 1천 5백만 명에 이른다.

■ 목표와 추진전략

- 항레트로바이러스(ARVs) 에이즈치료제 보급 확대로 모자감염 예방
- 현재 10% 미만인 에이즈 감염 임산부의 ARV 치료율 80%로 높이기
- 여성과 어린이에게 ARV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 강화
- 어린이용 ARV의 개발 및 보급 확대
- 에이즈관련 질병 치료에 효과적인 값싼 항생제 코트리목사졸 (Cotrimoxazole) 보급 확대
- 청소년에게 에이즈관련 정보와 예방법 전달

라. 어린이 보호

어린이보호문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모든 항목과 관련된다. 폭력과 착취, 학대, 위험한 노동 등 모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면 생존율이 높아지며 에이즈의 위험도 감소한다.

■ 목표와 추진전략

- 착취적인 형태의 노동,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과 정책, 프로그램 체계가 확립되도록 지원
- 전쟁이나 자연재해의 영양을 받는 어린이 지원방법 개선
- 어린이범법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사법제도의 개선 요청
- 가족찾기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아 감소 추진
- 각국 정부가 빈곤층에게 기초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능력 강화

마. 어린이 권리를 위한 정책 지지와 파트너쉽

이는 '빈곤퇴치와 국제적인 협력관계 발전'이라는 목표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이다. 어린이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은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 목표와 추진전략

- 주요정책의 입안과 예산의 집행 등이 어린이 중심이 되도록 지원
- 어린이권리와 관련된 개선된 자료의 수집과

평가, 홍보 등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력 행사
- 긴급사태시 해당국가와 지역사회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각 나라 정부 및 관련단체와 협력
- 어린이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지원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확실한 이행을 각 나라 정부에 촉구

II. 우리 어린이를 도와준 유니세프 : 주한유니세프대표부(1950~1993)

유니세프는 1948년부터 우리나라 어린이를 지원하였으며, 1950년 3월 25일 대한민국정부와 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에서의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6 · 25가 발발하자 유니세프는 고통받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분유와 담요, 의약품 등 막대한 양의 구호품을 지원해 주었으며, 그 이후 1993년 말까지 한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맞추어 기초보건서비스와 농어촌 영양개선, 과학교육.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유아교육 등의 어린이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1948년부터 1993년까지 유니세프가 한국에 지원한 기금은 약 2천 3백만 불에 달한다.

■ 1950~1958년 긴급구호단계

6 · 25 전후 복구기간 중 분유와 담요, 의약품 등 긴급구호품 대량지원

■ 1963~1979년 아동의 생존 · 발달 단계

어린이의 영양 개선과 백신 생산, 농촌 기초보건사업, 보건의료 교육, 교육기자재 공급 지원

■ 1980~1987년 조기아동교육사업 단계

교육자료 제작, 시범유치원 설치, 교사훈련, 부모교육 및 탁아사업 등 조기아동교육사업 중점 지원

■ 1988~1993년 세계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동반자 단계

- 선진국형 유니세프기구인 유니세프국가위원회 창립 준비
- 개발도상국어린이들을 위한 모금사업, 아동권리 홍보, 모유수유 권장, 세계교육사업 등을 시작함으로써 한국위원회 사업의 초석을 닦음
- 1993년 12월 8일,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법인 설립(당시 외무부, 현 외교통상부 등록)

■ 1993년 12월 말 주한유니세프대표부 철수

III.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994년 ~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개발도상국형 수혜기구인 주한유니세프대표부는 1993년 12월 말 한국에서 공식철수하고 1994년 1월 1일 선진국형 기구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유니세프의 대량지원을 받던 1950년대의 최빈국 한국이 다른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나라로 발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유니세프의 주

임무는 한국의 빈민아동 구호에서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지원으로 바뀌었다. 한국위원회의 설립은 유니세프 내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주는 나라로 발전한 첫 번째 사례이며, 이제 한국이 수혜국이 아니라 제3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지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보다 책임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유니세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내에서 세계어린이 상황과 유니세프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기금모금 사업을 통해 유니세프의 장기적인 아동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권리 홍보 및 세계교육, 모유수유 권장 등의 사업을 통해 어린이권리를 신장하는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1. 한국위원회 조직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분되며, 친선대사와 특별대표, 각 분야의 후원클럽, 협력도시 등이 있어 유니세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가. 이사회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명망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한국에서의 유니세프 사업의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한다. 현재 현승종 회장이 이사회를 이끌고 있다.

나. 사무국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 이하 후원자개발부, 판매사업부, 홍보부, 세계교육부, 총무부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박동은 사무총장이 사무국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다. 친선대사

유니세프의 친선대사는 주로 명망있고 평판 높은 문화예술인 중에서 임명된다. 현재 한국위원회의 친선대사는 영화배우 안성기 씨와 소설가 박완서 씨, 첼리스트 정명화 씨,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 씨 등 4명이다. 이들은 유니세프를 홍보하고 기금모금사업에 참여하여 대중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라. 특별대표

문화예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사 중에서 각 분야별로 임명된다. 국악인 황병기 씨, 개그우먼 김미화 씨, 방송인 손범수 씨, 영화배우 이영애 씨, 이병헌 씨 등이 해당 분야의 특별대표를 맡고 있다.

마. 후원클럽 / 협력도시

사립초등학교 교장클럽, 어머니클럽 등 유니세프를 후원하는 클럽이 있으며 협력도시에 후원클럽이 조직되어 유니세프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유니세프의 협력도시는 강원도 원주시와 충청남도 금산군이다.

2. 한국위원회의 주요사업

가. 개발도상국 및 긴급구호 지원사업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다양한 기금모금 사업을 통해 모은 기금을 유니세프 뉴욕본부를 통해 전세계 155개국의 어린이 영양, 보건, 식수와 위생환경, 기초교육, 긴급구호 등의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005년 현재 1년에 약 1천 3백 3십만 불의 기금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쓰나미, 파키스탄 지진 등 긴급구호 사태가 발생한 지역과 최빈국에서 전개되는 유니세프의 기본사업에 주로 쓰이고 있다. 이 중 일부 기금은 북한,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한국위원회가 직접 지정한 국가의 아동지원사업에 쓰인다.

1994년 설립 당시 5천명 이었던 후원자 수는 현재 12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기금도 설립 첫 해에 비해 4배로 증가했다. 1994년 창립 이래 지난 12년간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지원한 유니세프기금은 약 6천 3백만 불에 달한다.

나. 기금모금 사업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가 전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아동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기금모금 사업을 펼치고 있다.

1) 후원자를 통한 기금모금

- DM, TM 등을 통해 유니세프의 아동지원사업에 동참할 후원자를 모집/관리
- 매월 자동이체, 신용카드, 지로용지로 기금을 내는 월 정기후원프로그램 운영
- 향후 유산증여(legacy), 고액기부자(major donor) 등을 통해 기금모금 강화
- 2005년 현재 후원자 수 : 약 12만 명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개발도상국 지원기금 〉

연도	기 금 액
1994	$ 3,513,281 (2,712,442,423원)
1995	$ 3,474,516 (2,880,019,649원)
1996	$ 3,345,596 (3,025,296,729원)
1997	$ 2,125,095 (2,682,835,523원) (3~12월)
1998	$ 2,368,594 (2,759,313,850원)
1999	$ 3,155,896 (3,555,212,482원)
2000	$ 3,274,489 (4,256,306,439원)
2001	$ 5,107,115 (6,312,762,585원)
2002	$ 6,047,044 (7,234,592,255원)
2003	$ 7,587,443 (8,799,001,134원)
2004	$ 9,361,251 (9,774,086,972원)
2005	$ 13,305,411 (13,303,771,468원)
계	$ 62,665,731 (67,295,641,509원)

〈 2005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개발도상국 지원금 〉

사업내용	기금액
비지정 일반기금	$ 8,556,933 (64%)
지정 특별기금	$ 4,748,478 (36%)
- 쓰나미 긴급구호	$ 1,798,478
- 파키스탄 긴급구호	$ 600,000
수단 다르푸르 긴급구호	$ 200,000
- 북한 어린이 보건	$ 450,000
- 캄보디아 에이즈	$ 500,000
- 아프간 어린이 교육	$ 300,000
- 베트남 식수/위생	$ 250,000
- 중국 교육 및 에이즈	$ 200,000
- 몽골 조기아동발달	$ 150,000
- 스리랑카 (쓰나미 재건)	$ 100,000
- 아프리카	$ 200,000
계	$ 13,305,411

2) 유니세프 카드/상품 판매

- 유니세프 본부에서 제공하는 카드와 선물용품을 판매하여 기금 마련
- 학교와 회사, 개인 등에게 연간 약 40만 장의 카드와 4만여 점의 선물용품 판매
- 판매 증진을 위해 유명인사를 유니세프카드 후견인으로 임명

3) 사랑의 동전모으기 (Change for Good)

-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기내모금을 하며 인천국제공항, 은행, 편의점, 호텔, 외식업체, 공공기관 등에 모금함 비치하여 기금 모금

4) 학교 모금

주제별 연 2회 캠페인 실시

5) 기업과의 협력 (Corporate Alliance)

기금모금 협력사업 협약 체결

6) 특별행사 및 기타 모금사업

- 사랑의 맨발걷기대회, 연말 자선디너쇼, 음악회, 바자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기금 모금
- 로열티/라이센싱 사업, 교회 모금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

다. 대외협력사업

1) 홍보 및 대외협력 사업

각종 홍보자료의 개발 및 보급,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와 협약의 이행 촉진,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유니세프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널리 알리고 세계의 어린이 문제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을 일깨우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CRC) 한국NPO연대

- 2005년 9월 15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비롯해 국내에서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하는 15개 단체가 연대하여 창립 (초대회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박동은 사무총장)
-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및 국내아동권리 증진활동, 한국정부의 CRC 유보조항 철폐 촉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 촉구, 2008년도 CRC국가보고서 제출시 민간보고서 제출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

■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NGO 연대사업

- 2005년 6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비롯한 22개 해외개발 NGO와 시민단체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 정부의 해외원조정책 개선을 촉구해 지구촌 빈곤퇴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결성

2) 세계교육 사업

나눔체험교육과 세계교육시범학교 운영, 국제캠프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최빈국의 상황을 알리며 세계평화를 위한 갈등 해소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어려운 나라를 돕는 나눔의 정신과 세계시민의식을 키워주고 있다.

3) 모유수유 권장

(BFHI: Baby-Friendly Hospital Initiative)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아기에게친근한병원'을 임명하는 한편 의료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 현재, 50개 BFHI 병원)

4) 유니세프 본부와의 공동 에이즈캠페인

2005년 10월 25일 시작된 유니세프의 에이즈캠페인 'Unite For Children, Unite Against AIDS'에 동참하여 에이즈고아 등 에이즈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홍보와 기금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별첨 : 유니세프가 활동하는 155개 나라와 1개 지역

동아시아/태평양 (27개국)	나우루, 니웨, 동티모르, 라오스,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마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베트남, 북한, 사모아, 솔로몬군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쿡제도, 키리바시, 토켈라우, 태국,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남아시아 (9개국)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세이셸,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중동/북아프리카 (19개국 + 1개 지역)	리비아, 바레인, 레바논,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쿠웨이트, 카타르, 튀니지, 케냐, 팔레스타인점령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ies: OPT)
서부/중앙아프리카 (24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아, 베냉,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케이프베르데, 코트디브와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동남아프리카 (21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룬디,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지부티, 짐바브웨, 코모로, 탄자니아
동유럽/독립국가연합 (20개국)	그루지아, 러시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연안 (35개국)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몬세라트, 바베이도스, 영국령 버진군도,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반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터크스케이커스제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Habitat For Humanity Korea) 소개

강 용 상 / 한국해비타트 사업관리팀장

1. habitat (해비타트) 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미국의 변호사인 밀러드 풀러(Millard Fuller)와 그의 부인 풀러(Linda Fuller)가 1976년 창설한 초교파적인 민간 기독교 운동 단체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거주지'로 보금자리를 의미합니다.

밀러드 부부는 20대 후반에 이미 많은 재산을 모았으나, 인류를 위한 참다운 삶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1965년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뒤, 미국 조지아주의 시골인 아메리쿠스의 변두리에 koinonia farm 이라는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1973년 아프리카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로 건너가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 집을 지어줬습니다. 이어 1976년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국제 해비타트를 창설해 개인 · 교회 · 기업 및 각종 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가난한 이웃을 도와 그들의 가정에 희망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 국제 해비타트 소개

- 1976년 설립 – 설립자 밀러드 풀러 부부
- 1984년 전 미국 대통령 지미카터(jimmy carter)부부가 뉴욕에서 해비타트에 자원봉사로 참가하기 시작 – jcwp(jimmy carter work project) 시작
- 1989년 미국 남부의 허리케인 휴고가 지나간 후 해비타트 주택이 건재하였다는 뉴스를 통하여 유명해짐
- 1993년 20,000번째 주택 건축
- 1994년 30,000번째 주택 건축
- 1999년 80,000번째 주택 건축
- 2000년 100,000번째 주택 건축
- 2001년 jcwp 한국에서 개최
- 2005년 200,000번째 주택건축 : 20여분에 한 채 꼴로 건축되고 있음. 현재 100 여개의 국가에 조직이 있음. 전 세계적으로 2,300 여개의 지회가 활동 중. 1,000,000 여명의 입주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함.

3. 한국 해비타트 소개

1976년 국제해비타트가 창설된 지 10년여가 지난 1980년도 후반 우연한 기회로 한국에서도 해비타트운동 탄생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원 원장이었던 대천덕 신부(R.A.Torrey) 가 그의 저서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에서 해비타트 운동을 소개했는데, 후에 해비타트의 실행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고왕인 박사가 이 글을 읽고 한국에서의 해비타트의 필요성을 느끼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1월에 과기처장관을 지낸 정근모 박사를 이사장으로 추대하여 정식기구로 발족했고,

〈 표1. 국내 건축 사업 〉

구분	의정부	태백	진주	서울	전남 동부	대구/ 경북	천안/ 아산	파주	군산	삼척	강릉	춘천	소계
1994	3												3
1995													
1996	4												4
1997	4	2											6
1998	4	6											10
1999	4	3	4	5									16
2000		5			32								37
2001	9	12	16			17	88	12	12				166
2002		8				12	16	4					40
2003			4	8		4			8	20	20		64
2004		6	8			8	16		4			8	50
2005		8		6		4	16			4		8	46
소 계	28	50	32	19	32	45	136	16	24	24	20	16	442

〈 표2. 국외 건축 사업 〉

구분	필리핀	남아공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스리랑카	미국	소 계
1994									
1995	5								5
1996	52								52
1997	27								27
1998	33								33
1999	13								13
2000	30								30
2001	16	10		2					28
2002	24		10						34
2003	21		13		7			3	44
2004	17		51		2				70
2005	31		23	1		1	2		58
소 계	269	10	97	3	9	1	2	3	394

1994년에 경기도 의정부에 첫 번째 한국해비타트 주택이 건축되었습니다.

1995년에 건교부 산하의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듬해인 1996년에는 필리핀에 5세대의 집을 지어 줌으로써 해외지원사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4. 사업실적 : 표1, 2 참조



5. 해비타트의 미션

전 세계의 해비타트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사명(Mission)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비타트는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입주가정들에게 집을 신축하거나 개조함으로써 입주가정들이 하나님이 의도한 안락한 집과 건전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6. 한국 해비타트의 비전

해비타트는 지역사회의 계층간의 화합과 공동체회복을 위한 운동입니다. 땀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동역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신도 모르게 해비타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공유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랑" 해비타트는 이렇듯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해비타트는 지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건축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해비타트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협력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신음하는 상황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해비타트의 사명이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가능한 많은 곳에 지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한 세대의 해비타트 주택에는 500여명의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 백명의 망치질이 커다란 건설장비의 역할을 해내듯, 해비타트는 한 사람의 많은 후원금보다는 작은 정성들이 모여 더 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경쟁에 익숙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사는 법을 알려주고 이웃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구성원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각계 각층에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다양한 분야의 건축공정을 경험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배우고, 입주가정과 기쁨을 함께 하면서 이상적인 사회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비타트 운동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가정을 새롭게 일으키고 계층간의 화합

과 나눔의 방법을 배워 나간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비타트 운동을 통해 축적된 이러한 역량들은 통일 이후 북한의 주택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7. 해비타트 12가지 원칙

해비타트의 목표는 주택을 건설, 열악한 주거환경과 집 없는 사람들을 지구상에서 없애고, 소박한 주택의 건설을 양심과 실제적인 문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들이 해비타트 사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1) 기독교 운동

해비타트는 기독교 운동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운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해비타트 운동은 인간의 정의감에 근거하거나, 인간의 동정심에 호소해서 유지되는 운동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해비타트운동이 여타의 사회 운동과 다른 점은 예수 운동(Jesus movement)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시편 127:1)" 해비타트는 초교파 평신도 기독교 운동으로, 특정 교회나 교파에 매이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의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국제적인 협력 운동

해외 워크캠프를 통해 자원봉사자 개인으로부터 각 지회는 물론 국가의 연합회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해비타트 조직들은 땀과 노하우 재원을 함께 합니다. 각 나라의 해비타트지회는 십일조를 통해 다른 지회를 돕습니다. 지회에서 모금한 자금의 적어도 10%를 다른 나라의 지회를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공동체 건설

해비타트 사역의 초점은 단순히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일원이 동역해서 서로의 물질적, 영적, 사회적 필요를 채우도록 지역사회의 전반적 개발을 꾀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의 자발적인 헌신과 지역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비타트의 주도권은 해당 지역의 지회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있습니다.

4) 다양성과 포용성

해비타트 지회는 해당 지역사회의 모든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함은 물론 경제 상황, 직업, 인종, 성, 연령, 교파 등을 초월해 뜻을 같이 하는 개인과 단체와 협력합니다.

5) 동역 관계

해비타트운동이 추구하는 바와 그 운동방법에 공감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힘을 모으는 모든 개인이나 집단은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지회, 이사, 위원회, 입주 가정, 교회, 기부자도

동역자이고, 연합회, N.G.O.(비정부 조직), 학생 동아리와 청년단체, 시민단체, 정부도 동역자이며, 간사와 자원봉사자도 서로 동역관계에 있습니다.

해비타트 운동에서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6) 청지기 정신

해비타트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성실하게 관리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젼과 사명을 감당합니다.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는 시간, 재능, 기술, 자금, 토지, 인맥, 자연자원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합회 및 지회의 자금과 모든 자산은 투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해비타트는 우리의 재원으로 보다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금, 자재, 노동력 등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7) 무이자 비영리로 주택 판매

해비타트 주택에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이 입주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할 수 있습니다.

8) 소박, 안락, 저렴한 집

'소박', '안락', '저렴'의 의미는 각국이나 각 지회에서 해당 지역의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국내에서는 전용면적 15평입니다. 해비타트는 건축비용을 더욱 낮추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양질의 주택건축방법을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9) 입주 가정은 가장 중요한 동역자

입주자 및 입주 신청자들은 해비타트의 동역자입니다. 해비타트는 단순히 입주자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와 함께 집을 짓습니다.

입주자가 주택 상황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해비타트가 돕는 것입니다.

10) 공평한 입주가정 선정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가정선정위원회는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입주신청자를 선정하되 종교, 출신지역,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첫째, 무주택 영세서민

둘째, 주택건설원가 분할 상환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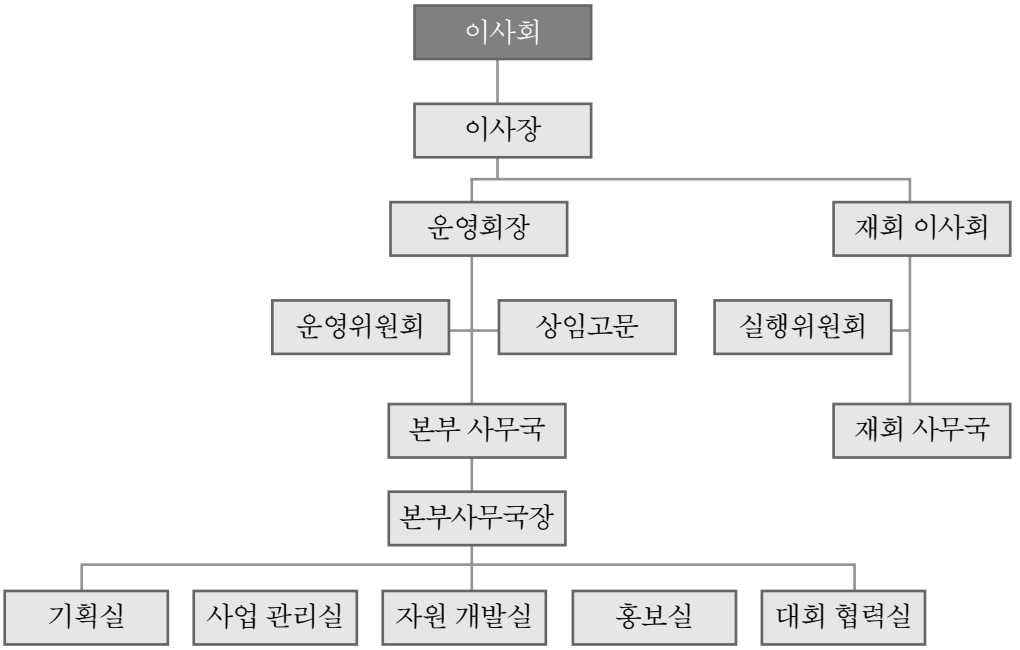
셋째, 500시간 이상 건축 현장에 동참 .

11) 땀의 분담

입주자는 자신의 집을 지을 때나 노동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을 '땀의 분담(Sweat Equity)'라고 부르는데, 건축비를 낮추고, 입주 가정이 자기 집이라는 의식과 집에 대한 긍지를 높일 뿐 아니라, 집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얻는데 도움을 줍니다. 입주자 상호간에, 입주자와 지회 조직간에 그리고 입주자와 자원봉사자 간에 유대와 나눔을 촉진합니다.

12) 회전 기금: 입주자의 상환금은 해비타트 회전기금으로 다른 후원금과 함께 다시 다른 사람의 집을 짓는데 쓰이게 됩니다.

8. 한국 해비타트의 조직



9. 주요 사업소개

가. Korea Blitz Build (한국번개건축)

한국번개건축은 사랑의 집짓기의 독특한 노하우를 살린 대규모 단기건축프로젝트로 2002년부터 매년 8월 초에 시작하여 일주일간 개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 휴가와 방학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주택건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 집고치기 프로그램

수도권내 노후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소년 · 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행복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직접 집을 수리하기 힘든 열악한 주거 환경의 이웃을 돕고,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과 땀으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이 사회에 희망을 주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다. Global Village (지구촌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을 세계 각국으로 파송하여, 사랑의 집짓기 나눔 운동을 펼치는 단기 주택 건축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는 약 10일간의 일정으로 집을 지으면서 현지 입주가정과 교류하게 됩니다. 지구촌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지회와 미래 입주가정과 함께 집을 건축하고 안락한 집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는 일을 함으로써, 문화적인 이해를 넓히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라. 자전거로 짓는 사랑의 집 (Cycling for Habitat)



1주일간 Cycling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해비타트 주택의 건축기금(1km당 1,000원을 모금하는 bike-e-thon형식)을 마련하고 해비타트 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한국의 대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여 실행하는 한국 해비타트의 대표적인 청년 프로그램입니다.

마. Building on Faith (믿음으로 짓는 집)

해비타트와 협력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써 무주택자를 위해 집을 짓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 여성의 집짓기 (Women Build)

해비타트 건축공정 과정 중 80%이상을 여성의 힘으로 진행하여 여성도 건축현장에서 주도적으로 망치질을 하고, 합판을 나르고, 골조를 세우며 보금자리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여성 주도 프로그램입니다. 패션쇼와 바자 등을 통해 모든 분야의 여성들이 다같이 어울려 한마음으로 모금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여성들의 행동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0. 후원방법

■ 주택 건축비 후원

- 1세대 주택 건축비
  : 7,000 만원 (토지구입비 및 건축비 원가)
- 기업의 수익금 일부 나누기
  (예: 수익금의 1%를 건축비로 후원)
- 집고치기 사업 후원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

– 직원들 스스로 해비타트 운동에 동참하는 동호회를 설립하여 자체 모금활동을 통한 후원

: Matching Grant
(예: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모금 + 모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서 매칭하여 후원)

■ 현물후원 (Gift-in-Kind)

– 해비타트 주택거축에 필요한 자재공급

– 숙련된 기술 및 용역제공

– 사무기기 지원 및 간식/음료 기타 소모품 후원

– 바자회 행사를 위한 물품후원

김 태 오 / 서울대 경영학과 4학년

한국 해비타트 지구촌프로그램 – 서울대 / 필리핀

봉사란 무엇일까? 대학에 들어온 이후 봉사라는 것을 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도 봉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다른 이웃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면서 생각한 봉사는 지금 현재 가진 것은 적지만 그 작은 것들을 다른 이웃들과 나누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사랑의 집짓기' 팀은 우리들이 가진 작은 힘을 필리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1월 9일부터 1월 18일까 10일간 일정으로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첫 날 우리는 필리핀 공항에 밤 12시에 도착했습니다. 열대 지방이라 공항을 빠져 나가자마자 더운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짐을 다 찾은 후 우리는 우리를 마중 나온 해비타트 관계자를 찾기 위해 조금 헤맨 후에 Zerman이라는 해비타트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닐라에서 2시간 거리인 따가이따이(tagaytay) 근처에 있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따가이따이에 있는 아마데오 커피(Amadeo coffee)마을에 갔습니다. 2 대의 지프니(Jeepney)에 나눠 타고 우리가 도착한 아마데오 커피마을은 상당히 구석진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7 가정이 입주해 살고 있었고 12 채의 집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도착하자마자 한 일은 정화조를 넣기 위한 구멍을 파고 집을 짓기 위한 벽돌을 만들고 건물 구멍 사이에 시멘트를 집어넣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의욕이 너무 앞서서인지 땅을 파기 위해 곡괭이질을 하면서 많은 남학생들이 손이 까지고 피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만은 밝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학생들은 힘든 노동을 잘 참아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은 아마데오 커피마을에 입주해 있거나 입주 예정인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팀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필리핀 사람들의 첫 인상은 너무나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을 위해 없는 살림에서도 맛있는 필리핀 전통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고 자신들이 아마데오 커피마을에 들어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의 집을 짓는 와중에 우리들은 필리핀의 한 공립학교를 방문해 필리핀 초등학생들과 즐거운 시간

을 보냈습니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 '풀하우스'에 나오는 곰 세 마리 율동과 한국 놀이 중 하나인 닭싸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간단한 한국말들을 가르쳐주며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의 교육환경은 한국보다 많이 열악했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필리핀 아이들을 보면서 아직 필리핀에 작은 희망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 마지막 날, 우리들은 아마데오 커피마을 사람들과 저녁을 함께 먹으며 그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준비한 공연을 보여주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특히 아마데오 커피마을에 사는 필리핀 아이들이 보여준 춤은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하게 지냈던 필리핀 꼬마 아이인 마빈(Marbin)과 춤도 추고 뽀뽀도 한 기억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날씨만큼이나 너무 따뜻한 정을 가진 필리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 마지막 날 밤에 잠들기 전에 흘렀던 한 줄기 눈물은 가진 것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흘리는 즐거움의 눈물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인구 8700만의 필리핀. 하지만 10% 이상인 약 1000만 명 정도가 집이 없어 우기를 어떻게 넘길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라. 비록 1000만 명에게 집을 다 지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작은 힘을 집 없는 필리핀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10일 간의 봉사가 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물방울이 큰 바위를 뚫듯이 우리들의 작은 노력도 그런 기적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필리핀에서 우리들의 봉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봉사에 대한 열정은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크게 자랐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최 별 님 / 덕성여대 사회봉사단 해비타트 동아리 준비팀 리더

한국 해비타트 지구촌프로그램 – 덕성여대 / 몽골

집을 짓다 = 희망을 짓다.
"여기 우리 희망 이야기"

작년과 동일하게 우리 덕성여대는 단일팀으로 구성되어 사랑의 집짓기 글로벌 빌리지를 참가했다. 우리들 마음처럼이나 유난히 뜨거웠던 2005년 여름, 푸른 대 자연 아래 겸손히 자라나는 들꽃처럼 우리도 참된 봉사와 섬김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힐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집짓는 설레임과 동시에 몽골에 도착 했을 때의 시원한 하늘은 우리의 2주의 일정을 짐작케 했고 더더욱 기대케 했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이었다.

익숙치 않은 맑은 공기, 늦은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는 해는 그야말로 몽골 여름날의 매력으로 기억된다.

나를 비롯한 열 한명의 수호천사들, 그리고 총장님, 교수님, 지도 선생님... 이렇게 풍성한 출발 가운데 리더의 자리에서 느꼈던 마음은 든든함과 뿌듯함 이었다. 서로가 한마음이 되어 작은 손을 맞잡고 이곳에 희망을 짓는다는 그 사실이 내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겐 큰 도전과 용기였다.

우리의 작업현장에는 해비타트가 지은 수많은 집들이 있었다. 저 집들은 과연 어떻게 지어졌을까 라는 의문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과연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부담이 밀려왔다. 처음 일터로 왔을 때 마음을 비운 채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야지 하며 우리는 거듭되는 의문을 뒤로한 채 작업을 시작해야 했었다.

처음엔 현지 스텝들과 함께 일하며 의사소통이 마음처럼 제대로 되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금세 친해져 일을 진행 하는데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다. 역시나 사람의 마음, 진실한 마음은 그 높은 장벽도 넘어 설 수 있다는 말이 맞았다. 행여 우리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조심히 보살펴 주시며 염려해 주시던 그 분들의 마음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실은 집을 짓는 것 보다 그분들과 함께 일한다는 그 자체가 좋

아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게 아니었을까....

우리가 자주 해보지 않던 일을 하느라 몸은 고되었지만, 하루 이틀 지나니 우리들 모두가 주인 되어 열심히 희망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던 것 같다. 만약 지금 또 해 볼 수 있냐고 물으면, 조금 망설여질 정도로 열심이었다. 시멘트와 모래, 자갈 그리고 물을 잘 혼합하여 콘크리트를 만들고 우리가 인간 레미콘이 되어 뿌려질 곳에 차곡차곡 붓기도 하고.... 하루가 지나고, 어제 우리가 부은 콘크리트는 하루 새 잘 굳혀지고...시간이 가면 갈수록 견고한 기초가 쌓이고 그 위에 우리의 땀의 대가인 희망이 세워지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해비타트는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의 노동이 직접 기계의 역할이 되어 그야말로 사랑의 집, 희망의 집, 손수 지은 집으로 일 단락 된다고 알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짓는 것이었다.

바로 생각을 뒤바꾸며 희망을 짓는 일에 동참 한다 생각해 보니 너무나 가슴 벅차 올랐다.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에도 몽골의 이곳저곳 문화들을 살피며 몽골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한때는 세계를 호령했고 한때는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나라 몽골. 지금은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후를 기대해 볼만한 나라이다.

함께한 날들 동안 우리 멤버들 간의 끈끈한 우정이 쌓여 종종 만나면 여전히 몽골에서 있었던 많은 추억들을 되새김 하곤 한다. 비록 함께 있진 않지만 몽골 그 땅에서 묵묵히 희망 짓기를 하고 계시는 몽골 해비타트 스텝들, 한 분 한분 모두가 우리의 동역자로서 참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국제개발협력동향 2006년 제1호

발 행	2006년 4월
편집 ·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전 화	(02)740-5114
팩 스	(02)744-1092
홈 페 이 지	www.koica.go.kr
인 쇄	마스터-원 TEL.(02)2272-5002(代)